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연구

2022. 12.



대한교통학회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제 출 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사)대한교통학회

과업 참여진

■■■■■ (사)대한교통학회

책임연구원 김응철 교수

연구원 이상훈 연구원

연구원 이연형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한솔 연구원

제1장 연구의 개요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1 연구의 배경	2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2.1 연구의 범위	3
2.2 연구의 방법	4
3. 기대효과	5
4. 연구 추진 일정 및 업무 분장	6
제2장 교통영향평가 일반 현황 검토	10
1. 교통영향평가 일반 연혁·제도 변천 등 일반 사항	10
2.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령, 대상 사업 인·허가 법령 관계	14
3.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 및 수립 범위 기준	15
4. 관련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전반적인 사항	17
5. 국내·외 교통영향평가 시행 현황 비교	20
5.1 국내 교통영향평가 일반 현황	20
5.2 미국 교통영향평가 일반 현황	20
5.3 일본 교통영향평가 일반 현황	20
제3장 교통영향평가 운영실태 분석	24
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운영실태	24
1.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 분석	24

1.2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28
2.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운영실태	29
3. 교통영향평가 운영 관련 의견 수렴	30
3.1 의견 수렴 대상	30
3.2 주요 의견수렴 항목	30
3.3 주요 의견수렴 내용	30

제4장 |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연구 36

1.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개선 개요	36
2. 현행 법령 기준 검토	41
2.1 개발사업 기준	41
2.2 건축물 기준	42
3.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조사·비교	43
3.1 서울특별시	43
3.2 부산광역시	46
3.3 대전광역시	48
3.4 울산광역시	51
3.5 제주특별자치도	53
3.6 경기도	57
4.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사업 규모 조정 내용 분석	62
4.1 개발사업 기준	62
4.2 건축물 기준	64
5.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수립	66
5.1 개발사업 기준	66
5.2 건축물 기준	68
5.3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조정 시, 교통영향평가 건수 변화 예측	74

제5장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80

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작성 개요 80
2.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검토 80
 - 2.1 서울특별시 81
 - 2.2 부산광역시 84
 - 2.3 대전광역시 85
 - 2.4 울산광역시 86
 - 2.5 제주특별자치도 87
 - 2.6 경기도 91
3.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93

제6장 | 주요 건축물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연구 98

1.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연구 개요 98
2. 공동주택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98
 - 2.1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수립 98
 - 2.2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수립 115
 - 2.3 공동주택 자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 수립 127
3. 지식산업센터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135
 - 3.1 지식산업센터 교통 현황 분석 135
 - 3.2 지식산업센터 교통개선대책 사례 검토 137
 - 3.3 인천광역시 지식산업센터 교통개선대책 140
4. 집배송시설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142
 - 4.1 집배송시설 교통 현황 분석 142
 - 4.2 집배송시설 교통개선대책 사례 검토 142
 - 4.3 인천광역시 집배송시설 교통개선대책 144

제7장 교통영향평가 운영 개선방안	148
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운영 현황	148
1.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148
1.2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151
1.3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52
1.4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실적	152
2.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운영 현황	154
2.1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154
2.2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56
2.3 전국 7대 도시 본청 및 자치구(군)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57
3.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운영 개선방안	158
3.1 교통영향평가 행정 인력 정비	158
3.2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표준 매뉴얼 작성	158
3.3 교통성 검토의 활용	159
3.4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61
3.5 이행확인평가 용역의 역할 제고	163
3.6 준공 후 시설 개선 예산 확보	163
3.7 교통영향평가 관련 정보 관리 방안	164
3.6 인센티브 제도 운영	166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76
참 고 문 헌	182

TABLES 표차례

[표 1] 예정 공정표	6
[표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계획	7
[표 3] 교통영향평가의 변천 과정	12
[표 4]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	14
[표 5]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	15
[표 6]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범위 기준	16
[표 7] 교통영향평가 지침 조항	17
[표 8] 교통영향평가 지침 내용 항목	18
[표 9] 인천광역시 연도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 종합(2011년~2020년)	25
[표 10] 인천광역시 심의기관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26
[표 11] 인천광역시 개발사업 종류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26
[표 12] 인천광역시 건축물 종류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27
[표 13] 인천광역시 심의위원회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27
[표 14]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실태(2021년 기준)	29
[표 15]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31
[표 16]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변화(2009년 이후)	36
[표 17] 지자체별 교통혼잡비용 및 자동차등록대수	37
[표 18] 인천광역시 창고시설 침두시 유발교통량 100대 기준 면적	38
[표 19] OECD 국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비교(2018년)	40
[표 20] 현행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개발사업)	41
[표 21] 현행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42
[표 22]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개발사업)	43
[표 23]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45
[표 24]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개발사업)	46
[표 25]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47
[표 26]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개발사업) ...	49
[표 27]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	50
[표 28]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개발사업) ...	51

[표 29]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	52
[표 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	53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대상 사업 기준(개발사업) ···	54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	56
[표 33]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개발사업) ···	57
[표 34]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권역 ·····	59
[표 35]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	60
[표 36]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내용 분석(개발사업) ·····	62
[표 37]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내용 분석(건축물)(1) ·····	64
[표 38]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내용 분석(건축물)(2) ·····	65
[표 39] 인천광역시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안) ·····	66
[표 40] 타 시·도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검토 ·····	68
[표 41] 지자체별 주요 건축물 용도별 주차수요원단위 분석 결과 ·····	70
[표 42] 인천광역시 주요 건축물 용도별 주차수요원단위 분석 결과 ·····	71
[표 43] 지자체별 공동주택(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	72
[표 44] 인천광역시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안) ·····	73
[표 45]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조정 시, 교통영향평가 건수 변화 예측(개발사업) ·	74
[표 46]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조정 시, 교통영향평가 건수 변화 예측(건축물) ···	76
[표 47]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	80
[표 48] 지자체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	81
[표 49] 지자체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	84
[표 50] 지자체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	85
[표 51] 지자체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	86
[표 52] 지자체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	87
[표 53] 지자체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경기도) ·····	91
[표 54]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	94
[표 55]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기준 ·····	99
[표 56]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	100
[표 5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	100
[표 58]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	101

[표 59]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102
[표 60] 지자체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검토 결과	102
[표 6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허가년도별 세대당 주차대수(연면적 6만㎡ 이상)	103
[표 62] 인천광역시 신도시/구도심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연면적 6만㎡ 이상)	104
[표 63] 인천광역시 아파트·오피스텔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	105
[표 64] 인천광역시 신도시, 구도심 강화·옹진 지역의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106
[표 65] 인천광역시 아파트 가구수, 가구원 수, 가구당 주거면적(2017년~2021년)	106
[표 66] 인천광역시 오피스텔 가구수, 가구원 수, 가구당 주거면적(2017년~2021년)	106
[표 67] 인천광역시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2017년~2021년)	107
[표 68] 인천광역시 아파트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107
[표 69] 인천광역시 오피스텔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107
[표 70] 인천광역시 신도시·구도심·강화·옹진 가구원수별 가구수 및 가구당 평균가구원수(2020년)	108
[표 71] 인천광역시 시군구별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2017년~2021년)	110
[표 72]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110
[표 73] 인천광역시 영종국제도시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111
[표 74]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111
[표 75] 인천광역시 동구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111
[표 76] 인천광역시 중구(용유, 운서, 영종동 제외)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112
[표 77] 인천광역시 강화군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112
[표 78] 인천광역시 옹진군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112
[표 79] 인천광역시 세대당 전용면적 및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연평균)	113
[표 80] 인천광역시 연평균 신도시, 구도심, 강화·옹진 지역의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 (2017년~2021년, 연평균)	113
[표 8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 지역 비구분(안)	114
[표 8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 지역 구분(안)	114
[표 83]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법적 설치 기준(1)	115
[표 84]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법적 설치 기준(2)	116
[표 85]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117
[표 86]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119
[표 87]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120

[표 88]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122
[표 89] 지자체별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검토 결과	123
[표 90]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현황(2018년~2022년)	124
[표 9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량, 증가율 및 전체 중 비율	125
[표 92] 인천광역시 장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비율 예측(2022년~2027년)	125
[표 9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안)	127
[표 9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자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	127
[표 9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자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	128
[표 96] 시·도별 자전거 보유 대수 현황(2016년)	129
[표 97] 시·도별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2021년)	130
[표 98] 시·군·구별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2021년)	131
[표 99] 현재 지식산업센터 교통영향평가 시행 기준	135
[표 100] 지식산업센터의 발생교통량 및 첨두시 발생교통량 100대 기준 연면적	135
[표 101] 지식산업센터의 법정 대비 주차 수요 비율 및 계획 비율	136
[표 102]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설치 기준	137
[표 103]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설치 기준	138
[표 104]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설치 기준	138
[표 105]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교통영향평가 시행 기준	139
[표 106]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140
[표 107] 인천광역시 지식산업센터 교통개선대책 수립(안)	141
[표 10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창고시설 주차장 설치 기준	142
[표 109] 인천광역시 집배송시설 교통유발원단위	142
[표 110] 타 지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창고시설 주차장 설치 기준 검토 결과	143
[표 111] 인천광역시 집배송시설 교통개선대책 수립(안)	144
[표 112]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148
[표 113]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실태(2021년 기준)	156
[표 114] 전국 7대 도시 분청 및 자치구(군)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57
[표 115]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조정 시, 교통영향평가 건수 변화 예측	158
[표 11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표준 매뉴얼 구성	159
[표 117] 용인시 교통성 검토 기준	159

[표 118] 하남시 건축공사장 교통처리계획 사전협의제 추진계획	161
[표 119]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	165
[표 120]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사례 1(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167	
[표 121]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사례 2(송도랜드마크시티 지구단위계획)	168
[표 122]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사례 3(시가지 조성단지 지구단위계획)	169
[표 123]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사례 4(지식정보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170
[표 124]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사례 5(첨단산업클러스터(B) 지구단위계획)	171
[표 125]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사례 6(첨단산업클러스터(C) 지구단위계획)	173

[그림 1] 연구의 공간적 · 시간적 범위	3
[그림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3
[그림 3] 연구 수행 절차	4
[그림 4] 기대효과	5
[그림 5]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4요소	10
[그림 6] 교통영향평가 제도 시행 목적	11
[그림 7]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13
[그림 8] 교통영향평가 수행과정	19
[그림 9]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 종합(2011년~2020년)	24
[그림 10] 인천광역시 심의기관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25
[그림 1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28
[그림 12] 교통혼잡비용(전국 기준)	36
[그림 13] 자동차등록대수 변화(인천광역시 기준)	37
[그림 14] 인천광역시 교통사고 발생건수 추이(2012년~2021년)	38
[그림 15] 인천광역시 교통사고 부상자수 추이(2012년~2021년)	39
[그림 16] 인천광역시 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수 추이(2012년~2021년)	39
[그림 17] 인천광역시 전체 부상자 중 65세 이상 부상자 비율 추이(2012년~2021년)	39
[그림 18] 교통혼잡비용(전국 기준)	40
[그림 19]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허가년도별 세대당 주차대수 변화 추이(연면적 6만㎡ 이상)	103
[그림 20] 인천광역시 신도시/구도심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연면적 6만㎡ 이상)	104
[그림 21] 인천광역시 장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비율 예측(2022년~2027년)	126
[그림 22]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151
[그림 23] 인천광역시 개발사업 및 건축물 종류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152
[그림 24] 인천광역시 심의기관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153
[그림 25] 인천광역시 심의위원회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153
[그림 2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154
[그림 27]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155
[그림 28] 고양시 교통영향평가 사후 모니터링 절차	164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기대효과

제1장 |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도시교통여건, 건축물 유형 변화, 도시변화를 고려한 평가기준 재정립 필요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제도 시행(1986년) 이후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도시 및 도시교통여건의 변화와 다양한 유형의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건축물 유형의 변화 및 인천광역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최소 면적 기준 조정이 필요함
-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시설) 연구 필요
 -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최신 교통여건 등의 변화로 준공 이후 교통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 사례가 발생함
 - 주요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의 교통개선대책 수립 실태 조사 및 실제 건축물 통행 특성 분석을 통한 교통개선대책 수립 연구가 필요함
- 시, 경제청, 각 구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표준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 승인관청(시, 경제청, 구청)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기관별 여건에 따라 운영 중임
 - 위원회 운영에 대한 대시민 행정 신뢰도 향상 도모를 위해, 위원회 운영규정 및 표준 심의 매뉴얼 제정이 필요함

1.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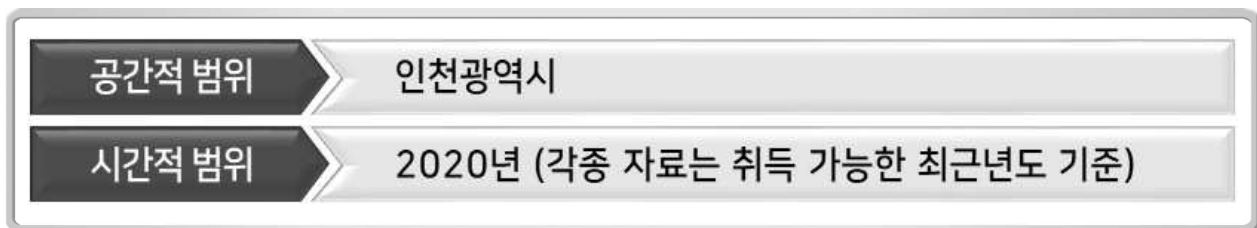
- 교통영향평가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운영세칙 개정(안) 작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2.1.1 공간적·시간적 범위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을 시간적 범위로 하여 각종 자료는 취득 가능한 최근 년도 기준으로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함



[그림 1] 연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2.1.2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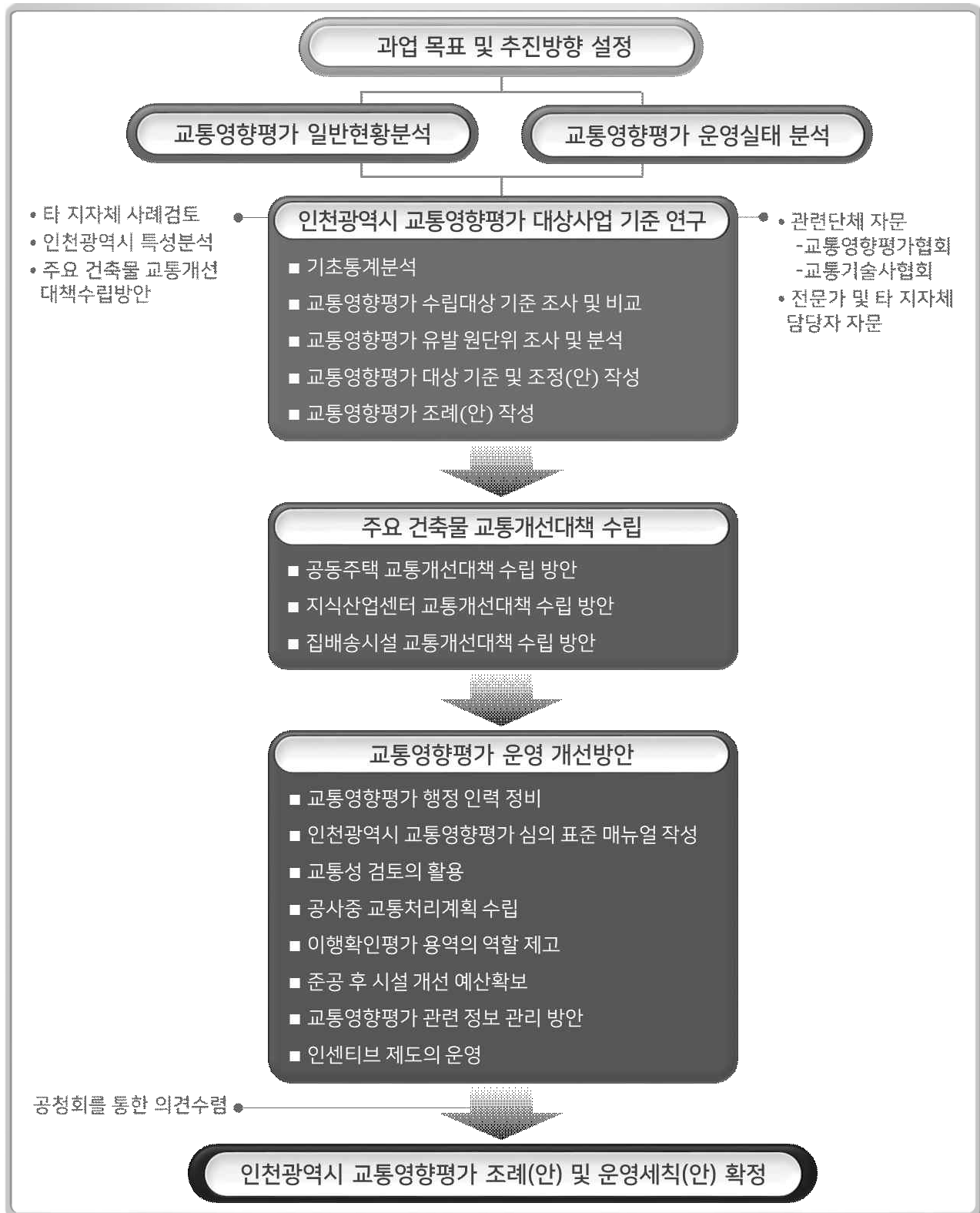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2.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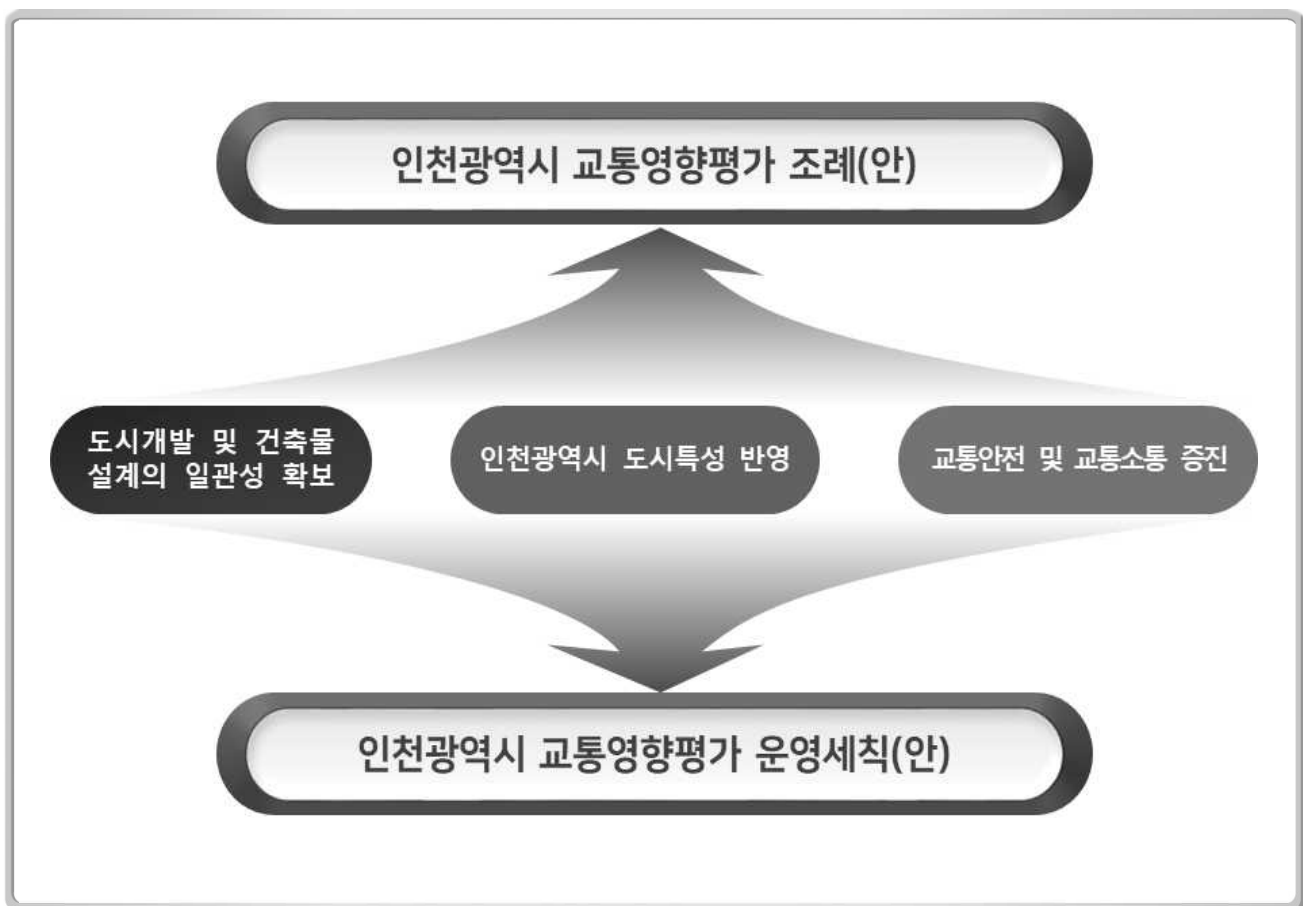
○ 본 용역의 연구 수행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그림 3] 연구 수행 절차

3.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의 도시 특성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수립함
 - 미래 도시개발사업 및 시설물 설계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함
 - 교통 안전을 증진시키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함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통영향평가 운영세칙(안) 수립을 통해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함



[그림 4] 기대효과

4. 연구 추진 일정 및 업무 분장

○ 연구 용역의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음

[표 1] 예정 공정표

구 분	추진 일정 (8 개 월)							
	m1	m2	m3	m4	m5	m6	m7	m8
• 교통영향평가 일반현황 조사	■							
• 인천광역시 및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운영실태 조사	■	■	■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연구			■	■	■	■	■	
•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연구				■	■	■	■	■
• 교통영향평가 운영개선방안 연구					■	■	■	■
• 공청회 및 의견수렴						의견수렴		공청회
• 보고회	착수				중간 (사전)		중간	최종
• 성과품 작성	착수 작성	작성 보고서			중간 보고서 작성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착수보고서(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세부용역계획, 추진일정표, 수행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착수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회(착수 후 30일 이내)
 - 용역 착수에 따른 착수보고회 개최
- 수시보고 및 중간보고회(별도 지정일)
 - 용역 추진 상황 보고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보고
 - 용역 수행에 따른 중간보고회 개최
 - 중간보고회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계획 수립 별도 제출
- 최종보고회(별도 지정일)
 - 과업지시서에 따른 최종성과품 제출 및 내용 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의견수렴 결과 및 조치 계획 포함

[표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계획

종 류		일 정	형 태	수 량
보고 자료	착수보고	착수 후 30일 이내	PPT, 유인물	30부
	중간보고	착수 후 5개월 이내		30부
	최종보고	별도 지정일		30부
최종보고서		과업 종료 시	한글, PDF, 유인물	50부
전산자료		과업 종료 시	보고서, 보고회, 도면, 집계, 분석자료 등 모든 자료를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출	10set

주: 성과품의 원고 작성 후 편집, 인쇄 방법 등을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함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전산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함

제 2 장

교통영향평가 일반 현황 검토

1. 교통영향평가 일반 연혁·제도 변천 등 일반 사항
2.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령, 대상 사업 인·허가 법령 관계
3.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 사업 및 수립 범위 기준
4. 관련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전반적인 사항
5. 국내·외 교통영향평가 시행 현황 비교

제2장 | 교통영향평가 일반 현황 검토

1. 교통영향평가 일반 연혁·제도 변천 등 일반 사항

-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임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시행
 - 수립대행자에 의해 마련된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내용이 심의를 통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의결된 교통개선안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으로써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짐
 - 제도 시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적이고 심도 높은 교통대책 강구를 통해 공익성과 사회적 편익을 향상하는 데에 있음



[그림 5]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4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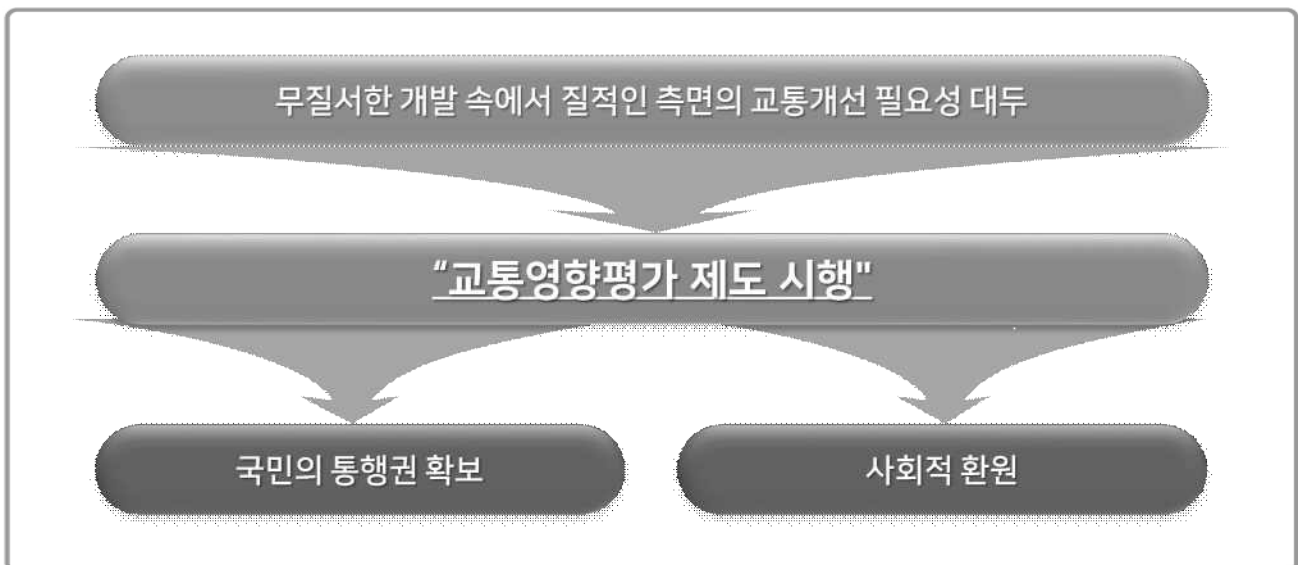
- 교통영향평가 제도 시행 배경
 - (개발에 따른 문제점 발생) 급격한 경제 발전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계획 및 건설사업에 따라 교통문제 양산
 - (비용 손실 발생) 무질서한 도시 규모 확장, 인구의 과도한 집중, 도심지 교통

대란 등에 따라 막대한 혼잡비용 손실 발생

- (질적 측면의 개선 필요) 성장 위주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민 생활 질적 개선 필요성 대두
- (교통 문제의 근본적 해결)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의 효율성 확보 및 가시적인 교통 개선 효과 제시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

○ 교통영향평가 제도 시행 목적

- 과거 무질서한 개발과 교통수요의 급증 속에서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질적인 측면에서의 교통개선의 필요성이 사회·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현재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등장함
- 이에 따라 최소한의 국민의 통행권 확보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게 됨



[그림 6] 교통영향평가 제도 시행 목적

○ 교통영향평가 제도 시행 효과

- 보행자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로 교통사고 감소
- 부지 내부 교통시설 및 동선체계 조정으로 안전성 제고
- 주차 규모 및 주차 동선 개선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확보
- 첨두시 이용교통량을 고려한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개선으로 교통 혼잡 완화
-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 교통시설 투자 효과

○ 교통영향평가 제도 연혁

- 1970년대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도로의 무계획적 확장은 도시교통문제를 야기시켰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86년 12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제정으로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됨
- 시행초기에는 서울특별시 등 5대 도시에서만 시행되었으나,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인구 30만 이상 도시, 인구 10만 이상 도시 등으로 확대됨
- 1996년부터 국가의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됨
- 1986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처음 법제화되었고, 1999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다가, 2009년 다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표 3] 교통영향평가의 변천 과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 제정 (1986.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법률 제3991호)
	1차 개정 (1990.01)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990.1 까지는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대전권만 실시)
	2차 개정 (1992.12)	평가기관의 관리를 위한 등록제 시행 평가대상지역의 확대(인구 30만 명 이상→10만 명 이상 도시)
	3차 개정 (1995.12)	평가대상 규모조정, 지역 확대 및 평가지침 마련
	4차 개정 (1996.06)	도시교통정비촉진지구 외 사업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5차 개정 (1999.03)	평가책임자, 평가보조자 자격 완화 등
환경·교통·재 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6차 개정 (2000.1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12.31.) 법률 제 6095호)에 따라 시행 - 승인 기관장의 평가서 접수 등 평가절차 개선 - 대규모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제도 도입 -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외 구분없이 평가대상 규모 단일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7차 개정 (2009.0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9071호, 2008.3.28. 일부개정) - 제2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신설
	8차 개정 (2013.03)	타법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9차 개정 (2013.0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1801호, 2013.5.22., 일부개정) - 특별자치시(세종시) 포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자 등록 불가 기준 개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 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대표인 법인)
	10차 개정(2014.07)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에 관한 사항 -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함
	11차 개정(2016.0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개정
	12차 개정(2018.02)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시 건축위원회가 아닌 교통영향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 - 교통수요를 많이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교통분야 심의를 우선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 및 건축물(대통령령)
	13차 개정(2021.03)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제도 도입 및 교통영향평 가정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 교통영향평가는 승인(인·허가 등)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실시되며, 건축물의 경우 일부 승인관청 소속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됨
- 심의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이 5단계로 진행되며, 소요 기간은 약 120일임



[그림 7]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2.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령, 대상 사업 인·허가 법령 관계

- 교통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장 교통영향평가 제 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에서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까지의 법령에 따라 수행되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 있음

[표 4]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

구 분	내 용	비 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달성하고자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목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 목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교통영향평가 지침	교통영향평가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제시함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조 목적
교통영향평가 심의 표준 매뉴얼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 향상을 목적으로 함”	교통영향평가 심의 표준 매뉴얼 작성목적

-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수립대행자가 보고서를 작성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로 이루어짐
- 또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별시설물의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공동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며, 그 외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함

3.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 및 수립 범위 기준

-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은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구분되며, 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11개의 대분류 개발사업과 32개의 세부 사업으로, 건축물의 경우 20개의 주 용도와 32개의 세부 용도로 구성되어 있음

[표 5]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

구 분		주요 대상 사업 및 세부 용도
개발사업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유통업 무설비, 공원, 유원지),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혁신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재생사업, 특구개발사업
	에너지개발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항만	항만의 건설(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외)
	도로	도로의 건설
	철도건설	철도의 건설(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공항건설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관광단지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온천의 개발사업
	특정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평택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체육시설설치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경마장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다일용도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예식장, 전시장, 동·식물원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도매시장, 상점,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펍센터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병원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위락시설	주점영업, 단란주점,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그 밖의 유사한 것. 투전기 업소,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공장	-
	창고시설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 (건설기계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매매장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전조장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장례식장	장례식장

- 수립대상 사업의 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제2제3항 및 제13조의 제3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음
- 현행법상 단일용도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기준 규모는 “시설용도별 교통유발량 100대/시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 기준 면적을 규정하고 있음

[표 6]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범위 기준

개발사업		단일용도 건축물(도시교통정비지역)	
용도	기준규모	용도	기준규모
도시개발	10만㎡	공동주택(아파트)	60,000㎡
주거환경정비	5만㎡	제1종 의원	25,000㎡
도시 계획 시설	도로	제1종 근린 기타	12,000㎡
	유통업무	제2종 근린	15,000㎡
	공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15,000㎡
	유원지	예식장	3,000㎡
대지조성	10만㎡	전시장	15,000㎡
택지개발	10만㎡	동·식물원	20,000㎡
물류단지	5만㎡	종교시설(종교집회장)	15,000㎡
물류터미널	2만5천㎡	도매시장	13,000㎡
도시·군관리계획	10만㎡	상점	11,000㎡
혁신도시개발	10만㎡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6,000㎡
역세권개발	25만㎡	운수시설	11,000㎡
산업단지	20만㎡	의료시설	25,000㎡
특구개발(연구개발)	20만㎡	대학, 대학교	100,000㎡
전원개발	300만㎡	연구소, 교육원	37,000㎡
항만	150만톤	운동시설	10,000㎡
도로	5.0km	공공업무	7,000㎡
철도	정거장1개, 5.0km	일반업무	25,000㎡
도시철도	정거장1개, 3.0km	숙박시설	40,000㎡
공항	30만명	주점, 단란주점	11,000㎡
관광지, 관광단지	50만㎡	카지노, 무도장	6,000㎡
온천개발	10만㎡	공장	75,000㎡
지역개발	10만㎡	창고	55,000㎡
평택시개발사업	10만㎡	하역장	55,000㎡
신행정수도	10만㎡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13,000㎡
기업도시개발	10만㎡	매매장	25,000㎡
용산공원	10만㎡	방송통신	43,000㎡
체육시설(골프장27홀이상)	15만㎡	묘지	12,000㎡
경륜 또는 경정시설	15만㎡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10,000㎡
경마장	15만㎡	휴게소	30,000㎡
민간투자시설	해당사업규모	장례식장	6,000㎡

4. 관련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전반적인 사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만들어 고시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총칙,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등,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 보칙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7] 교통영향평가 지침 조항

구분	조항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제4조(보고서의 작성기준) 제5조(교통영향평가 시간적·공간적 범위) 제6조(공간적·내용적 범위 설정 시 유의사항) 제7조(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제8조(토지이용현황·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제9조(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제10조(교통영향평가 지표) 제11조(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제12조(교통유발 원단위) 제13조(교통수단 분담률) 제14조(첨두일 및 첨두시) 제15조(주차수요예측) 제16조(서비스수준 분석 및 승용차 환산계수) 제17조(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 제19조(교통개선대책 종합 및 개선효과 분석) 제20조(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수립) 제21조(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제22조(참고자료의 정리 및 수록) 제23조(약식 교통영향평가) 제24조(보고서의 규격 등)	제18조 삭제
제3장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등	제25조(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제26조(보고서 집중관리) 제27조(보고서 심의 및 심의내용 통보)	
제4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	제28조(변경심의 대상)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제30조(변경심의 보고서의 작성 등)	
제5장 보칙	제31조(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제32조(보고서의 공정성 확보방안) 제33조(DB시스템 등록 등) 제34조(사후변경 수리 기준) 제35조(재검토기한)	

자료 : 국토교통부(2021), 「교통영향평가 지침」.

-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은 지침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서론, 교통환경조사 분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교통개선대책안의 시행계획, 참고자료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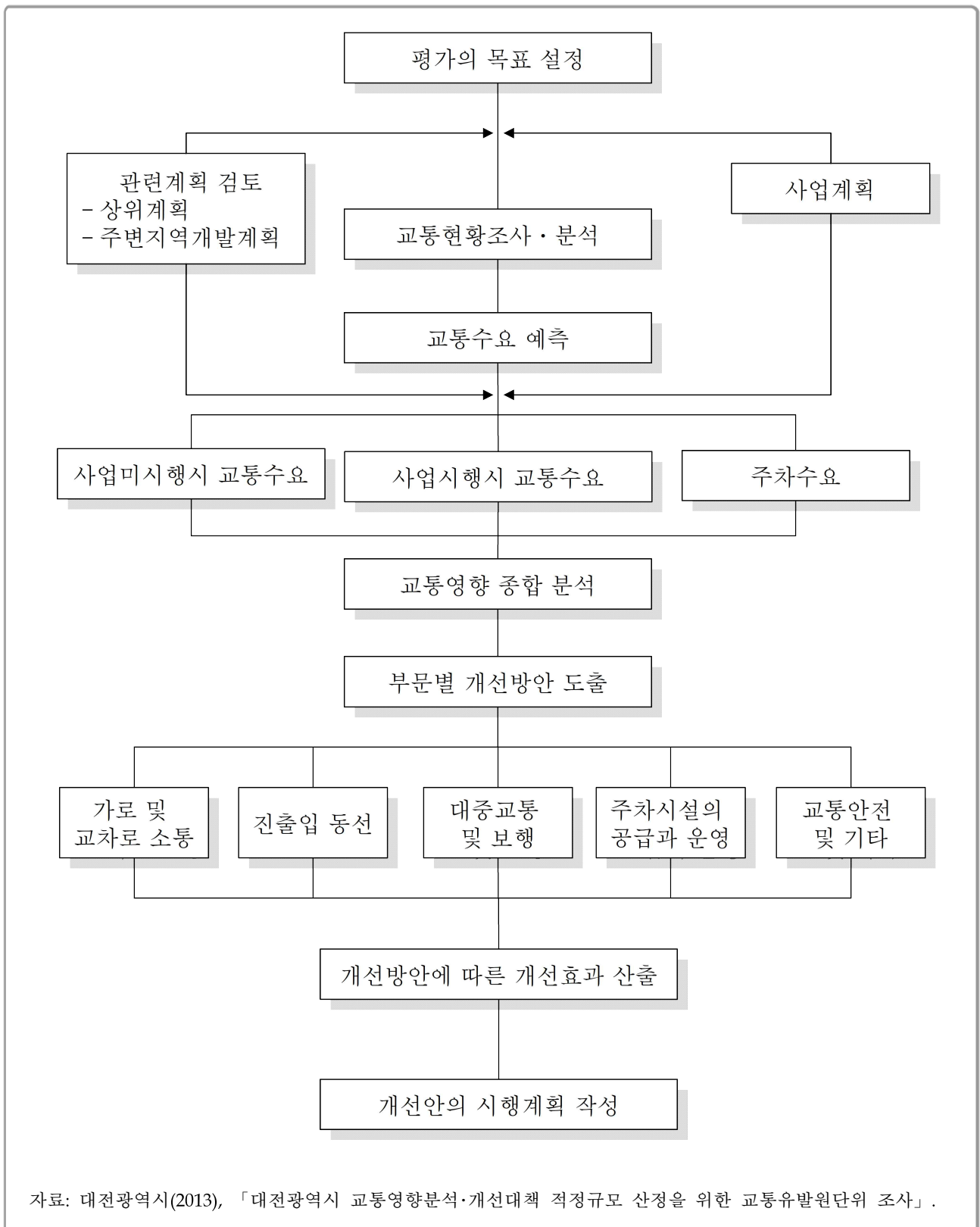
[표 8] 교통영향평가 지침 내용 항목

장	내용	비고
1. 서론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 다. 교통영향평가 범위(시간적·공간적 범위 및 중점분석 항목) 라. 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 (1) 중점분석 항목별 분석결과 (2) 교통영향분석 및 문제점 (3) 종합개선안	
2. 교통환경조사 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나. 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 계획 다. 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 계획	
3.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가. 사업 미시행 시 수요예측 나. 사업시행 시 수요예측 다. 주차수요예측	
4.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건축물, 일반 개발사업, 도로사업, 철도 건설사업으로 구분	사업별로 구분
5. 교통개선대책안의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6. 참고자료	가. 교통량 조사자료 나. 원단위 조사자료 다. 기타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자료 : 국토교통부(2021), 「교통영향평가 지침」.

-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1997년에 제정되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되어 왔음
- 최근까지 14번의 개정이 추진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1년 4월 13일에 이루어졌음

○ 교통영향평가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 8] 교통영향평가 수행과정

5. 국내·외 교통영향평가 시행 현황 비교

5.1 국내 교통영향평가 일반 현황

- 국내에서는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과 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관련된 각종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함
-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은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구분되며, 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11개의 대분류 개발사업과 32개의 세부 사업으로, 건축물의 경우 20개의 주 용도와 32개의 세부 용도로 구성되어 있음

5.2 미국 교통영향평가 일반 현황

- 미국의 경우 토지이용의 변경 및 교통유발시설물의 신설 등으로 인해 도로 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처리 및 운영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함
- 각 주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입법 여부·평가의 법적 근거·대상 범위·대상 내용 등이 주에 따라 상이함. 이에 미국교통기술자협회 (ITE : Institute of Transportation Engineers)에서 자체 연구를 통해 ‘지역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연구 보고서’를 출간하였으며, 이는 미국 평가서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5.3 일본 교통영향평가 일반 현황

- 일본의 경우 국내와 같은 교통영향평가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과다한 교통량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교통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적절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영향분석은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사전 교통처리대책 및 교통운영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유발로 인한 교통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도심부에 교통유발시설물 설치 시, 도시계획적 제도 및 주차장법 등에 의거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함

제 3 장

교통영향평가 운영실태 분석

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운영실태
2.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운영실태
3. 교통영향평가 운영 관련 의견 수렴

제3장 | 교통영향평가 운영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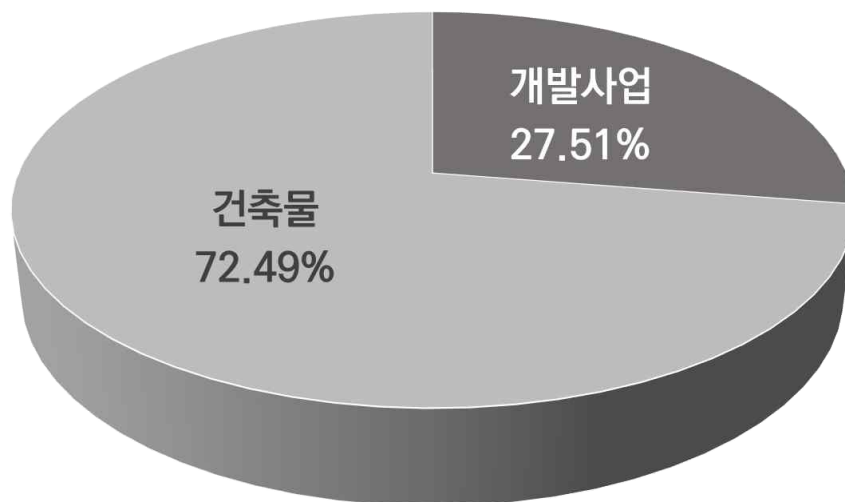
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운영실태

- 향후 발전적인 교통영향평가 운영 방안 제시를 위해 인천광역시의 교통영향평가 운영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심의실적 및 심의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음

1.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 분석

-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시행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실적 검토 결과, 2011년 이후 10년간 총 698건, 연평균 약 70건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이후 10년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 중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는 192건으로 약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는 506건으로 약 72.5%를 차지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 종합(2011년~2020년)



주* : 심의실적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시·구 건축위원회(교통 통합심의) 포함
주** : 2015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심의자료 누락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그림 9]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 종합(2011년~2020년)

[표 9] 인천광역시 연도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 종합(2011년~2020년)

구분	개발사업	건축물	계	비고
2011년	25	30	55	
2012년	24	68	92	
2013년	16	48	64	
2014년	24	44	68	
2015년	10	12	22	
2016년	20	69	89	
2017년	20	54	74	
2018년	20	65	85	
2019년	21	58	79	
2020년	12	58	70	
계	192	506	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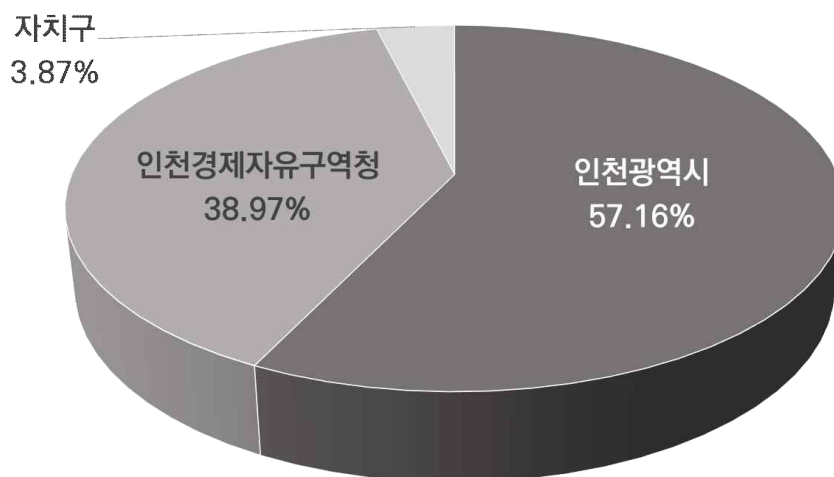
주* : 심의실적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시·구 건축위원회(교통 통합심의) 포함

주** : 2015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심의자료 누락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 2011년 이후 10년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 중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에
서 심의된 교통영향평가는 426건으로 약 6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경제
자유구역청에서 심의된 교통영향평가는 272건으로 약 39.0%를 차지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심의기관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 (2011년~2020년)



주 : 2015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심의자료 누락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그림 10] 인천광역시 심의기관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표 10] 인천광역시 심의기관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구분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치구	계
2011년	32	20	3	55
2012년	50	40	2	92
2013년	40	23	1	64
2014년	42	24	2	68
2015년	21	-	1	22
2016년	46	39	4	89
2017년	49	24	1	74
2018년	40	41	4	85
2019년	40	35	4	79
2020년	39	26	5	70
계	399	272	27	698

주 : 2015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심의자료 누락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 2011년 이후 10년간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중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총 71건으로 전체 개발사업 건수의 약 37.0%를 차지하고 있음

[표 11] 인천광역시 개발사업 종류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구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기타	계
2011년	8	1	2	7	7	25
2012년	3	1	4	10	6	24
2013년	4	1	2	6	3	16
2014년	3	2	3	7	9	24
2015년	7	1	-	2	-	10
2016년	6	-	2	7	5	20
2017년	10	-	5	3	2	20
2018년	6	3	5	2	4	20
2019년	10	-	2	2	7	21
2020년	3	2	1	2	4	12
계	60	11	26	48	47	192

주 : 2015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심의자료 누락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 2011년 이후 10년간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중 2가지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복합 시설은 총 161건으로 전체 건축물의 약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총 116건으로 약 22.9%를 차지하고 있음

[표 12] 인천광역시 건축물 종류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구분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기타	계
2011년	10	1	3	10	6	30
2012년	21	8	8	15	16	68
2013년	11	6	5	14	12	48
2014년	11	3	3	14	13	44
2015년	5	1	4	-	2	12
2016년	10	2	5	42	10	69
2017년	12	1	11	23	7	54
2018년	19	-	18	12	16	65
2019년	8	1	16	17	16	58
2020년	9	-	10	14	25	58
계	116	23	83	161	123	506

주 : 2015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심의자료 누락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 2011년 이후 10년간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위원회별 구성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총 317건으로 전체의 약 45.4%를 차지하고 있음

[표 13] 인천광역시 심의위원회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구분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치구		계	
	교통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	건축위원회
2011년	25	7	7	13	-	3	32	23
2012년	43	7	28	12	-	2	71	21
2013년	29	11	16	7	-	1	45	19
2014년	37	5	4	20	-	2	41	27
2015년	11	10	-	-	-	1	11	11
2016년	27	19	4	35	-	4	31	58
2017년	26	23	24	-	-	1	50	24
2018년	38	2	41	-	-	4	79	6
2019년	40	-	35	-	-	4	75	4
2020년	39	-	26	-	-	5	65	5
계	317	84	185	87	0	27	500	198

주 : 2015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심의자료 누락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1.2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 심의위원회 종류
 - 본청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자치구 : 건축위원회(교통 통합)
- 개최현황(본청) : 매월 1회 원칙, 단 심의건수 및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조정
- 심의위원회 구성(본청) : 총 50명(당연직 5명 포함, 2022년 기준)
- 심의위원회 운영(본청) : 심의위원 6~9명 참석(당연직 포함)
- 심의절차

사업추진 절차	교통분야 세부 수행업무
접수전 보고서 사전협의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사전 협의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접수	· 사업승인기관에 보고서 접수 - 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자치구)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사업승인기관(자치구)→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사전검토의견 조회	· 사전검토 의견조회, 협의 - 시, 구 관련부서, 심의위원
사전검토의견 보완요청	· 사전검토의견 회신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사업승인기관(자치구)→사업시행자
사전검토보완서 검토	· 사전검토의견 반영내용 수록 · 평가대행자↔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협의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 심의일 10일 전 접수 - 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자치구)→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 교통영향평가 내용 브리핑 및 심의위원 질의 답변
심의결과 통보	· 심의의결내용 수령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사업승인기관(자치구)→사업시행자
심의의결내용 협의	· 심의조건 반영내용 수록 · 평가대행자↔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협의
심의의결보완서 접수	· 심의의결보완서 접수 - 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자치구)→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완료)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개선필요사항 등) 통보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사업승인기관(자치구)→사업시행자

주 : 상기 일정은 각 행정기관 행정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그림 1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2.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운영실태

- 서울특별시의 경우, 본청 및 자치구 일부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본청 내의 건축위원회에서는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 타 시·도의 경우 인천광역시와 동일하게 본청 내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건축위원회(교통 통합)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 속한 시·군 내의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교통영향평가서는 인천광역시와 동일하게 사업승인부서에 접수하여 심의 담당부서로 심의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일부 시·군(안양시, 화성시 등)에서는 심의 담당부서로 바로 접수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표 14]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실태(2021년 기준)

구 분	개최횟수	심의담당부서	비 고
서울특별시	매주 1회	교통정책과	심의안전 2건 이상 개최
부산광역시	매월 1회	공공교통정책과	
대구광역시	매월 1회	교통정책과	
광주광역시	매월 1회	교통정책과	
대전광역시	매월 1회	공공교통정책과	
울산광역시	매월 1회	교통기획과	
경기도	매월 2~3회	광역교통정책과	심의시 안전은 최대 2건으로 제한
강원도	격주 1회	교통과	
경상북도	매월 1회	교통정책과	
경상남도	매월 1회	교통정책과	
충청북도	비정기적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비정기적	교통정책과	
전라북도	매월 1회	도로교통과	
전라남도	매월 1회	도로교통과	심의안전 3건 이상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매월 1회	교통정책과	

자료 : 각 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담당부서 확인

3. 교통영향평가 운영 관련 의견 수렴

- 교통영향평가 수립대행자,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교통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주요 의견수렴 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토대로 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행정절차 개선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음

3.1 의견 수렴 대상

-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 (사)교통영향평가협회
- (사)교통기술사협회
-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승인기관 : 자치구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관련 부서 등
- 교통개선대책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 : 도로과, 건설과, 대중교통과, 인천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등

3.2 주요 의견수렴 항목

-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향 및 개선 후 적용방안
-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에는 미달되나, 용도 및 규모 특성 등으로 인해 별도의 교통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사업의 교통분야 검토 필요 여부
-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이 실현되기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증대방안
- 교통영향평가 제도 관련 기타 의견

3.3 주요 의견수렴 내용

-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오랜 시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왔음. 하지만, 개발사업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자체 특성에 맞게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제4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조례를 설정하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차제 조례를 통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등을 달리 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표 15]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7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3장 교통영향평가 <개정 2015. 7. 24.>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5. 7. 24.>

○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향 및 개선 후 적용방안

-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초기 접근은 보수적이면서도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작했다가, 다양한 민원들을 접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됨
- 대상사업의 범위 강화로 인해 심의 건수가 증가하면, 행정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 증가한 행정수요에 걸맞게 조직과 인력이 정비될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이 필요함. 또한, 교통영향평가 업무 진행을 위한 매뉴얼 제작, 워크샵 진행 등이 필요함

○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에는 미달되나, 용도 및 규모 특성 등으로 인해 별도의 교통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사업의 교통분야 검토 필요 여부

- 창고시설의 경우 종류(물류센터,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에 따라 원단위가 다름. 종류별 교통개선대책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은 부분임. 인천광역시 주차장 조례를 통해 개선하면 좋을 것이라 판단됨
- 교통영향평가 기준은 인천광역시의 모든 공간적, 지역적인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교통성 검토를 활용하여 정밀하게 도시교통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증대 방안
 -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기여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 교통영향평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음. 인센티브 제도가 수반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 교통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완된다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됨
- 교통영향평가 제도 관련 기타 의견
 - 공사 차량이 정책의 제·개정에 따라 간선도로 이용을 기피하고 생활도로를 이용하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사중 공사 차량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제 4 장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연구

1.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개선 개요
2. 현행 법령 기준 검토
3.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조사·비교
4.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사업 규모 조정 내용 분석
5.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수립

제4장 |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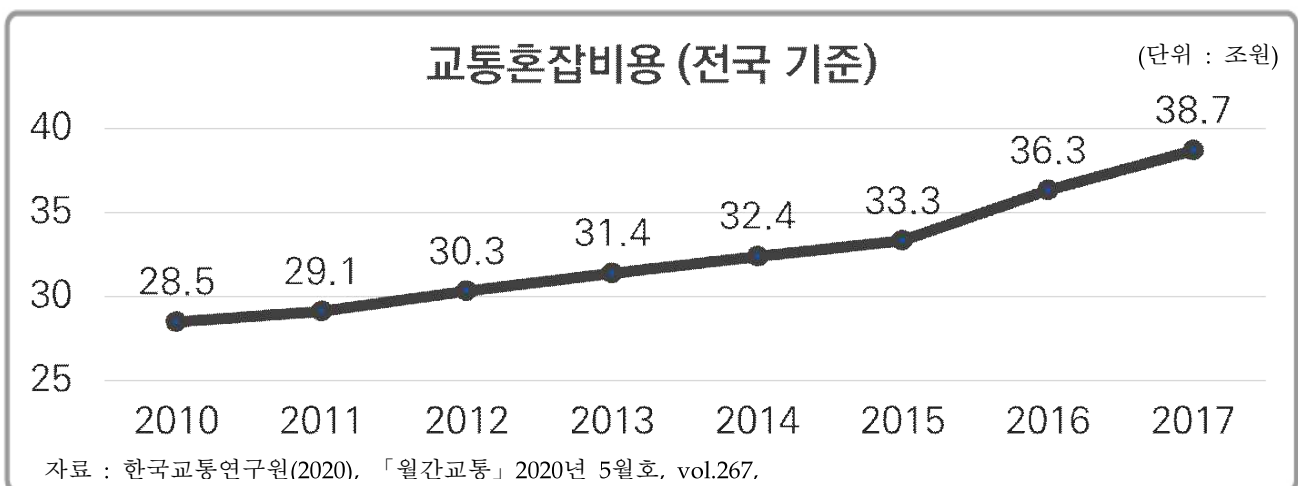
1.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개선 개요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던 교통영향평가의 분리 시행을 위해, 2009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을 신설한 이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었으나, 기준의 대부분이 10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대상 사업 기준의 일부 변경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6]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변화(2009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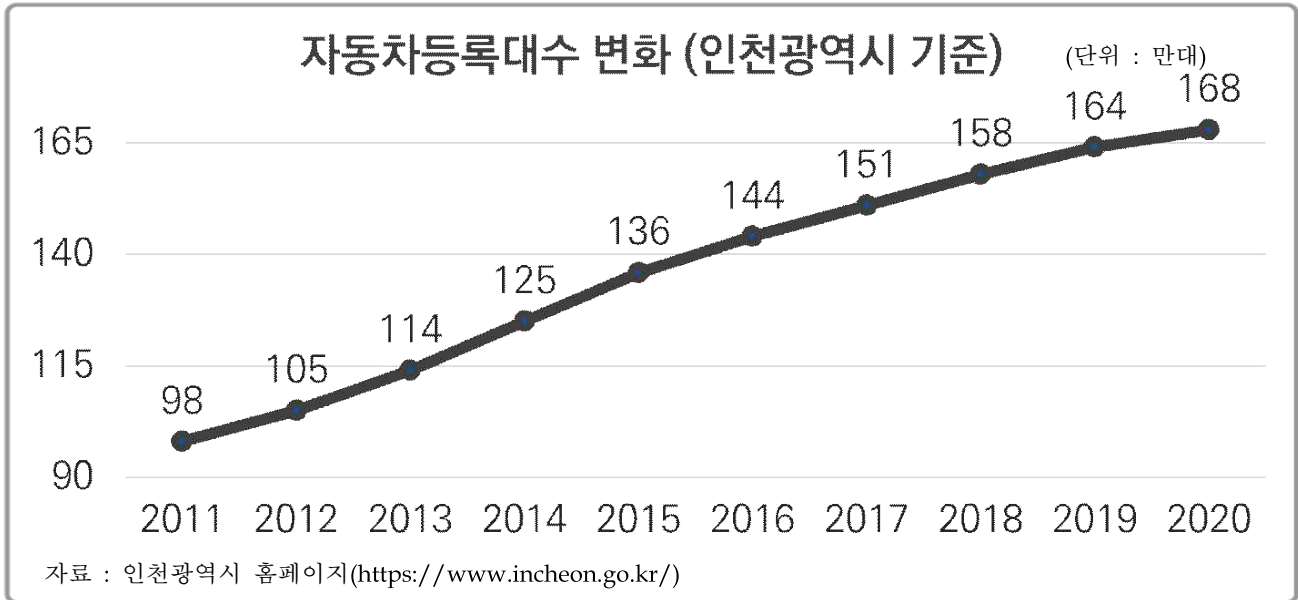
시행일	개정일	변경 내용
2010.10.16	2010.10.14	• 개발사업에 역세권 개발사업 기준 추가
2012.12.28	2012.12.28	• 운수시설에 속하던 집배송시설을 창고시설로 이동 (변경 전:11,000㎡ → 변경 후:55,000㎡)
2016.01.25	2016.01.22	• 1종 근린생활시설 기타에 예외 사항(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추가 • 의료시설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추가 (변경 전: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2017.02.04	2017.02.03	• 주용도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변경하고, 세부용도에 장례식장 및 동물전용장례식장 추가
2018.02.10	2018.02.09	• 항만시설 개발사업에 예외 사항(외부 수송수요 미발생인정·협의를 사업은 제외)추가

-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통 여건이 변화해 왔으며, 이에 현재에 맞는 기준 재정립이 필요함
 - 전국 교통혼잡비용이 2010년 대비 2017년에 35.8%(10.2조원)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4.5%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림 12] 교통혼잡비용(전국 기준)

- 인천광역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020년 기준 168만대에 달하였으며, 이는 2011년 대비 71.43% 증가한 수준임
- 인천광역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011년부터 10년간 연평균 6.2%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림 13] 자동차등록대수 변화(인천광역시 기준)

○ 각 지자체별 교통 여건이 다른 양상을 보임

- 지자체별로 교통혼잡 및 자동차등록대수 차이를 보임

[표 17] 지자체별 교통혼잡비용 및 자동차등록대수

구 분	교통혼잡비용(조원) ¹⁾	자동차등록대수(대) ²⁾
전 국	59.62(100%)	24,911,101
서울특별시	11.55(19.4%)	3,176,743
부산광역시	3.96(6.6%)	1,464,608
대구광역시	3.00(5.0%)	1,211,095
인천광역시	3.49(5.9%)	1,675,405
광주광역시	2.38(4.0%)	700,783
대전광역시	2.09(3.5%)	692,702
울산광역시	1.51(2.5%)	581,429
세종특별자치시	0.25(0.4%)	185,042

구 분	교통혼잡비용(조원) ¹⁾	자동차등록대수(대) ²⁾
경기도	16.01(26.9%)	6,204,452
강원도	1.51(2.5%)	828,146
충청북도	1.88(3.2%)	892,301
충청남도	2.08(3.5%)	1,176,350
전라북도	1.96(3.3%)	959,920
전라남도	1.63(2.7%)	1,172,282
경상북도	2.41(4.1%)	1,499,200
경상남도	3.36(5.6%)	1,832,049
제주특별자치도	0.57(1.0%)	658,594

주 : 교통혼잡비용은 2017년 기준이며, 자동차등록대수는 2021년 기준 자료임.

자료¹⁾ : 한국교통연구원(2020), 「월간교통」 2020년 5월호, vol.267,

자료²⁾ : 국토교통부(2021), 「자동차등록현황보고」.

- 인천광역시에서 심의받은 건축물의 침두시 유발교통량 100대 기준 면적과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이 불일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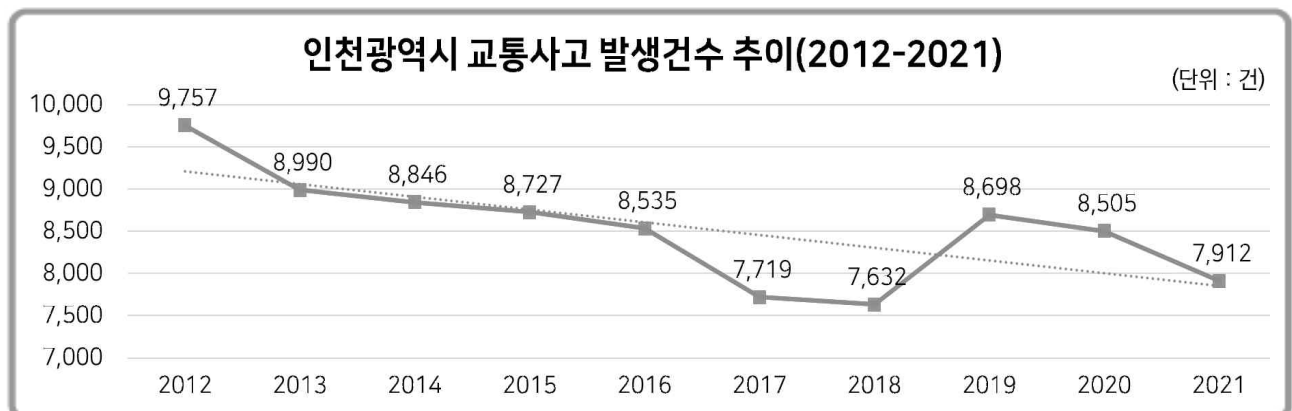
[표 18] 인천광역시 창고시설 침두시 유발교통량 100대 기준 면적

용도	현행 최소 면적 기준	침두시 유발교통량 100대 기준 면적(평균값)
창고시설(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55,000m ²	42,092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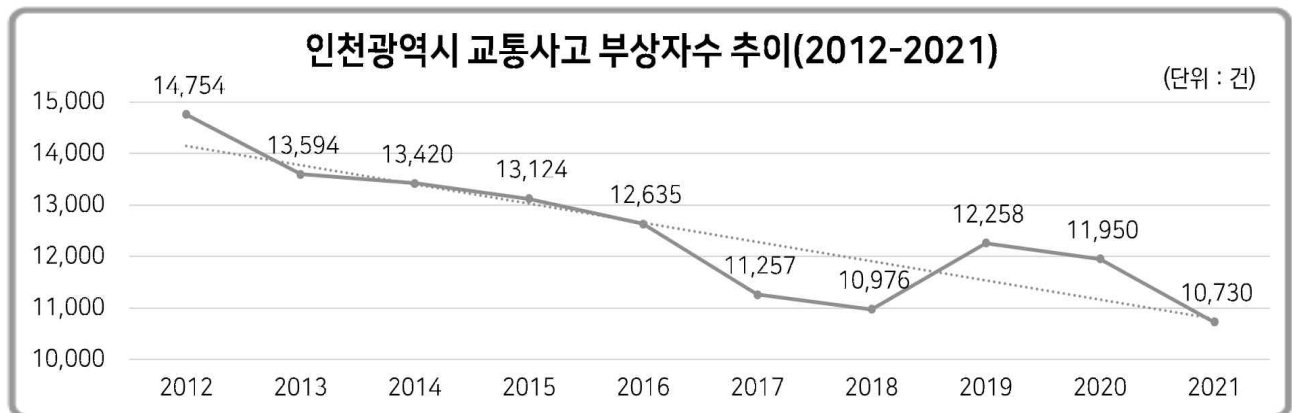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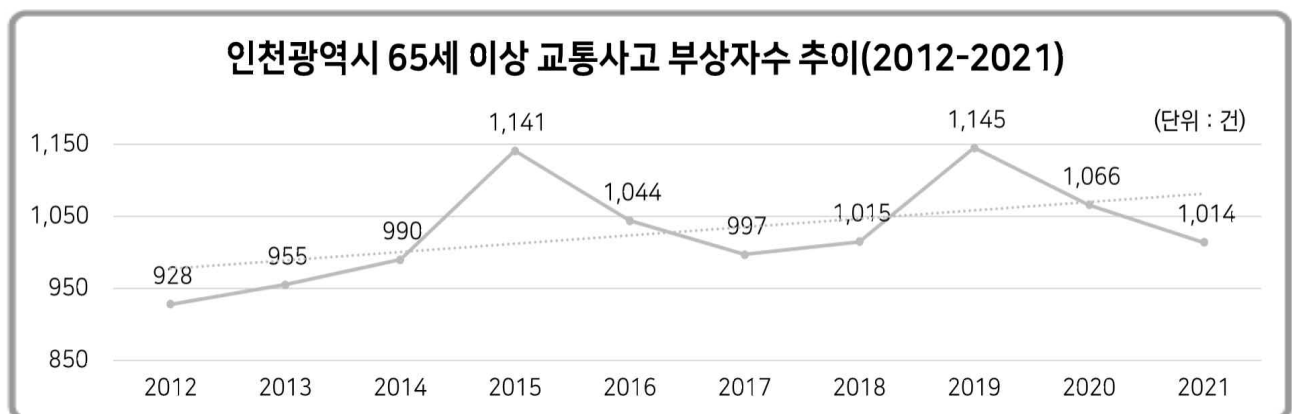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부상자수는 감소 추세이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교통사고 부상자수 및 비율은 증가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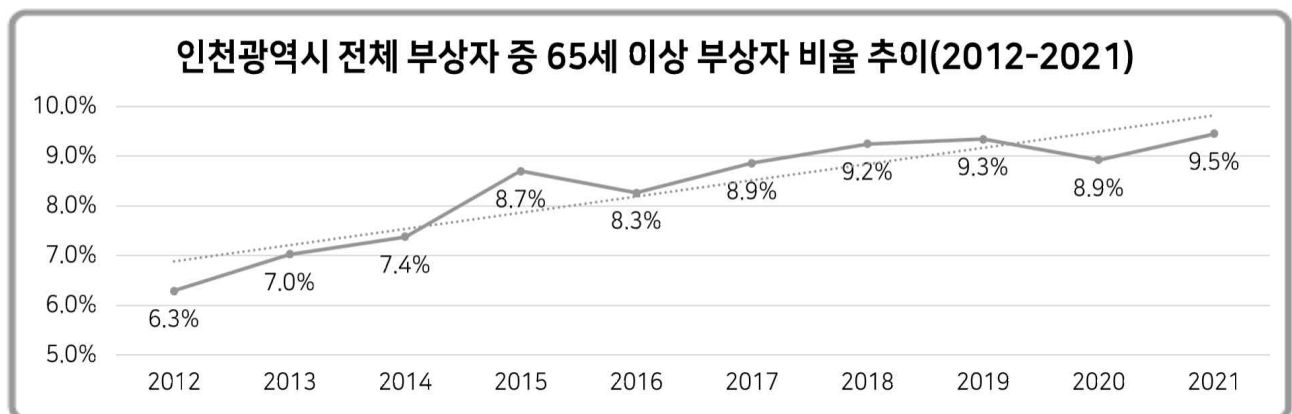
[그림 14] 인천광역시 교통사고 발생건수 추이(2012년~2021년)



[그림 15] 인천광역시 교통사고 부상자수 추이(2012년~2021년)



[그림 16] 인천광역시 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수 추이(2012년~2021년)



[그림 17] 인천광역시 전체 부상자 중 65세 이상 부상자 비율 추이(2012년~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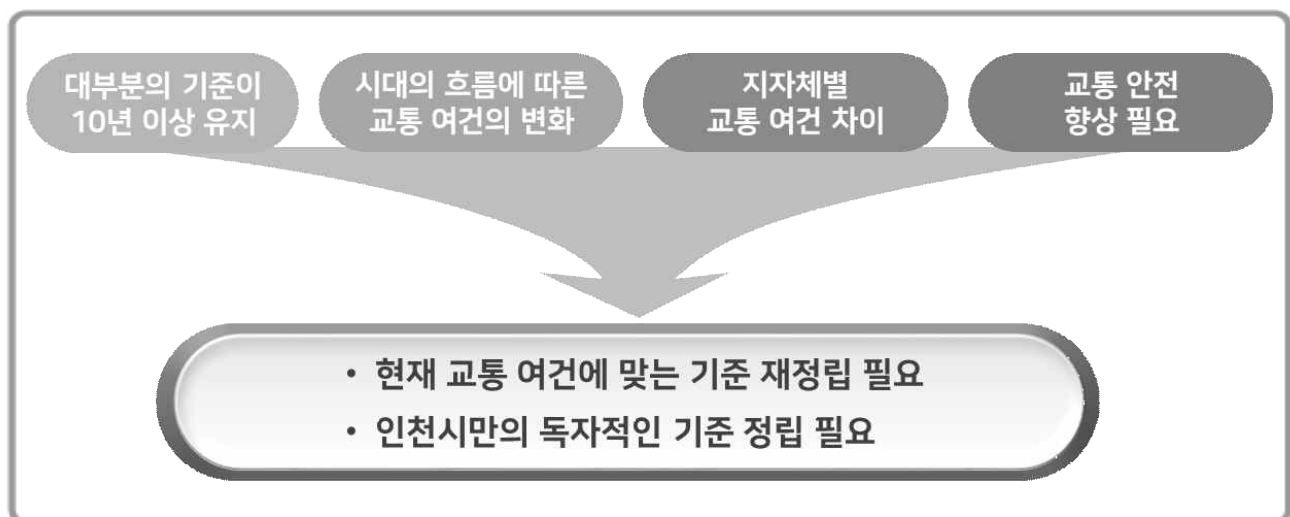
- OECD 국가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비교 결과, 대한민국은 1.4명으로 26 위 수준임
- 인천광역시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0.7명으로 OECD 국가 기준 17~18 위 수준임

[표 19] OECD 국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비교(2018년)

(단위 : 건, 명)

구 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순위	구 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순위
칠레	3.6	28	오스트리아	0.6	14
헝가리	1.4	27	네덜란드	0.6	13
대한민국	1.4	26	호주	0.6	12
미국	1.2	25	독일	0.6	11
뉴질랜드	0.9	24	아이슬란드	0.5	10
폴란드	0.9	23	덴마크	0.5	9
이스라엘	0.9	22	아일랜드	0.5	8
체코	0.9	21	스웨덴	0.5	7
벨기에	0.8	20	스페인	0.5	6
캐나다	0.8	19	핀란드	0.5	5
프랑스	0.7	18	영국	0.5	4
그리스	0.7	17	일본	0.5	3
슬로베니아	0.6	16	스위스	0.4	2
이탈리아	0.6	15	노르웨이	0.3	1

- 교통수요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교통 여건에 맞는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기준 정립이 필요함



[그림 18] 교통혼잡비용(전국 기준)

2. 현행 법령 기준 검토

2.1 개발사업 기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상 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0] 현행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개발사업)

구 분	용 도	대상 사업의 규모	
도시의 개발	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m ²)	100,000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사업)	부지면적(m ²)	50,000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총길이(km)	5.0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	부지면적(m ²)	55,000
		연면적(m ²)	15,000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부지면적(m ²)	300,000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부지면적(m ²)	150,000
	대지조성사업	부지면적(m ²)	100,000
	택지개발 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부지면적(m ²)	100,000
	물류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m ²)	50,000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부지면적(m ²)	25,00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부지면적(m ²)	100,000
	혁신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m ²)	100,000
	역세권개발사업	사업면적(m ²)	250,000
산업입지 산업단지조성	산업단지개발/재생사업	부지면적(m ²)	200,000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	부지면적(m ²)	200,000
에너지개발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 제외)	부지면적(m ²)	3,000,000
항만건설	항만건설사업	연간하역능력(톤)	1,500,000
도로건설	도로건설사업	총길이(km)	5.0
철도건설	철도건설사업	1정거장포함 총 길이(km)	5.0
	도시철도건설사업		3.0
공항건설	비행장 및 공항 설치	연간여객처리능력	300,000
관광단지개발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면적(m ²)	500,000
		시설계획면적(m ²)	50,000
	온천개발사업	부지면적(m ²)	100,000
특정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부지면적(m ²)	100,000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부지면적(m ²)	100,00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신행정수도)	부지면적(m ²)	100,000
	기업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m ²)	100,000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부지면적(m ²)	100,000
체육시설설치	체육시설의 설치공사(골프장은 27홀 이상)	부지면적(m ²)	150,000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부지면적(m ²)	150,000
	경마장 설치사업	부지면적(m ²)	150,000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사업/시설규모	규모이상

2.2 건축물 기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상 단일용도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1] 현행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용도		대상 건축물의 규모	
주용도	세부용도		
공동주택	아파트	연면적(㎡)	60,000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등	연면적(㎡)	25,000
	기타(대피소, 무인변전소제외)	연면적(㎡)	12,000
제2종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5,000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연면적(㎡)	15,000
	예식장	연면적(㎡)	3,000
	전시장	연면적(㎡)	15,000
	동.식물원	부지면적(㎡)	20,000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등)	연면적(㎡)	15,000
판매시설	도매시장	연면적(㎡)	13,000
	상점	연면적(㎡)	11,000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등	연면적(㎡)	6,000
운수시설	터미널, 철도, 공항 등	연면적(㎡)	11,000
의료시설	병원	연면적(㎡)	25,000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연면적(㎡)	100,000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등	연면적(㎡)	37,000
운동시설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 (부속건축물포함)	연면적(㎡)	10,000
		관람석(석)	2,000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7,000
	일반업무시설	연면적(㎡)	25,000
숙박시설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	연면적(㎡)	40,000
위락시설	주점영업, 단란주점 등	연면적(㎡)	11,000
	투전기업소, 카지노, 무도장등	연면적(㎡)	6,000
공장	-	연면적(㎡)	75,000
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연면적(㎡)	55,000
	하역장	부지면적(㎡)	55,000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연면적(㎡)	13,000
	매매장	연/부지(㎡)	25,000
방송통신시설	통신용시설	연면적(㎡)	43,000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묘지 부수 건축물 등	부지면적(㎡)	12,000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연면적(㎡)	10,000
	어린이회관, 휴게소 등	연면적(㎡)	30,000
장례시설	-	연면적(㎡)	6,000

3.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조사·비교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지자체별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과 같음

3.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조례에 의거한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22]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개발사업)

구 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km 이상인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5백㎡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백㎡이상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이상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

구 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한다) - 부지면적 150만㎡이상
라.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과 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75만톤 이상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바. 철도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5km이상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 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1.5km 이상
사.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15만명이상
아.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이상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차.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사업 또는 시설규모 이상

○ 조례에 의거한 서울특별시의 단일용도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3]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용도		범위
주용도	세부용도	
1)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50,000㎡이상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8,000㎡이상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8,000㎡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8,000㎡이상
	예식장	건축 연면적 1,500㎡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8,000㎡이상
	동·식물원	부지면적 17,000㎡이상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2,000㎡이상
6)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8,000㎡이상
	상점	건축 연면적 7,000㎡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3,000㎡이상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건축 연면적 6,000㎡이상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9)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80,000㎡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28,000㎡이상
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건축 연면적 8,000㎡이상 또는 관람석 1천7백이상
11)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6,000㎡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12)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13) 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 연면적 7,000㎡이상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4,000㎡이상

용도		범위
주용도	세부용도	
14) 공장		건축 연면적 56,000㎡이상
15) 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35,000㎡이상
	하역장	부지면적 35,000㎡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 이상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27,000㎡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부지면적 6,000㎡이상
19)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5,000㎡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15,000㎡이상
20)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3,000㎡이상

3.2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조례에 의거한 부산광역시의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4]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개발사업)

구 분	대상 사업의 범위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5만㎡ 이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다른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연면적 7천500㎡ 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00㎡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구 분	대상 사업의 범위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 단지 개발 사업: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00㎡ 이상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부지면적 5만㎡ 이상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다.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 : 연간 하역능력 75만톤 이상
라.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마.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 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면적 2만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 이상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조례에 의거한 부산광역시의 단일용도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5]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구 분	대상 사업의 범위
가. 공동주택	아파트 : 건축연면적 5만㎡ 이상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 건축연면적 1만3천㎡ 이상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라.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의 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예식장 : 건축연면적 1천700㎡ 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연면적 8천㎡ 이상 동·식물원 : 부지면적 1만7천㎡ 이상
마.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건축연면적 1만2천㎡ 이상
바. 판매시설	도매시장 : 건축연면적 9천500㎡ 이상 상점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건축연면적 3천㎡ 이상
사.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건축연면적

구 분	대상 사업의 범위
	6천㎡ 이상
아.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건축연면적 1만3천㎡ 이상
자. 교육연구 시설	대학, 대학교 : 건축연면적 8만㎡ 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건축연면적 2만8천㎡ 이상
차.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또는 관람석 1천700석 이상
카.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일반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2만㎡ 이상
타. 숙박시설	호텔·여관·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2만5천㎡ 이상
파. 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건축연면적 7천㎡ 이상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 건축연면적 4천㎡ 이상
하. 공장	건축연면적 5만6천㎡ 이상
거. 창고 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 건축연면적 3만5천㎡ 이상 하역장 : 부지면적 3만5천㎡ 이상
너.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매매장 :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만8천㎡ 이상
더. 방송통신 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 건축연면적 기준 3만3천㎡ 이상
러. 묘지 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 : 부지면적 6천㎡ 이상
머.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 건축연면적 5천㎡ 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건축연면적 1만5천㎡ 이상
버. 장례식장	장례식장,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 건축연면적 3천㎡ 이상

3.3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조례에 의거한 대전광역시의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6]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개발사업)

구 분	대상 사업 및 범위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 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500㎡ 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00㎡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00㎡ 이상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 이상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5천㎡ 이상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150만㎡ 이상
라.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마.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 이상
	2)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조례에 의거한 대전광역시의 단일용도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7]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구 분	대상 사업 및 범위
가.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3만6천㎡ 이상
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1만5천㎡ 이상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1만1천㎡ 이상
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건축 연면적 9천㎡ 이상
라.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의 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7천500㎡ 이상
	예식장: 건축 연면적 2천300㎡ 이상
	동물원·식물원: 부지면적 1만8천㎡ 이상
마.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바.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6천500㎡ 이상
	상점: 건축 연면적 5천500㎡ 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4천700㎡ 이상
사.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건축 연면적 7천㎡ 이상
아.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건축 연면적 1만2천500㎡ 이상
자.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5만㎡ 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3만㎡ 이상
차.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건축 연면적 7천㎡ 이상 또는 관람석 1천500석 이상
카.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6천㎡ 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만㎡ 이상
타.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2만9천㎡ 이상
파.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만㎡ 이상
하.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2만9천㎡ 이상

3.4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조례에 의거한 울산광역시의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8]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개발사업)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연면적 7천500㎡ 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00㎡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4)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00㎡ 이상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 이상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150만㎡ 이상
라.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과 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75만톤 이상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바. 철도의 건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1.5km 이상
사.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 이상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조례에 의거한 울산광역시의 단일용도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9]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가.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3만6천㎡ 이상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1만3천㎡ 이상
	기타: 건축 연면적 8천㎡ 이상
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라.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회의장·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8천㎡ 이상
	예식장: 건축 연면적 1천500㎡ 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8천㎡ 이상
	동·식물원: 부지면적 1만7천㎡ 이상
마.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만2천㎡ 이상
바.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9천500㎡ 이상
	상점: 건축 연면적 8천㎡ 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3천㎡ 이상
사.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건축 연면적 6천㎡ 이상
아.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건축 연면적 1만3천㎡ 이상
자. 교육연구 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8만㎡ 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2만8천㎡ 이상
차.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 연면적 8천㎡ 이상 또는 관람석 1천7백석 이상
카.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6천㎡ 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만㎡ 이상
타. 숙박시설	호텔·여관·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2만㎡ 이상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파. 위락시설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 연면적 7천㎡ 이상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4천㎡ 이상
하. 공장	건축 연면적 4만5천㎡ 이상
거. 창고시설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3만5천㎡ 이상
	하역장: 부지면적 3만5천㎡ 이상
너. 자동차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매매장: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만8천㎡ 이상
더. 방송통신 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2만7천㎡ 이상
러.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부지면적 6천㎡ 이상
머.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5천㎡ 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 건축 연면적 1만5천㎡ 이상
버.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3천㎡ 이상

3.5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로서 건축물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조례에 의거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일용도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대상 사업의 범위
1)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7,500㎡ 이상
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7,500㎡ 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8,000㎡ 이상
4) 판매시설	상점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주용도	세부용도	대상 사업의 범위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3,500㎡ 이상
5)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6)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7)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8)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20,000㎡ 이상
9)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5,300㎡ 이상
10)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동문 전용의 납골 시설	부지면적 6,000㎡ 이상
11) 관광휴게시설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운영 매뉴얼」은 대상사업의 규모로 개발사업 및 건축물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매뉴얼에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대상 사업 기준(개발사업)

구 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가. 도시개발	1)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부지면적 5만㎡
	2)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부지면적 2만5천㎡
	3)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 도 로 총길이 2.5km
		나) 유통업무설비 건축연면적 7천5백㎡ 부지면적 2만7천5백㎡
		다) 공 원 부지면적 15만㎡
		라) 유원지 부지면적 7만5천㎡
	4)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6조)	부지면적 5만㎡
	5)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부지면적 5만㎡
	6) 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부지면적 2만5천㎡

구 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7)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	부지면적 1만2천5백㎡
	8)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부지면적 5만㎡
	9) 혁신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부지면적 5만㎡
	10) 역세권개발사업(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업면적 12.5만㎡
나. 산업입지 산업단지조	1)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부지면적 10만㎡
	2)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부지면적 10만㎡
다. 에너지개발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부지면적 150만㎡
라. 항만건설	항만의 건설(항만법 제2조제1호)	연간하역능력 75만톤
마. 도로건설	도로의 건설(도로법 제10조)	총길이 2.5km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바. 철도건설	1) 철도의 건설(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만, 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총길이 2.5km (정거장 1개소 이상 포함)
	2)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총길이 1.5km (정거장 1개소 이상 포함)
사. 공항건설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연간여객처리능력 15만명
아. 관광단지 개발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시설계획면적 2만5천㎡ 부지면적 25만㎡
	2) 온천의 개발사업(온천법 제2조)	부지면적 5만㎡
자. 특정 지 역 개발	1) 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부지면적 5만㎡
	2)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지개발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	부지면적 5만㎡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부지면적 5만㎡
	4) 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	부지면적 5만㎡
	5) 용산공원정비구역내 용산공원 조성등 개발사업(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	부지면적 5만㎡
차. 체육시설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공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이상인 경우만 해당	부지면적 7만5천㎡
	2)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	부지면적 7만5천㎡
	3) 경마장(한국마사회법 제4조)	부지면적 7만5천㎡
카. 민간 투자 사업	민간투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해당 사업 또는 시설규모 이상

○ 매뉴얼에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일용도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주 용 도	세 부 용 도	기 준	범 위
1)공동주택	-아파트	연면적	4만5천㎡
2)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연면적	2만5천㎡
	-기 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연면적	1만2천㎡
3)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7천5백㎡
4)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등)	연면적	7천5백㎡
	-예식장	연면적	3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등)	연면적	8천㎡
	-동·식물원	부지면적	2만㎡
5)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연면적	1만5천㎡
6)판매시설	-도매시장	연면적	1만3천㎡
	-상점	연면적	7천㎡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연면적	3천5백㎡
7)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시설,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연면적	1만1천㎡
8)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 병원 및 요양병원)	연면적	1만5천㎡
9)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연면적	10만㎡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학원, 도서관	연면적	3만㎡
10)운동시설(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포 함)	연면적	1만㎡
		관람석	2천석 이상
11)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6천㎡
	-일반업무시설	연면적	1만5천㎡
12)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연면적	2만㎡
13)위락시설(근린생활 시설과 운동시설에 해 당하는 것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 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유사한 것	연면적	1만1천㎡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무도학원	연면적	5천3백㎡
14)공장	-	연면적	7만5천㎡
15)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연면적	5만5천㎡
	-하역장	부지면적	5만5천㎡
16)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연면적	1만3천㎡
	-매매장	연면적/ 부지면적	2만5천㎡
17)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는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등 통신용 시설	연면적	4만3천㎡
18)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 수되는 건축물	부지면적	6천㎡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연면적	1만㎡
19)관광휴게시설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연면적	1만5천㎡
20)장례식장	-	연면적	6천㎡

3.6 경기도

-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조례에 의거한 경기도의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3]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개발사업)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km 이상인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5백㎡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백㎡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수목원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이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전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한다) - 부지면적 150만㎡이상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항만의 건설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75만톤 이상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이상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바. 철도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5km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 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1.5km 이상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사.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15만명이상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 전
아.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이상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차.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경기도는 교통영향평가 권역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표 34]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권역

권역	권역별 세부지역
1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구역의 읍, 동 지역
2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구역의 면 지역, 법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읍, 동 지역
3	법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면 지역

주 : '교통권역'은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이며, '도시교통권역'은 교통권역을 제외한 시·군을 말한다.

○ 조례에 의거한 경기도의 단일용도 건축물의 권역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5]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정한 대상 사업 기준(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1권역	2권역	3권역
1)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36,000㎡ 이상	건축 연면적 50,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7,5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7,500㎡ 이상	건축 연면적 11,25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실내경마장, 실내경륜장 등)	건축 연면적 7,500㎡ 이상	건축 연면적 11,250㎡ 이상	건축 연면적 11,250㎡ 이상
	예식장	건축 연면적 1,5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8,000㎡ 이상	건축 연면적 11,25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동·식물원	부지면적 17,000㎡ 이상	부지면적 20,000㎡ 이상	부지면적 30,000㎡ 이상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 연면적 11,25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6)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6,500㎡ 이상	건축 연면적 9,750㎡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상점	건축 연면적 5,500㎡ 이상	건축 연면적 8,25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8,25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건축 연면적 12,500㎡ 이상	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9)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50,000㎡ 이상	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0㎡ 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28,000㎡ 이상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10) 운동시설(근린 생활시설에 해 당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건축 연면적 7,000㎡ 또는 관람석 1,500석이상	건축 연면적 8,000㎡ 또는 관람석 1,700석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또는 관람석 3,000석이상
11)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주용도	세부용도	1권역	2권역	3권역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12,500㎡ 이상	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12)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20,000㎡ 이상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건축 연면적 8,25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4,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14)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건축 연면적 56,25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연면적 12,500㎡ 이상	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15) 창고시설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27,500㎡ 이상	건축 연면적 41,250㎡ 이상	건축 연면적 41,250㎡ 이상
	하역장	부지면적 35,000㎡ 이상	부지면적 41,250㎡ 이상	부지면적 41,250㎡ 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6,500㎡ 이상	건축 연면적 9,750㎡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 이상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750㎡ 이상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27,000㎡ 이상	건축 연면적 32,250㎡ 이상	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부지면적 6,000㎡ 이상	부지면적 9,000㎡ 이상	부지면적 18,000㎡ 이상
19)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건축 연면적 7,500㎡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20)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4.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사업 규모 조정 내용 분석

4.1 개발사업 기준

- 개발사업 규모 기준 조정 내용 분석 결과, 모든 지자체의 강화 기준은 100%로 동일하며,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음
- 제주의 경우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지자체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발사업에 대해 기준을 강화하였음
- 부산·대전·울산의 경우, 지자체 특성에 맞춰 일부 사업의 기준을 강화하였음
-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 특성에 맞춰 수목원, 마리나항만, 평택시개발사업을 기준에 추가하였음

[표 36]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내용 분석(개발사업)

구분	사업	규모기준	도시교통 정비촉진 법 기준 (現인천)	지자체별 기준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경기도
도시의 개발	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m ²)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사업)	부지면적(m ²)	50,000	25,000	-	-	-	25,000	25,000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총길이(km)	5.0	25	25	25	25	25	25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	부지면적(m ²)	55,000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연면적(m ²)	15,0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부지면적(m ²)	30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부지면적(m ²)	150,000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대지조성사업	부지면적(m ²)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택지개발 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부지면적(m ²)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
	물류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m ²)	50,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부지면적(m ²)	25,000	12,500	12,500	12,500	12,500	12,500	12,50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부지면적(m ²)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혁신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m ²)	100,000	-	-	-	-	50,000	-
	역세권개발사업	사업면적(m ²)	250,000	125,000	-	125,000	125,000	125,000	125,000
	수목원	부지면적(m ²)	-	-	-	-	-	-	100,000

구분	사업	규모기준	도시교통 정비촉진 법 기준 (現인천)	지자체별 기준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경기도
산업입지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개발/재생사업	부지면적(m)	2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	부지면적(m)	200,000	100,000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 제외)	부지면적(m)	3,000,000	1,500,000	-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항만건설	항만건설사업	연간하역능력(톤)	1,500,000	750,000	750,000	-	750,000	750,000	75,000
	마리나항만	시설계획면적(m)	-	-	-	-	-	-	25,000
도로건설	도로건설사업	총길이(km)	5.0	25	25	25	25	25	25
철도건설	철도건설사업	정거장 1개소 이상 포함 총길이(km)	5.0	25	-	-	-	25	25
	도시철도건설사업	정거장 1개소 이상 포함 총길이(km)	3.0	1.5	-	-	1.5	1.5	1.5
공항건설	비행장 및 공항 설치	연간여객처리능력(명)	300,000	150,000	-	-	-	150,000	150,000
관광단지 개발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면적(m)	5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시설계획면적(m)	50,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온천개발사업	부지면적(m)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특정지역 개발	지역개발사업	부지면적(m)	100,000	50,000	-	-	-	50,000	50,000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부지면적(m)	100,000	-	-	-	-	50,00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신행정수도)	부지면적(m)	100,000	-	-	-	-	50,000	-
	기업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m)	100,000	-	-	-	-	50,000	-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부지면적(m)	100,000	50,000	-	-	-	50,000	-
	평택시개발사업	부지면적(m)	-	-	-	-	-	-	50,000
체육시설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골프장은 27홀 이상)	부지면적(m)	150,000	75,000	-	-	-	75,000	75,000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부지면적(m)	150,000	75,000	-	-	-	75,000	75,000
	경마장 설치사업	부지면적(m)	150,000	75,000	-	-	-	75,000	75,000
민간투자 사업	민간투자사업	사업 또는 시설규모	규모 이상	규모 이상	-	-	-	규모 이상	규모이상

4.2 건축물 기준

- 건축물 규모 기준 조정 내용 분석 결과,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추어 각각 다른 수준으로 강화하였음
- 대전과 제주의 경우, 일부 항목에 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도시교통촉진법 상의 기준을 유지하였음
- 경기도는 지자체 특성에 맞춰 지식산업센터를 대상 사업에 추가하였음

[표 37]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내용 분석(건축물)(1)

주요도	용도 세부용도	규모기준	도시교통 정비촉진 법 기준 (現인천)	지자체별 기준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경기도		
									1권역	2권역	3권역
공동주택	아파트	연면적(m ²)	60,000	50,000	50,000	36,000	36,000	45,000	36,000	50,000	90,000
제1종근린 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등	연면적(m ²)	25,000	13,000	13,000	15,000	13,000	25,000	13,000	18,750	37,500
	기타(대피소,무인변전소 제외)	연면적(m ²)	12,000	8,000	8,000	11,000	8,000	12,000	7,500	9,000	18,000
제2종근린 생활시설	-	연면적(m ²)	15,000	8,000	10,000	9,000	10,000	7,500	7,500	11,250	22,500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연면적(m ²)	15,000	8,000	8,000	7,500	8,000	7,500	7,500	11,250	11,250
	예식장	연면적(m ²)	3,000	1,500	1,700	2,300	1,500	3,000	1,500	2,250	4,500
	전시장	연면적(m ²)	15,000	8,000	8,000	15,000	8,000	8,000	8,000	11,250	22,500
	동·식물원	부지면적(m ²)	20,000	17,000	17,000	18,000	17,000	20,000	17,000	20,000	30,000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연면적(m ²)	15,000	12,000	12,000	10,000	12,000	15,000	10,000	11,250	22,500
판매시설	도매시장	연면적(m ²)	13,000	8,000	9,500	6,500	9,500	13,000	6,500	9,750	19,500
	상점	연면적(m ²)	11,000	7,000	8,000	5,500	8,000	7,000	5,500	8,250	16,500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연면적(m ²)	6,000	3,000	3,000	4,700	3,000	3,500	3,000	4,500	9,000
운수시설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연면적(m ²)	11,000	6,000	6,000	7,000	6,000	11,000	6,000	8,250	16,500
의료시설	병원	연면적(m ²)	25,000	13,000	13,000	12,500	13,000	15,000	12,500	18,750	37,500
교육연구시 설	대학, 대학교	연면적(m ²)	100,000	80,000	80,000	50,000	80,000	100,000	50,000	75,000	150,000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연면적(m ²)	37,000	28,000	28,000	30,000	28,000	30,000	28,000	30,000	55,500
운동시설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m ²)	10,000	8,000	8,000	7,000	8,000	10,000	7,000	8,000	15,000
	관람석		2,000	1,700	1,700	1,500	1,700	2,000	1,500	1,700	3,000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연면적(m ²)	7,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10,500
	일반업무시설	연면적(m ²)	25,000	20,000	20,000	20,000	20,000	15,000	12,500	18,750	18,750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연면적(m ²)	40,000	20,000	25,000	29,000	20,000	20,000	20,000	30,000	60,000
위락시설	주점영업, 단란주점, 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연면적(m ²)	11,000	7,000	7,000	11,000	7,000	11,000	7,000	8,250	16,500
	투전기업소, 카지노, 무도장, 무도학원	연면적(m ²)	6,000	4,000	4,000	6,000	4,000	5,300	4,000	4,500	9,000
공장	공장	연면적(m ²)	75,000	56,000	56,000	75,000	45,000	75,000	37,500	56,250	-
	지식산업센터	연면적(m ²)	75,000	-	-	-	-	-	12,500	18,750	18,750
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연면적(m ²)	55,000	35,000	35,000	55,000	35,000	55,000	27,500	41,250	41,250
	하역장	부지면적(m ²)	55,000	35,000	35,000	55,000	35,000	55,000	35,000	41,250	41,250
자동차관련 시설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연면적(m ²)	13,000	10,000	10,000	10,000	10,000	13,000	6,500	9,750	19,500
	매매장	연/부지(m ²)	25,000	18,000	18,000	20,000	18,000	25,000	18,000	18,750	37,500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시설	연면적(m ²)	43,000	27,000	33,000	29,000	27,000	43,000	27,000	32,250	64,500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등의 부수 건축물 등	부지면적(m ²)	12,000	6,000	6,000	12,000	6,000	6,000	6,000	9,000	18,000
관광휴게 시설	아외음악당, 야외극장	연면적(m ²)	10,000	5,000	5,000	10,000	5,000	10,000	5,000	7,500	15,000
	어린이회관, 휴게소, 관광탑, 관광지 등에 딸린 시설	연면적(m ²)	30,000	15,000	15,000	30,000	15,000	15,000	15,000	22,500	45,000
장례시설	-	연면적(m ²)	6,000	3,000	3,000	6,000	3,000	6,000	3,000	4,500	9,000

- 도시교통촉진법 상의 기준을 유지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최소 - 33%에서 최대 100%까지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남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하였음
- 인천광역시와 비교적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가진 서울·부산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에 대해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나, 6개 항목(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中 음식점, 판매시설 中 도매시장 및 상점,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함

[표 38]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내용 분석(건축물)(2)

용도		규모기준	자자체별 기준							경기도		
주용도	세부용도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1권역			2권역	3권역
공동주택	아파트	연면적(㎡)	20%	20%	67%	67%	33%	67%	20%	-33%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등	연면적(㎡)	92%	92%	67%	92%	0%	92%	33%	-33%		
	기타(대피소, 무인변전소 제외)	연면적(㎡)	50%	50%	9%	50%	0%	60%	33%	-33%		
제2종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88%	50%	67%	50%	100%	100%	33%	-3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연면적(㎡)	88%	88%	100%	88%	100%	100%	33%	33%		
	음식점	연면적(㎡)	100%	76%	30%	100%	0%	100%	33%	-33%		
	전시장	연면적(㎡)	88%	88%	0%	88%	88%	88%	33%	-33%		
	동·식물원	부지면적(㎡)	18%	18%	11%	18%	0%	18%	0%	-33%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연면적(㎡)	25%	25%	50%	25%	0%	50%	33%	-33%		
판매시설	도매시장	연면적(㎡)	63%	37%	100%	37%	0%	100%	33%	-33%		
	상점	연면적(㎡)	57%	38%	100%	38%	57%	100%	33%	-33%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연면적(㎡)	100%	100%	28%	100%	71%	100%	33%	-33%		
운수시설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연면적(㎡)	83%	83%	57%	83%	0%	83%	33%	-33%		
의료시설	병원	연면적(㎡)	92%	92%	100%	92%	67%	100%	33%	-33%		
교육연구 시설	대학, 대학교	연면적(㎡)	25%	25%	100%	25%	0%	100%	33%	-33%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연면적(㎡)	32%	32%	23%	32%	23%	32%	23%	-33%		
운동시설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25%	25%	43%	25%	0%	43%	25%	-33%		
		관람석	18%	18%	33%	18%	0%	33%	18%	-33%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17%	17%	17%	17%	17%	17%	17%	-33%		
	일반업무시설	연면적(㎡)	25%	25%	25%	25%	67%	100%	33%	33%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연면적(㎡)	100%	60%	38%	100%	100%	100%	33%	-33%		
위락시설	주점영업, 단란주점, 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연면적(㎡)	57%	57%	0%	57%	0%	57%	33%	-33%		
	투전기업소, 카지노, 무도장, 무도학원	연면적(㎡)	50%	50%	0%	50%	13%	50%	33%	-33%		
공장	공장	연면적(㎡)	34%	34%	0%	67%	0%	100%	33%	-		
	지식산업센터	연면적(㎡)	-	-	-	-	-	-	-	-		
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연면적(㎡)	57%	57%	0%	57%	0%	100%	33%	33%		
	하역장	부지면적(㎡)	57%	57%	0%	57%	0%	57%	33%	33%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연면적(㎡)	30%	30%	30%	30%	0%	100%	33%	-33%		
	매매장	연/부지(㎡)	39%	39%	25%	39%	0%	39%	33%	-33%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시설	연면적(㎡)	59%	30%	48%	59%	0%	59%	33%	-33%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등의 부수 건축물 등	부지면적(㎡)	100%	100%	0%	100%	100%	100%	33%	-33%		
관광휴게 시설	아외음악당, 야외극장	연면적(㎡)	100%	100%	0%	100%	0%	100%	33%	-33%		
	어린이화관, 휴게소, 관광탑, 관광지 등에 딸린 시설	연면적(㎡)	100%	100%	0%	100%	100%	100%	33%	-33%		
장례시설	-	연면적(㎡)	100%	100%	0%	100%	0%	100%	33%	-33%		

5.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수립

5.1 개발사업 기준

5.1.1 개발사업 기준 수립 방향

- 인천광역시의 개발사업은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이들은 건축물 기준인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함. 즉, 인천광역시만의 특징적인 개발사업이 없음
- 또한, 개발사업의 경우 면적 산정기준이 상이하여, 공학적 산정이 어려움
- 독립적인 기준을 수립한 지자체들(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모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상에 제시된 기준을 100% 강화한 통일된 기준을 사용함
- 이에 인천광역시의 기준은 타 지자체의 시행 사례를 준용하여 현재 기준의 100%를 강화하는 것이 적합함. 단, ‘혁신도시 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등과 같이 인천광역시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사업은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5.1.2 인천광역시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안)

-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산정된 인천광역시의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기준(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9] 인천광역시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안)

구 분	용 도	규모기준	도시교통정비촉진법(現인천)	인천	강화율(%)
도시의 개발	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100,000	50,000	100%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사업)	부지면적(㎡)	50,000	25,000	100%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총길이(km)	5.0	2.5	100%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	부지면적(㎡)	55,000	27,500	100%
		연면적(㎡)	15,000	7,500	100%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부지면적(㎡)	300,000	150,000	100%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부지면적(㎡)	150,000	75,000	100%
	대지조성사업	부지면적(㎡)	100,000	50,000	100%
	택지개발 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부지면적(㎡)	100,000	50,000	100%

구 분	용 도	규모기준	도시교통정 비촉진법 (現인천)	인 천	강화율 (%)
	물류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	50,000	25,000	100%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부지면적(㎡)	25,000	12,500	10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부지면적(㎡)	100,000	50,000	100%
	혁신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100,000	-	-
	역세권개발사업	사업면적(㎡)	250,000	125,000	100%
산업입지 산업단지조성	산업단지개발/재생사업	부지면적(㎡)	200,000	100,000	100%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	부지면적(㎡)	200,000	100,000	100%
에너지개발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 제외)	부지면적(㎡)	3,000,000	1,500,000	100%
항만건설	항만건설사업	연간하역능력(톤)	1,500,000	750,000	100%
도로건설	도로건설사업	총길이(km)	5.0	2.5	100%
철도건설	철도건설사업	정거장 1개소 이상 포함 총길이(km)	5.0	2.5	100%
	도시철도건설사업		3.0	1.5	100%
공항건설	비행장 및 공항 설치	연간여객처리능력(명)	300,000	150,000	100%
관광단지 개발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면적(㎡)	500,000	250,000	100%
		시설계획면적(㎡)	50,000	25,000	100%
	온천개발사업	부지면적(㎡)	100,000	50,000	100%
특정지역 개발	지역개발사업	부지면적(㎡)	100,000	50,000	100%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부지면적(㎡)	100,000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신행정수도)	부지면적(㎡)	100,000	-	-
	기업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100,000	-	-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부지면적(㎡)	100,000	50,000	100%
체육시설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골프장은 27홀 이상)	부지면적(㎡)	150,000	75,000	100%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부지면적(㎡)	150,000	75,000	100%
	경마장 설치사업	부지면적(㎡)	150,000	75,000	100%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사업 또는 시설규모	규모이상	규모이상	-

5.2 건축물 기준

5.2.1 건축물 기준 수립 방향

- 인천광역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타 지자체의 강화된 기준을 준용하고, 추가로 인천광역시 특성 및 도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항을 추가 또는 조정하여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 이에, 독립적인 기준을 수립한 지자체들(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중 인천광역시와 지역 특성이 비슷한 부산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의 기준을 비교·검토하였으며, 주요 건축물의 용도별 주차수요원단위를 비교 및 분석하였음

5.2.2 타 시·도 건축물 기준 검토

- 독립적인 기준을 수립한 지자체 중 인천광역시와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부산광역시 및 수도권 연담도시로서 유관된 서울특별시의 기준을 검토함
- 검토 결과,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6개 용도를 제외하고 모두 같은 수준으로 강화함. 다른 수준으로 강화한 6개 용도 건축물은 다음과 같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음식점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숙박시설(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통신용시설)

[표 40] 타 시·도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검토

용도		규모기준	도시교통정비촉진법(現인천)	서울	부산
주용도	세부용도				
공동주택	아파트	연면적(㎡)	60,000	50,000	50,000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등	연면적(㎡)	25,000	13,000	13,000
	기타(대피소, 무인변전소 제외)	연면적(㎡)	12,000	8,000	8,000
제2종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5,000	8,000	10,000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연면적(㎡)	15,000	8,000	8,000
	음식장	연면적(㎡)	3,000	1,500	1,700

용도		규모기준	도시교통정비 비축진법 (現인천)	서울	부산
주용도	세부용도				
	전시장	연면적(㎡)	15,000	8,000	8,000
	동.식물원	부지면적(㎡)	20,000	17,000	17,000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연면적(㎡)	15,000	12,000	12,000
판매시설	도매시장	연면적(㎡)	13,000	8,000	9,500
	상점	연면적(㎡)	11,000	7,000	8,000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연면적(㎡)	6,000	3,000	3,000
운수시설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시설 등	연면적(㎡)	11,000	6,000	6,000
의료시설	병원	연면적(㎡)	25,000	13,000	13,000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연면적(㎡)	100,000	80,000	80,000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등	연면적(㎡)	37,000	28,000	28,000
운동시설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 (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10,000	8,000	8,000
		관람석(석)	2,000	1,700	1,700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7,000	6,000	6,000
	일반업무시설	연면적(㎡)	25,000	20,000	20,000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연면적(㎡)	40,000	20,000	25,000
위락시설	주점영업, 단란주점 등	연면적(㎡)	11,000	7,000	7,000
	투전기업소, 카지노, 무도장, 무도학원	연면적(㎡)	6,000	4,000	4,000
공장	-	연면적(㎡)	75,000	56,000	56,000
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연면적(㎡)	55,000	35,000	35,000
	하역장	부지면적(㎡)	55,000	35,000	35,000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연면적(㎡)	13,000	10,000	10,000
	매매장	연/부지(㎡)	25,000	18,000	18,000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 통신용시설	연면적(㎡)	43,000	27,000	33,000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묘지 등의 부수 건축물 등	부지면적(㎡)	12,000	6,000	6,000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연면적(㎡)	10,000	5,000	5,000
	어린이회관, 휴게소, 관망탑, 관광지 등에 딸린 시설	연면적(㎡)	30,000	15,000	15,000
장례시설	-	연면적(㎡)	6,000	3,000	3,000

주 : 음영 표시된 부분은 서울과 부산 기준이 서로 다른 용도 건축물임.

5.2.3 주요 건축물 용도별 주차수요원단위 비교·분석

-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 조정을 위해 별도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 문헌자료를 통한 주차수요원단위 분석을 수행함
-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기준 검토 결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 6개의 용도 건축물과 인천광역시 단일용도 건축물 중 심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용도인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 부산광역시의 자료는 조사되지 않았고, 참고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자료를 분석함
- 분석 결과, 자료분석 상으로는 서울특별시의 기준과 부산광역시의 기준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이 어려움
- 다만, 부산광역시의 기준보다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 같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연담도시로서의 특성상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 지자체별 주요 건축물 용도별 주차수요원단위 분석 결과

건축물의 용도	주차수요원단위 (대/1,000㎡) ¹⁾				
	법정원단위	서울	대전	인구 100만 이상 ²⁾	인천
공동주택	9.09~15.38	11.58	12.37	12.18	13.35 ³⁾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	12.78	12.78	12.57	7.704 ⁴⁾
문화 및 집회시설	6.67	39.77	55.84	32.43	13.80 ⁵⁾
판매시설	6.67	18.23	24.89	20.87	-
숙박시설	3.33	11.29	12.10	11.56	-
방송통신시설	6.67	11.74	-	10.99	-

주¹⁾: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건물연면적을 대상으로 함

주²⁾: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서울, 대전, 창원 3개 도시를 대상으로 함

주³⁾: 주거1은 50㎡, 주거2는 64㎡, 주거3은 85㎡, 주거4는 115㎡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값임

주⁴⁾: 인천광역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1,2종 구분없이 법정주차원단위 동일

주⁵⁾: 국립인천해양박물관 1개 사례임

자료 : 국토교통부(2016),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등 연구」 및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 조정을 위해 별도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 인천광역시 주요 건축물에 대해 인천광역시 내부자료를 통한 주차수요원단위 분석을 수행함
- 인천광역시 주요 건축물 용도별 주차수요원단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 인천광역시 주요 건축물 용도별 주차수요원단위 분석 결과

건축물의 용도	주차수요원단위 (대/1,000㎡) ¹⁾	
	평균	비고
공동주택	13.35 ²⁾	대/세대 기준 주거1 0.95 주거2 1.04 주거3 1.15 주거4 1.47
공공업무시설	6.78	
공원시설	0.27	
근린생활시설	7.70 ³⁾	
문화및집회시설(박물관)	13.80 ⁴⁾	
물류창고	1.22	
의료시설	8.04	
자동차관련시설	매매 5.40 정비 8.67	
지식산업센터	6.98	

주¹⁾: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건물연면적을 대상으로 함

주²⁾: 주거1은 50㎡, 주거2는 64㎡, 주거3은 85㎡, 주거4는 115㎡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값임

주³⁾: 인천광역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1,2종 구분없이 법정주차원단위 동일

주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1개 사례임

5.2.4 인천광역시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안)

1) 공동주택(아파트) 기준

- 교통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인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 지자체의 공동주택(아파트) 교통영향평가 기준 검토 결과, 각 지자체 별로 기준 상의 차이가 있음

[표 43] 지자체별 공동주택(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단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지자체별기준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평균
연면적(m ²)	60,000	50,000	50,000	36,000	36,000	45,000	43,400

- 현행법상 단일용도 교통영향평가 기준은 “시설용도별 교통유발량 100대/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아파트의 침투율은 다년간의 경험상 세대수의 30%가 정설임
- 333세대가 입주한 단지의 시간당 유발량은 약 100대/시이며, 이에 해당하는 단지의 면적은 약 45,000m²로 추산됨 (아파트 단지 구성세대의 면적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0m²~150m²/세대의 분포를 보임)
- 인천광역시의 공동주택(아파트) 교통영향평가 기준은 45,000m²로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2) 이 외 용도

-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연구 결과, 공동주택 이외의 용도의 경우 수도권 이자 연담도시로서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서울특별시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3) 인천광역시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안)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인천광역시의 단일용도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기준(안)은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도록 기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기준 대비 17%~100% 강화함

[표 44] 인천광역시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안)

용도		단위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現 인천)	인천시 기준(안)	강화율 (%)
주용도	세부용도				
공동주택	아파트	연면적(㎡)	60,000	45,000	33%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등	연면적(㎡)	25,000	13,000	92%
	기타(대피소, 무인변전소 제외)	연면적(㎡)	12,000	8,000	50%
제2종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5,000	8,000	88%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연면적(㎡)	15,000	8,000	88%
	예식장	연면적(㎡)	3,000	1,500	100%
	전시장	연면적(㎡)	15,000	8,000	88%
	동.식물원	부지면적(㎡)	20,000	17,000	18%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등)	연면적(㎡)	15,000	12,000	25%
판매시설	도매시장	연면적(㎡)	13,000	8,000	63%
	상점	연면적(㎡)	11,000	7,000	57%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등	연면적(㎡)	6,000	3,000	100%
운수시설	터미널, 철도, 공항 등	연면적(㎡)	11,000	6,000	83%
의료시설	병원	연면적(㎡)	25,000	13,000	92%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연면적(㎡)	100,000	80,000	25%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등	연면적(㎡)	37,000	28,000	32%
운동시설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부속건축물포함)	연면적(㎡)	10,000	8,000	25%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7,000	6,000	17%
	일반업무시설	연면적(㎡)	25,000	20,000	25%
숙박시설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	연면적(㎡)	40,000	20,000	100%
위락시설	주점영업, 단란주점 등	연면적(㎡)	11,000	7,000	57%
	투전기업소, 카지노, 무도장 등	연면적(㎡)	6,000	4,000	50%
공장	-	연면적(㎡)	75,000	56,000	34%
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연면적(㎡)	55,000	35,000	57%
	하역장	부지면적(㎡)	55,000	35,000	57%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연면적(㎡)	13,000	10,000	30%
	매매장	연/부지(㎡)	25,000	18,000	39%
방송통신시설	통신용시설	연면적(㎡)	43,000	27,000	59%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묘지 부수 건축물 등	부지면적(㎡)	12,000	6,000	100%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연면적(㎡)	10,000	5,000	100%
	어린이회관, 휴게소 등	연면적(㎡)	30,000	15,000	100%
장례시설	-	연면적(㎡)	6,000	3,000	100%

5.3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조정 시, 교통영향평가 건수 변화 예측

5.3.1 개발사업

- 대상사업 기준 조정 시, 인천광역시 내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건수 변화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 건수는 87건으로 이들 중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건수는 50건임
- 100% 강화된 기준 적용 시, 대상사업 건수는 63건으로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상 기준 적용 시 대비 26%(13건) 증가함

[표 45]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조정 시, 교통영향평가 건수 변화 예측(개발사업)

(단위 : 건)

개발사업의 종류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 건수	교통영향평가 예측 건수	
			도시교통촉진법 상 기준 적용시 (現인천시 기준)	인천시 기준(안) 적용시
도시의 개발	도시개발사업	17	12	15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사업)	66	35	45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	-	-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	-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	-	-
	대지조성사업	-	-	-
	택지개발 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	-	-
	물류단지개발사업	-	-	-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	-
	혁신도시개발사업	-	-	-
	역세권개발사업	-	-	-
산업입지 산업단지조성	산업단지개발/재생사업	3	3	3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	-	-	-
에너지개발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 제외)	-	-	-
항만건설	항만건설사업	-	-	-

(단위 : 건)

개발사업의 종류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 건수	교통영향평가 예측 건수	
			도시교통촉진법 상 기준 적용시 (現인천시 기준)	인천시 기준(안) 적용시
도로건설	도로건설사업	-	-	-
철도건설	철도건설사업	-	-	-
	도시철도건설사업	-	-	-
공항건설	비행장 및 공항 설치	-	-	-
관광단지개발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	-	-
	온천개발사업	-	-	-
특정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	-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신행정수도)	-	-	-
	기업도시개발사업	-	-	-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	-
체육시설설치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골프장은 27홀 이상)	-	-	-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	-	-
	경마장 설치사업	-	-	-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	-	-
합계		87	50	63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5.3.2 건축물

- 대상 사업 기준 조정 시, 인천광역시 내 단일용도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건수 변화를 분석함
- 기존 인천광역시 기준인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상의 기준 적용시, 건축물의 연평균 교통영향평가 건수는 24.45건임
- 기준(안) 적용 시 연평균 교통영향평가 건수는 44.1%(10.77건) 증가한 35.22건으로 나타남

[표 46]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조정 시, 교통영향평가 건수 변화 예측(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교통영향평가 예측 건수(1년 평균 기준)	
주용도	세부용도	도시교통촉진법 상 기준 적용시 (現인천시 기준)	인천시 기준(안) 적용시
공동주택	아파트	14.67	17.07
제1종근린 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	0.28
	기타(대피소, 무인변전소 제외)	1.40	2.23
제2종근린 생활시설	-	-	1.67
문화및집회 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
	예식장	-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	-
	동·식물원	-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
판매시설	도매시장	-	-
	상점	-	-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0.28
의료시설	병원	0.28	0.28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
운동시설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 (운동장 부속건축물 포함)	-	0.28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	-
	일반업무시설	1.40	4.19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	-
위락시설	주점영업, 단란주점,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투전기업소, 카지노, 무도장, 무도학원	-	-
공장	-	0.84	1.40
창고시설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5.02	6.42
	하역장	-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0.84	0.84
	매매장	-	-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시설	-	0.28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등의 부수 건축물 등	-	-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	-
	어린이회관, 휴게소, 관망탑, 관광지 등에 딸린 시설	-	-
장례시설	-	-	-
합계		24.45	35.22

제 5 장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작성 개요
2.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검토
3.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5장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작성 개요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의거 모든 시·도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교통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표 47]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7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3장 교통영향평가 <개정 2015. 7. 24.>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5. 7. 24.>

- 시·도별 조례 제정은 모법에서 제시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가 현재의 도시교통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불일치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를 조정하기 위함임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작성을 위해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였음

2.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검토

- 2022년 현재 국내에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로 6개 시·도임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 각 지자체별 교통영향평가 조례는 다음과 같음

2.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9년 5월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라는 명칭이 교통영향평가로 수정되면서 2017년 3월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가장 최근 개정은 2022년 4월임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내용 외에도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이의신청', '사후관리',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표 48] 지자체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8호, 2022. 4.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통정책과), 02-2133-2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2017. 3.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23., 2019. 1. 3.>

1.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승인관청"이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

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1. 별표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전문개정 2019. 1. 3.]

제4조(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 제3조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시행 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3.]

제5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심의를 거친다.

② 영 13조의4제2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6)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의 7) 운수시설인 건축물
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 외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그 규모가 영 별표 1 제2호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4. 법 제2조제2호의 "교통시설"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광역교통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 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2.4.28>

[전문개정 2019. 1. 3.]

제6조(이의신청) 사업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9. 1. 3.]

제7조(사후관리)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하고자 그 변경 내용을 사전에 승인 관청에 신고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9. 1. 3.]

제8조(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승인관청은 심의·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3., 2019. 1. 3.>

[제목개정 2017. 3. 23.][제9조에서 이동 <2019. 1. 3.>]

부 칙 <제4781호, 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교통영향평가서 및 종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자문이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및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및 변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441호, 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973호,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46호, 2019.3.28.>(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7까지 생략

③8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③9부터 <57>까지 생략

부 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058호,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398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0]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2.2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9년 4월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라는 명칭이 교통영향평가로 수정되면서 2016년 11월 개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가장 최근 개정은 2018년 5월임
- 부산광역시의 조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조정하는데 집중되어 있음
-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음

[표 49] 지자체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6. 17.] [부산광역시조례 제5763호, 2018. 5. 16.,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

제2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개정 2016. 11. 2>)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1. 2>

②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사업 외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한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로 본다.

부 칙 <2018.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된 교통영향평가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로 본다.

[서식 1]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2조 관련)

2.3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3년 1월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라는 명칭이 교통영향평가로 수정되면서 2016년 8월 개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해당 개정이 가장 최근 이뤄진 개정임
- 대전광역시의 조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조정하는데 집중되어 있음
-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있음

[표 50] 지자체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8. 12.] [대전광역시조례 제4764호, 2016. 8. 12., 전부개정]

대전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그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부칙 <조례 제4764호, 2016.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바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대상"을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서식 1] 별표(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제2조 관련))

2.4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정하고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2월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울산광역시의 조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조정하는데 집중되어 있음
-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고 있음

[표 51] 지자체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 30.] [울산광역시조례 제2335호, 2020. 12. 29., 제정]

울산광역시(교통기획과), 052-229-425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2조 관련)

2.5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음
- 해당 조례는 2008년 3월 제정되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에 관한 사항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초기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음
- 2019년 3월 개정을 통해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강화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가장 최근 개정은 2022년 8월임
- 타 지자체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는 교통영향평가보다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조례 성격이 더 강함
-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있음

[표 52] 지자체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12호, 2022. 8. 1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7.>

1.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별·연령별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의 성별·연령별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의 현황 및 그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② 도지사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3. 읍·면·동별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7. 주차장 현황 및 그 확충계획
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원인 및 대책
9.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제4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차로의 입체화계획
2.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3. 대중교통운행체계의 개선
4.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
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6. 지역별 교통특성과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 및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과 전망

제5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법 제15조제4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7.>

1. 개발사업: 영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건축물: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영 제13조의4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5조제2호 및 영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33조제1항제8호의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2.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3. 대중교통수단 이용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방안

제8조(부담금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9.>

1. 상수도 취·정수장
2. 하수처리 시설
3. 배수펌프시설
4. 물 재생시설
5.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
6. 발전소·변전소의 시설물
7. 수목원 시설
8.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물

제9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이내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이내

제10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11조(부담금의 경감률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8.12.>

② 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을 하는 시설물의 부담금은 감축활동별 경감률을 합산하여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10부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 경감률의 합이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하며,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8.17.>

⑤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제4항의 경감률은 제2항의 경감률보다 먼저 적용하여 합산한다. <신설 2022.8.17.>

제12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 ①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9., 2022.8.17.>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반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2022.8.17.>

③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3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① 감축활동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

간 중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② 삭제<2022.8.17.>

③ 감축활동 이행기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제외한다. <개정 2021.8.9.>

제14조(감축활동 인정범위) 도지사는 시설물 소유자가 별표 4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을 100분의 90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감축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③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계획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8.17.>

제16조 삭제<2022.8.17.>

제17조 삭제<2022.8.17.>

제18조 삭제<2022.8.17.>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와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 적용례)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개정 규정,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을 본다.

부 칙 <제2609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제16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과기간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2698호,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07호, 2021.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적용례) ① 제8조,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중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과기간이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별표 4 중 제1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 및 경감률의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212호, 2022.8.17.>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5조제2호 관련)

[별표 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9조제1항 관련)

[별표 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9조제2항 관련)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 및 경감률(제11조제1항 관련)

[서식 2] [별지 1]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변경)계획서

[별지 2]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별지 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별지 4]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통보서

2.6 경기도

- 경기도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정하고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2년 4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임
- 경기도의 조례는 여러 시·군에 함께 적용되는 만큼 '교통영향평가 권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인접 시·군간의 사전 협의'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표 53] 지자체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경기도)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경기도조례 제7427호, 2022. 4. 21., 제정]

경기도, 031-8030-37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권역)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권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2조에 따라 대상사업지가 둘 이상의 권역에 걸치는 경우 상위권역의 범위를 따른다.

제4조(인접 시·군간의 사전 협의)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한 시·군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인 개발사업 부지의 경계가 다른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2.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의 건축물 대지의 경계가 다른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가 승인관청에 접수된 경우 인접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인접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접 시·군의 협의 의견을 승인관청이나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접 시·군과 사전협의 전에 시장·군수가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3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영향평가 항목 등)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2022.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신규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식 1]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별지별표)

3.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작성에 관한 주요 이슈는 ‘조례(안)의 내용 및 범위’, ‘조례시행일’ 두 가지임
- 타 시·도의 ‘조례(안)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상 사업 및 범위’에서 확대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이의 신청’, ‘사후관리’,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교통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광범위함. 이는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이 따로 제정되어 있는 만큼 조례의 성격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의 경우, 조례의 성격이 ‘대상 사업 및 범위’의 개선으로 집중되어 있음
 - 경기도의 조례는 여러 시·군에 함께 적용되는 만큼 ‘교통영향평가 권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인접 시·군간의 사전 협의’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로 명명하였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조례 성격이 더 강함
- 타 시·도의 ‘조례시행일’은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 경기도의 경우, ‘익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 부산광역시의 경우,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 대전광역시의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 울산광역시의 경우,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 인천광역시의 경우 ‘조례(안)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시행일’에 대해서는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조직과 인원의 정비가 이뤄진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익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에 대한 초기 접근은 보수적이면서도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작했다가, 다양한 의견(민원)을 접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해당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음

[표 54]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통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 익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2조 관련)

제 6 장

주요 건축물 교통개선대책 수립

1.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연구 개요
2. 공동주택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3. 지식산업센터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4. 집배송시설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제6장 | 주요 건축물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연구

1.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연구 개요

-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건축물 유형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이 필요함
-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이 필요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현행법상 대상이지만 건축물의 특성에 맞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은 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대상 주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용도임
 - 공동주택 - 아파트
 - 공장 - 지식산업센터
 - 창고시설 - 집배송시설(물류센터)

2. 공동주택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 인천광역시 단일용도 건축물 중 심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용도이자 개발사업 중에서도 주요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인 공동주택의 교통개선대책 수립 방안 마련을 위해, 주차장·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2.1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수립

2.1.1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검토

- 인천광역시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검토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서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사례가 있음

- 이에 법정 기준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및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지자체(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검토함

1) 법정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의거한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지역적으로는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그 밖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 군지역’, ‘그 밖의 지역’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면적 구분은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하며, 세대당 1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세대당 0.7대를 기준으로 함
- 이 중 인천광역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에 해당함

[표 55]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기준

구 분		주차장설치기준(대/㎡)			
		가. 특별시	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면적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세대기준		세대당 1대 이상(60㎡이하:0.7대/세대)			

자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1.12., 대통령령 제31389호, 일부개정) 제27조

2) 지자체별 기준

①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 세대당 1대 이상 설치하도록 함

[표 56]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하고,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호실)를 1세대로 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호실)를 1세대로 본다.

자료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22. 4. 21., 조례 제6850호, 2022. 4. 21., 일부개정) [별표2]

②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 세대 당 1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되,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 이하인 경우 0.8대 이상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표 5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8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료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21. 12. 30., 조례 제8265호, 2021. 12. 30., 일부개정) [별표2]

③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 세대 당 1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되,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0.5대 이상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조례에 제시된 설치 기준 외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음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의 110%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강서구의 경우 세대당 1.3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해운대구의 경우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

[표 58]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5대) 이상</p> <p>○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오피스텔의 경우 1호실을 1세대로 본다.</p>

자료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22. 8. 10., 조례 제6740호, 2022. 8. 10., 일부개정) [별표7]

④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 세대 당 1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되,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 이하인 경우 1대 이상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조례에 제시된 설치 기준 외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음
- 85㎡ 이상의 경우 법정주차대수를 적용하며, 74~85㎡는 세대당 1.35대, 59~74

m²는 세대당 1.25대, 59m² 이하는 세대당 1.15대를 적용함

[표 59]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5.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대)이상으로 한다.

자료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22. 10. 11., 조례 제5849호, 2022. 10. 11., 일부개정) [별표2]

3) 지자체별 기준 검토 결과

-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제도상으로는 인천광역시가 가장 적은 면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타 시·도 사례와 같이 제도적으로 명시화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60] 지자체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검토 결과

지자체 명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인 천 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단,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로 한다.)
서 울 ²⁾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단,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30m² 이하 : 0.5대 • 전용면적 60m² 이하 : 0.8대
부 산 ³⁾	- 법정주차대수의 11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서구 : 세대당 1.3대 이상 • 해운대구 :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
대 구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m² 이상 : 법정주차대수 • 74~85m² : 세대당 1.35대 • 59~74m² : 세대당 1.25대 • 59m² 이하 : 세대당 1.15대

자료¹⁾: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22. 4. 21., 조례 제6850호, 2022. 4. 21., 일부개정) [별표2]

자료²⁾: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21. 12. 30., 조례 제8265호, 2021. 12. 30., 일부개정) [별표2]

자료³⁾: 부산시 내부자료

자료⁴⁾: 대구시 내부자료

2.1.2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현황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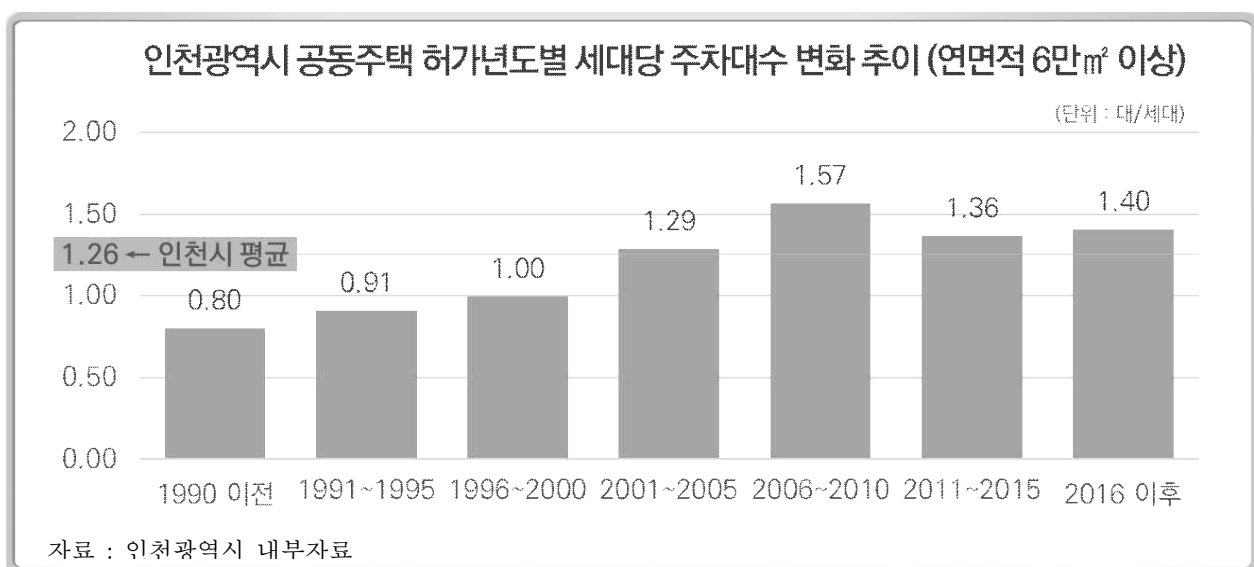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현황 검토를 위해, 연면적 6만㎡ 이상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를 분석하였음
- 먼저, 허가년도별 세대당 주차대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음
 - 2000년 이전에 허가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평균 0.80 ~ 1.00대인 반면, 이후에 허가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29 ~ 1.57대인 것으로 나타남
 - 1990년대 이전에 허가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평균 0.80대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인천광역시 평균의 0.63배 수준임
 - 2006 ~ 2010년 사이에 허가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평균 1.57대/세대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인천광역시 평균의 1.25배 수준임

[표 6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허가년도별 세대당 주차대수(연면적 6만㎡ 이상)

(단위 : 대/세대)

연 도	세대당 평균 주차대수
1990 이 전	0.80
1991 ~ 1995	0.91
1996 ~ 2000	1.00
2001 ~ 2005	1.29
2006 ~ 2010	1.57
2011 ~ 2015	1.36
2016 이 후	1.40
평 균	1.26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그림 19]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허가년도별 세대당 주차대수 변화 추이(연면적 6만㎡ 이상)

○ 이어서, 인천광역시 신도시와 구도심에 위치하는 연면적 6만㎡ 이상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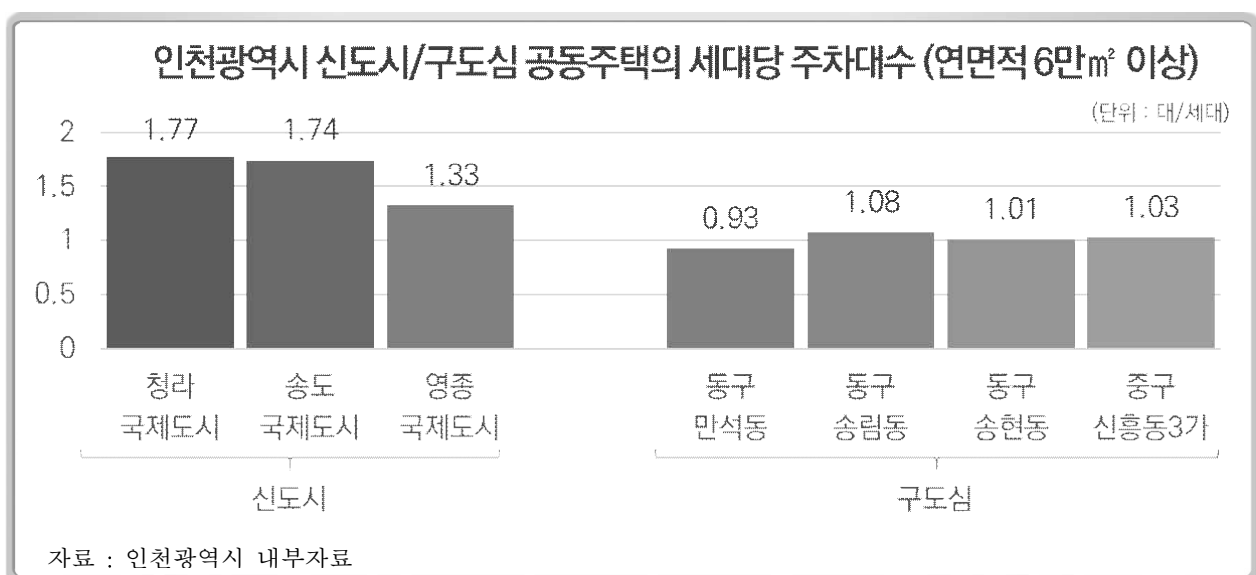
- 신도시인 청라국제도시·송도국제도시·영종국제도시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1.33 ~ 1.77대로 나타났으며, 평균 주차대수는 세대당 1.68대로 나타남
- 구도심인 동구(만석동,송림동,송현동)·중구(신흥동3가) 일대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0.93 ~ 1.08대로 나타났으며, 평균 주차대수는 1.04대/세대로 나타남. 이는 신도시 평균의 60% 수준임

[표 62] 인천광역시 신도시/구도심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연면적 6만㎡ 이상)

(단위 : 대/세대)

구 분		세대당 평균 주차대수
신도시	청라국제도시	1.77
	송도국제도시	1.74
	영종국제도시	1.33
	신도시 평균	1.68
구도심	동구 만석동	0.93
	동구 송림동	1.08
	동구 송현동	1.01
	중구 신흥동3가	1.03
	구도심 평균	1.04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그림 20] 인천광역시 신도시/구도심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연면적 6만㎡ 이상)

2.1.3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수립을 위한 분석

1) 세대당 자동차 등록대수 산출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수립을 위해 최근 5년간의 세대당 자동차 등록대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가구수, 가구원수, 자동차등록대수,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한 추정치임
-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를 산출함
- 최근 5년간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 결과, 아파트는 1.49대~1.56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오피스텔은 1.03대~1.08대 수준으로 나타남

[표 63] 인천광역시 아파트·오피스텔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단위 : 대/세대)

구분	아파트	오피스텔
2017	1.49	1.03
2018	1.52	1.07
2019	1.55	1.08
2020	1.56	1.06
2021	1.52	1.04

주* : 아파트는 1가구를 1세대로, 오피스텔은 1호실을 1세대로 봄

주** : 산출 근거는 다음 페이지 참고

- 기준 수립시 인천광역시 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도시, 구도심, 강화·옹진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를 산출함
- 신도시, 구도심, 강화·옹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음
 - 신도시 :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 송도국제도시 :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 영종국제도시 : 용유동, 운서동, 영종동
 - 청라국제도시 :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 구도심 : 동구, 중구(용유동, 운서동, 영종동 제외)
 - 강화·옹진 : 강화군, 옹진군
- 최근 5년간 지역별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 결과, 신도시는 1.20대~1.50대, 구도심은 0.99대~1.31대, 강화·옹진은 1.08대~2.69대 수준으로 나타남

[표 64] 인천광역시 신도시, 구도심, 강화·옹진 지역의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단위 : 대/세대)

구분	신도시			구도심		강화·옹진	
	송도	영종	청라	동구	중구(일부)	강화군	옹진군
2017	1.39	1.31	1.23	0.99	1.29	1.11	1.08
2018	1.40	1.33	1.26	1.04	1.31	1.10	1.13
2019	1.42	1.31	1.28	1.10	1.29	2.69	1.15
2020	1.45	1.20	1.32	1.03	1.18	2.37	1.20
2021	1.50	1.23	1.38	1.04	1.21	1.68	1.23

주 : 산출 근거는 다음 페이지 참고

2) 세대당 자동차 등록대수 산출 근거

① 지역 비구분 - 아파트, 오피스텔

[표 65] 인천광역시 아파트 가구수, 가구원 수, 가구당 주거면적(2017년~2021년)

구분	가구수(가구) (A)	가구원수(인) (B)	평균가구원수(인/가구) (B)÷(A)	가구당 주거면적(㎡)
2017	571,237	1,657,859	2.90	75.30
2018	593,619	1,693,153	2.85	75.30
2019	615,915	1,721,154	2.79	75.30
2020	629,920	1,728,285	2.74	75.30
2021	651,718	1,745,970	2.68	75.10

출처 :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 통계(<https://kosis.kr/>)
주 : 주거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표 66] 인천광역시 오피스텔 가구수, 가구원 수, 가구당 주거면적(2017년~2021년)

구분	가구수(가구) (A)	가구원수(인) (B)	평균가구원수(인/가구) (B)÷(A)	가구당 주거면적(㎡)
2017	45,161	90,646	2.01	53.50
2018	49,541	99,741	2.01	53.80
2019	59,119	115,021	1.95	52.80
2020	70,963	132,232	1.86	51.20
2021	82,336	151,036	1.83	51.50

출처 :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 통계(<https://kosis.kr/>)
주 : 주거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표 67] 인천광역시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2017년~2021년)

구분	자동차등록대수(대) (E)	주민등록인구(인) (F)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대/인) (E÷F)
2017	1,510,319	2,948,542	0.51
2018	1,577,607	2,954,642	0.53
2019	1,635,323	2,957,026	0.55
2020	1,676,442	2,942,828	0.57
2021	1,675,405	2,948,375	0.57

출처 :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 통계(<https://kosis.kr/>)

[표 68] 인천광역시 아파트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구분	평균가구원수 (인/세대) (G)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대/인) (I)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 (대/세대) (G)×(I)
2017	2.90	0.51	1.49
2018	2.85	0.53	1.52
2019	2.79	0.55	1.55
2020	2.74	0.57	1.56
2021	2.68	0.57	1.52

주 : 1가구를 1세대로 봄

[표 69] 인천광역시 오피스텔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구분	평균가구원수 (인/세대) (H)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대/인) (I)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 (대/세대) (H)×(I)
2017	2.01	0.51	1.03
2018	2.01	0.53	1.07
2019	1.95	0.55	1.08
2020	1.86	0.57	1.06
2021	1.83	0.57	1.04

주 : 1호실을 1세대로 봄

② 지역 구분 - 신도시, 구도심, 강화·옹진

[표 70] 인천광역시 신도시·구도심·강화옹진 가구원수별 가구수 및 가구당 평균가구원수(2020년)

구분		가구수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수(가구) ¹⁾²⁾							평균 가구원수 ³⁾ (인/가구)	
			1	2	3	4	5	6	7		
신도시		137,629	34,954	29,814	33,208	31,601	6,668	1,131	252	2.63	
	송도국제도시		60,180	11,624	12,612	16,439	15,879	3,035	496	95	2.80
		송도1동	12,281	2,729	2,505	3,030	3,118	690	170	39	2.77
		송도3동	17,342	3,999	3,535	4,573	4,360	753	104	18	2.70
		송도2동	11,354	1,403	2,003	3,346	3,632	820	127	23	3.08
		송도4동	8,618	1,731	1,899	2,407	2,158	366	48	9	2.73
		송도5동	10,585	1,762	2,670	3,083	2,611	406	47	6	2.75
	영종국제도시		39,955	16,011	9,602	6,949	5,734	1,347	247	64	2.19
		용유동	1,873	744	734	254	99	33	X	5	1.91
		운서동	15,273	8,654	2,786	1,787	1,573	368	81	24	1.86
		영종동	7,156	3,251	2,060	910	667	202	50	16	1.98
		영종1동	15,653	3,362	4,022	3,998	3,395	744	113	19	2.65
	청라국제도시		37,494	7,319	7,600	9,820	9,988	2,286	388	93	2.84
		청라1동	10,995	2,453	2,269	2,809	2,746	572	117	29	2.74
		청라2동	16,782	3,532	3,375	4,223	4,409	1,030	171	42	2.80
		청라3동	9,717	1,334	1,956	2,788	2,833	684	100	22	3.00
		44,773	14,425	13,963	8,764	5,748	1,487	310	76	2.27	
구도심	동구		25,234	7,335	7,878	5,207	3,695	906	173	40	2.35
		만석동	2,890	856	880	578	443	106	22	5	2.36
		화수1·화평동	2,502	732	802	495	360	88	19	6	2.34
		화수2동	3,384	1,093	1,106	668	400	98	14	5	2.22
		송현1·2동	4,141	974	1,246	984	753	151	30	X	2.51
		송현3동	1,770	696	583	276	165	41	8	X	2.05
		송림1동	656	158	219	137	97	37	X	X	2.46
		송림2동	1,363	545	442	223	115	29	8	X	2.03
		송림3·5동	3,200	893	956	699	486	146	16	X	2.40
		송림4동	1,469	317	424	335	307	71	15	X	2.63
		송림6동	2,566	627	780	583	447	96	27	6	2.50
		금창동	1,293	444	440	229	122	43	11	X	2.16
	중구 (일부)	19,539	7,090	6,085	3,557	2,053	581	137	36	2.16	
	연안동	2,680	966	882	501	241	77	7	6	2.11	

구분			가구수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수(가구) ¹⁾²⁾							평균 가구원수 ³⁾ (인/가구)
				1	2	3	4	5	6	7	
구 도 심	중구 (용유, 운서, 영종동 제외)	신 포 동	2,211	850	677	396	209	57	18	X	2.10
		신 흥 동	5,394	1,644	1,631	1,079	777	203	45	15	2.34
		도 원 동	1,821	661	581	357	167	37	16	X	2.12
		울 목 동	1,630	746	461	260	121	34	6	X	1.94
		동 인천 동	2,611	1,152	779	389	211	62	15	X	1.97
		북 성 동	1,276	460	445	213	105	43	10	X	2.12
		송 월 동	1,916	611	629	362	222	68	20	X	2.25
			36,577	11,735	14,159	5,859	3,232	1,114	358	120	2.16
강 화 · 옹 진	강 화 군		27,827	8,095	11,179	4,624	2,605	932	294	98	2.22
		강 화 읍	8,790	2,471	3,027	1,677	1,104	388	96	27	2.35
		선 원 면	2,889	668	1,077	567	417	112	41	7	2.44
		불 은 면	1,991	552	908	323	125	54	22	7	2.15
		길 상 면	2,790	789	1,169	453	230	106	28	15	2.23
		화 도 면	1,908	609	834	256	135	44	21	9	2.09
		양 도 면	1,704	480	805	246	101	53	14	5	2.12
		내 가 면	1,335	451	602	159	91	22	6	X	1.99
		하 점 면	1,694	504	757	275	102	25	22	9	2.11
		양 사 면	812	249	382	107	51	16	X	X	2.03
		송 해 면	1,326	380	563	214	96	47	21	5	2.21
		교 동 면	1,273	407	565	175	77	32	12	5	2.07
		삼 산 면	975	385	354	138	64	25	8	X	2.00
		서 도 면	340	150	136	34	12	8	X	X	1.90
	옹 진 군		8,750	3,640	2,980	1,235	627	182	64	22	1.97
		북 도 면	973	413	378	111	43	19	5	X	1.87
		연 평 면	747	300	247	111	59	26	X	X	2.04
		백 령 면	1,888	706	574	344	191	49	19	5	2.14
		대 청 면	654	272	253	81	29	12	5	X	1.90
		덕 적 면	929	425	335	99	46	17	7	X	1.85
		자 월 면	632	254	245	83	38	5	X	X	1.90
		영 흥 면	2,927	1,270	948	406	221	54	20	8	1.95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 통계 (<https://kosis.kr/>)

주¹⁾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제공

주²⁾ : X로 제공된 자료(5 미만 자료)는 2.5로 계산

주³⁾ : 가구당 평균가구원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가구당 평균가구원수 = $(\sum \text{가구원수별 가구수}_n \times n) \div \text{전체 가구수}$ (여기서, n = 가구원수)

[표 71] 인천광역시 시군구별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2017년~2021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0.51	0.53	0.55	0.57	0.57
중구	0.60	0.61	0.60	0.55	0.56
동구	0.42	0.44	0.47	0.44	0.44
연수구	0.50	0.50	0.51	0.52	0.54
남동구	0.52	0.55	0.55	0.58	0.58
부평구	0.41	0.43	0.45	0.48	0.52
계양구	0.84	0.92	1.02	1.08	1.02
서구	0.43	0.44	0.45	0.46	0.49
미추홀구	0.48	0.49	0.41	0.42	0.42
강화군	0.50	0.50	1.21	1.07	0.76
옹진군	0.55	0.57	0.58	0.61	0.62

출처 :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 통계(<https://kosis.kr/>)

[표 72]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구분	평균가구원수 ¹⁾²⁾ (인/세대) (J)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³⁾ (대/인) (K)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 (대/세대) (J)×(K)
2017	2.80	0.50	1.39
2018	2.80	0.50	1.40
2019	2.80	0.51	1.42
2020	2.80	0.52	1.45
2021	2.80	0.54	1.50

주¹⁾ : 평균가구원수 읍면동별 자료는 5년 단위로 배포되어 최신 자료인 2020년으로 일괄 적용함주²⁾ : 1가구(호실)를 1세대로 가정주³⁾ : 송도국제도시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수구 자료 사용(읍면동 자료 부재)

[표 73] 인천광역시 영종국제도시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구분	평균가구원수 ¹⁾²⁾ (인/세대) (L)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³⁾ (대/인) (M)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 (대/세대) (L)×(M)
2017	2.19	0.60	1.31
2018	2.19	0.61	1.33
2019	2.19	0.60	1.31
2020	2.19	0.55	1.20
2021	2.19	0.56	1.23

주¹⁾ : 평균가구원수 읍면동별 자료는 5년 단위로 배포되어 최신 자료인 2020년으로 일괄 적용함주²⁾ : 1가구(호실)를 1세대로 가정주³⁾ : 영종국제도시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중구 자료 사용(읍면동 자료 부재)

[표 74]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구분	평균가구원수 ¹⁾²⁾ (인/세대) (N)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³⁾ (대/인) (O)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 (대/세대) (N)×(O)
2017	2.84	0.43	1.23
2018	2.84	0.44	1.26
2019	2.84	0.45	1.28
2020	2.84	0.46	1.32
2021	2.84	0.49	1.38

주¹⁾ : 평균가구원수 읍면동별 자료는 5년 단위로 배포되어 최신 자료인 2020년으로 일괄 적용함주²⁾ : 1가구(호실)를 1세대로 가정주³⁾ : 청라국제도시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서구 자료 사용(읍면동 자료 부재)

[표 75] 인천광역시 동구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구분	평균가구원수 ¹⁾²⁾ (인/세대) (P)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대/인) (Q)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 (대/세대) (P)×(Q)
2017	2.35	0.42	0.99
2018	2.35	0.44	1.04
2019	2.35	0.47	1.10
2020	2.35	0.44	1.03
2021	2.35	0.44	1.04

주¹⁾ : 평균가구원수 읍면동별 자료는 5년 단위로 배포되어 최신 자료인 2020년으로 일괄 적용함주²⁾ : 1가구(호실)를 1세대로 가정

[표 76] 인천광역시 중구(용유,운서,영종동 제외)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구분	평균가구원수 ¹⁾²⁾ (인/세대) (R)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대/인) (S)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 (대/세대) (R)×(S)
2017	2.16	0.60	1.29
2018	2.16	0.61	1.31
2019	2.16	0.60	1.29
2020	2.16	0.55	1.18
2021	2.16	0.56	1.21

주¹⁾ : 평균가구원수 읍면동별 자료는 5년 단위로 배포되어 최신 자료인 2020년으로 일괄 적용함주²⁾ : 1가구(호실)를 1세대로 가정

[표 77] 인천광역시 강화군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구분	평균가구원수 ¹⁾²⁾ (인/세대) (T)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대/인) (U)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 (대/세대) (T)×(U)
2017	2.22	0.50	1.11
2018	2.22	0.50	1.10
2019	2.22	1.21	2.69
2020	2.22	1.07	2.37
2021	2.22	0.76	1.68

주¹⁾ : 평균가구원수 읍면동별 자료는 5년 단위로 배포되어 최신 자료인 2020년으로 일괄 적용함주²⁾ : 1가구(호실)를 1세대로 가정

[표 78] 인천광역시 옹진군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구분	평균가구원수 ¹⁾²⁾ (인/세대) (V)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대/인) (W)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 (대/세대) (V)×(W)
2017	1.97	0.55	1.08
2018	1.97	0.57	1.13
2019	1.97	0.58	1.15
2020	1.97	0.61	1.20
2021	1.97	0.62	1.23

주¹⁾ : 평균가구원수 읍면동별 자료는 5년 단위로 배포되어 최신 자료인 2020년으로 일괄 적용함주²⁾ : 1가구(호실)를 1세대로 가정

2.1.4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안)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은 앞서 제시한 분석 결과의 요약임

[표 79] 인천광역시 세대당 전용면적 및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연평균)

구분	세대당 전용면적(㎡)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대/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오피스텔
최솟값	75.10	51.20	1.49	1.03
평균값	75.26	52.56	1.53	1.06
최댓값	75.30	53.80	1.56	1.08

[표 80] 인천광역시 신도시, 구도심, 강화·옹진 지역의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추정치(2017년~2021년, 연평균)

(단위 : 대/세대)

구분	신도시	구도심	강화·옹진
최솟값	1.20	0.99	1.08 (1.08) ¹⁾
평균값	1.33	1.15	1.48 (1.21) ¹⁾
최댓값	1.50	1.31	2.69 (1.68) ¹⁾

주¹⁾ : 괄호 안에 제시된 값은 다른 연도와 큰 차이를 보이는 2019~2020년 강화군의 값을 제외한 통계값임

- 기준(안)은 ‘지역 비구분(안)’과 ‘지역 구분(안)’ 각각 4가지씩, 총 8개의 대안을 제시함
- 이들 중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역 구분 1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단, 야간 주차대수가 등록대수보다 낮게 조사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할 필요가 있음

1) 지역 비구분(안)

- 지역을 구분하지 않은 4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음
- 75㎡ 초과시에는 1.50대/세대 또는 1.55대/세대를 적용하였으며, 50㎡ 초과 75㎡ 미만시에는 1.00~1.10대/세대, 50㎡ 이하인 경우 1.00대/세대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표 8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 지역 비구분(안)

(단위 : 대/세대)

구 분	지역 비구분 1안	지역 비구분 2안	지역 비구분 3안	지역 비구분 4안
75㎡ 초과 ~	1.50 이상	1.50 이상	1.55 이상	1.55 이상
50㎡ 초과 ~ 75㎡ 미만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1.20 이상
~50㎡ 이하	세대당 1대 이상			

2) 지역 구분(안)

- 지역을 구분한 4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음
- 신도시의 경우 75㎡ 초과시에는 1.50대/세대 또는 1.55대/세대를 적용하였으며, 50㎡ 초과 75㎡ 미만시에는 1.30대/세대, 50㎡ 이하인 경우 1.00대/세대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 구도심의 경우 75㎡ 초과시에는 1.30대/세대 또는 1.35대/세대를 적용하였으며, 50㎡ 초과 75㎡ 미만시에는 1.20대/세대, 50㎡ 이하인 경우 1.00대/세대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 강화·옹진의 경우 구도심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표 8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 지역 구분(안)

(단위 : 대/세대)

구 분	지역 구분 1안	지역 구분 2안	지역 구분 3안	지역 구분 4안
75㎡ 초과 ~	신 도시 : 1.50	신 도시 : 1.50	신 도시 : 1.55	신 도시 : 1.55
	구 도 심 : 1.30	구 도 심 : 1.35	구 도 심 : 1.30	구 도 심 : 1.30
50㎡ 초과 ~ 75㎡ 미만	신 도시 : 1.30	신 도시 : 1.30	신 도시 : 1.30	신 도시 : 1.30
	구 도 심 : 1.20	구 도 심 : 1.20	구 도 심 : 1.20	구 도 심 : 1.20
~50㎡ 이하	세대당 1대 이상	세대당 1대 이상	세대당 1대 이상	세대당 1대 이상

주 : 강화·옹진의 경우 구도심의 기준을 적용

2.2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수립

2.2.1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검토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 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임
- 충전시설의 종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최대 출력 40킬로와트 이상)과 완속충전시설(최대 출력 40킬로와트 미만)으로 두 종류임
-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함
- 일부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 및 내부 규정을 통해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법정기준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및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지자체(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검토함

1) 법정 기준

- 충전시설의 수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기축시설은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표 83]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법적 설치 기준(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표 84]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법적 설치 기준(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8. 5] [대통령령 제31667호, 2021. 5. 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 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본조신설 2016. 6. 30.][제목개정 2022. 1. 25.]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충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숙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 25.]

[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2. 1. 25.>]

2) 지자체별 기준

①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의 경우, 조례와 내부 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조례 제10조에 의거 충전시설의 수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하며, 급속충전시설은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함
 - 기축시설의 경우 충전시설의 수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를 기준으로 하며, 급속충전시설은 설치 의무가 없음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총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기축 외의 시설인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해야 함
- 인천광역시 내부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충전시설의 수는 주차장 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함
 -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하며, 규정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수가 1기 이하일지라도 1기 이상 의무 설치함

[표 85]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1.] [인천광역시조례 제6849호, 2022. 4. 21.,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2.4.2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2.4.21.>

제8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제목개정 2022.4.21]

1.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시설

2.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 시설

3. 시행령 제18조의5제3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충전시설 설치수량)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하고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제목개정 2022.4.21.]

②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의 기축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4.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기축 외의 시설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2.4.21.>

②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의 경우, 조례와 내부 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조례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 제7조의4제2항에 의거 충전시설의 수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해당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함

- 기축시설의 경우충전시설의 수를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를 기준으로 함

○ 서울특별시 내부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충전시설의 수는 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함
- 급속 충전시설은 1기 이상 설치하도록 함

[표 86]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407호, 2022. 4.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친환경차량과), 02-2133-3642

제7조의2(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3.28, 2022.4.28>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3.28, 2022.4.28>

1.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전용주차구역의 수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5.][제목개정 2022.4.28]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4.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28>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개정 2022.4.28>

④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4.28>

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2.4.28>

[본조신설 2017.1.5.][제목개정 2022.4.28]

③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의 경우, 조례와 내부 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되 기숙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함
- 부산광역시 내부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주차면수 100대를 초과하는 시설물의 경우, 주차대수 200대 당 1기를 확보하도록 하며, 급속충전시설은 1기 이상으로 함
 - 심의시 전체 충전시설을 급속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기준 충전시설 외에 콘센트형 이동식 충전기를 포함하여 4%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

[표 87]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6.] [부산광역시조례 제6729호, 2022. 7. 6.,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제6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① 영 제18조의5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7.6.>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건축주(「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시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7.6.>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7.6.>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7.6.>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7.6.>

제8조(충전시설의 수량 등) ① 영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7.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의 경우, 조례와 내부 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되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함
 -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인 경우 1기 이상 설치하며, 기축시설은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음
- 대구광역시 내부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총 주차대수 100대당 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도록 함
 - 급속충전시설은 1기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계획주차면에서 제외함
 - 화재 등을 고려하여 최상층 배치하도록 함

[표 88]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11.] [대구광역시조례 제5817호, 2022. 10. 11., 전부개정]

대구광역시

제9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① 영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구청장·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같은 시설의 건축주(「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건축 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충전시설의 수량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9조제1항1호의 시설 중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1기 이상

2. 제9조제1항2호의 시설: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3.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9조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지자체별 기준 검토 결과

- 지자체별 조례 및 내부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를 고려하여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대구광역시와 같이 급속충전주차면은 계획주차면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표 89] 지자체별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검토 결과

구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인천	법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단, 기축시설은 100분의 2) -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5 이상 급속충전시설로 설치 -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기축 외의 시설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설치
	내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 -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설치 -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 급속충전 시설 설치
서울	법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단, 기축시설은 100분의 2) -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 급속충전시설 설치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여 계산
	내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단위구획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 설치 - 급속 충전시설은 1기 이상 설치
부산	법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단, 기축시설은 100분의 2)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여 계산
	내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면수 100대를 초과하는 시설물의 경우, 주차대수 200대당 1기를 확보하도록 하며, 급속 1기 이상 확보 - 심의시 전체 전기차 충전시설을 급속으로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 충전시설 외에 콘센트형 이동식 충전기를 포함하여 4%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대구	법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단, 기축시설은 100분의 2) -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설치 - 기축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에서 제외
	내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대당 1기 이상 설치 필요하며, 급속충전시설은 1기 이상 설치 - 급속충전주차면은 계획주차면에서 제외 - 화재 등을 고려하여 최상층 배치

자료 : 법적 기준의 경우 지자체 조례 참고, 내부 기준의 경우 각 지자체 내부자료 참고

2.2.2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현황 검토

-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현황 검토 결과, 2022년 9월 기준 전기자동차는 22,375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111,549대로 나타남

[표 90]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현황(2018년~2022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자동차	1,577,607	1,635,323	1,676,442	1,675,405	1,707,044
환경친화적 자동차	31,149	42,797	63,956	99,866	133,924
전기	1,284	2,598	5,366	12,820	22,375
하이브리드 (휘발유+전기)	28,969	39,286	55,335	79,854	101,490
하이브리드 (경유+전기)	8	83	2,461	6,460	9,365
하이브리드 (LPG+전기)	849	791	755	695	658
하이브리드 (CNG+전기)	39	39	39	37	36
하이브리드 (LNG+전기)	0	0	0	0	0
그 외	1,546,458	1,592,526	1,612,486	1,575,539	1,573,120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자동차등록현황보고 (<https://stat.molit.go.kr/>)

주 : 등록 대수는 12월 기준이며, 2022년은 9월 기준임

2.2.3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수립을 위한 분석

-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전체 차량 등록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향후 5년간 전체 차량 등록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 예측값’ 분석을 실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량과 증가율 분석 결과,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2022년 평균 증가율은 44.27%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전체 등록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표 9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량, 증가율 및 전체 중 비율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증가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31,149	42,797	63,956	99,866	133,924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량	-	11,648	21,159	35,910	34,058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	37.39%	49.44%	56.15%	34.10%	44.27%
전체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1.97%	2.62%	3.81%	5.96%	7.85%	-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자동차등록현황보고 (<https://stat.moli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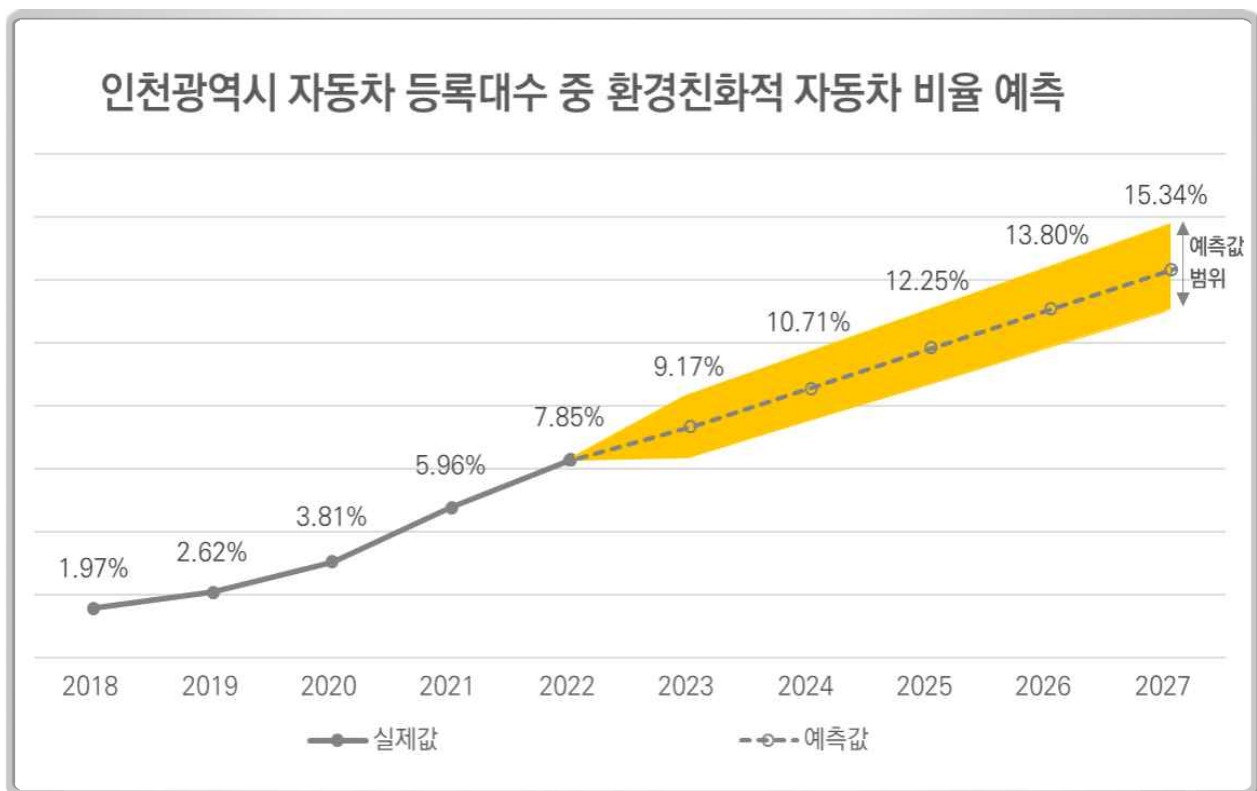
주 : 등록 대수는 12월 기준이며, 2022년은 9월 기준임

- 지수평활법(ETS) 알고리즘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5년 후인 2027년까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비율을 예측하였음
- 1년 후인 2023년은 9.17%, 3년 후인 2025년은 12.25%, 5년 후인 2027년은 15.34%로 연평균 1.50%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표 92] 인천광역시 장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비율 예측(2022년~2027년)

날짜	실제 값 ¹⁾	예측값	예측값 범위 (하한~상한)
2018	1.97%	-	-
2019	2.62%	-	-
2020	3.81%	-	-
2021	5.96%	-	-
2022	7.85%	7.85%	7.85% ~ 7.85%
2023	-	9.17%	8.03% ~ 10.31%
2024	-	10.71%	9.44% ~ 11.98%
2025	-	12.25%	10.86% ~ 13.65%
2026	-	13.80%	12.29% ~ 15.31%
2027	-	15.34%	13.73% ~ 16.96%

주¹⁾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비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 100(%)



[그림 21] 인천광역시 장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비율 예측(2022년~2027년)

2.2.4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안)

- 인천광역시 및 타 지자체의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검토 결과와 인천광역시의 장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비율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안)은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의 장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비율 예측치를 고려하여 조례 제정 3년 뒤의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는 10%,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는 4%로 하며, 조례 제정 5년 뒤의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는 15%,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는 6%로 함
- 급속충전시설은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며, 급속충전주차면은 계획주차면에서 제외하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증감 추세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를 통해 매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표 9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안)

구분	현재기준	조례 제정 후 3년뒤	조례 제정 후 5년뒤	비고
신축시설	5%	10%	15%	매년 조사·분석 연 구를 통해 결정
기축시설	2%	4%	6%	
공통사항	-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 급속충전시설로 설치 -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기축 외의 시설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설치 - 급속충전주차면은 계획주차면에서 제외			

2.3 공동주택 자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 수립

2.3.1 공동주택 자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 검토

-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 중 하나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제외)은 법정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완화 또는 강화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의 경우, 모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하여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의 20%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표 9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자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3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 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표 9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자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35
행정안전부(주민생활환경과), 02-2100-4261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② 삭제 <2017. 12. 29.>
-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별표 1]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3.2 자전거 관련 현황 검토

1) 자전거 보유 대수 현황

- 시·도별 자전거 보유 대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의 자전거 보유 가구 비율은 30%로 17위이며, 가구당 평균 자전거 보유대수는 2.07로 1위임
- 자전거 보유 대수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이어 3위이며, 4위인 부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임

[표 96] 시·도별 자전거 보유 대수 현황(2016년)

(단위: 가구, %, 대/가구, 대)

구분	가구수	자전거보유가구 비율	가구당 평균 자전거 보유대수	자전거 대수
전국	19,560,603	36.3	1.59	11,268,816
서울	3,914,820	45.0	1.81	3,184,054
부산	1,348,315	34.0	1.38	633,708
대구	937,573	37.0	1.51	525,041
인천	1,066,297	30.0	2.07	661,104
광주	573,181	40.0	1.60	366,836
대전	588,395	46.0	1.65	447,180
울산	434,058	45.0	1.56	303,841
세종	76,419	45.0	1.89	64,956

(단위: 가구, %, 대/가구, 대)

구분	가구수	자전거보유가구 비율	가구당 평균 자전거 보유대수	자전거 대수
경기	4,537,581	39.8	1.61	2,898,035
강원	611,578	32.6	1.53	342,484
충북	613,004	34.0	1.68	306,502
충남	816,247	31.9	1.32	435,332
전북	726,572	32.9	1.63	364,570
전남	730,743	36.6	1.44	367,447
경북	1,078,479	32.4	1.53	531,536
경남	1,282,617	31.4	1.72	589,311
제주	224,724	32.5	1.38	101,126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2016), 국가자전거 교통정책지원사업 조사자료

주 : 가구수 × 자전거보유율 × 가구당 평균보유대수로 산출

2)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

- 시·도별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의 자전거 주차장 주차가능대수는 26,269대로 전체 시·도 중 6위 수준이며, 지역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 비해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97] 시·도별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2021년)

(단위: 개소, 대)

구분	개소 (순위)	주차가능대수 (순위)
전국	34,938 (-)	667,560 (-)
서울	4,805 (2)	130,940 (2)
부산	1,034 (13)	14,304 (13)
대구	1,517 (7)	20,717 (8)
<u>인천</u>	<u>1,127 (11)</u>	<u>26,269 (6)</u>
광주	1,712 (6)	20,476 (9)
대전	821 (16)	9,160 (16)

(단위: 개소, 대)

구분	개소 (순위)	주차가능대수 (순위)
울산	241 (17)	5,271 (17)
세종	1,170 (10)	13,639 (14)
경기	8,783 (1)	219,463 (1)
강원	1,806 (5)	22,623 (7)
충북	1,029 (14)	12,967 (15)
충남	3,074 (4)	51,257 (3)
전북	968 (15)	27,944 (5)
전남	1,049 (12)	14,353 (12)
경북	1,326 (8)	17,977 (10)
경남	3,234 (3)	44,880 (4)
제주	1,242 (9)	15,320 (11)

자료 : 출처 :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 통계(<https://kosis.kr/>)

3)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 지자체별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서 공영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공영자전거 보유 대수는 3,214대로 전체 시·도 기준 4위이며, 지역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 비해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98] 시·군·구별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2021년)

(단위: 개소, 대, 건)

구분		운영방식	터미널/주차장 설치	자전거 보유	대여실적
전국 서울특별시	소계	-	4,374	64,069	40,618,339
	소계	-	2,612	41,553	32,089,647
	본청	위탁	2,600	40,500	32,053,367
	성동구	위탁	2	195	5,344

(단위: 개소, 대, 건)

구분		운영방식	터미널/주차장 설치	자전거 보유	대여실적	
		광진구	위탁	1	30	350
		노원구	위탁	3	187	8,464
		금천구	직영	1	143	6,167
		관악구	위탁	1	74	13,200
		서초구	직영	1	24	801
		강남구	직영	2	319	1,283
		강동구	위탁	1	81	671
	부산광역시	소계	-	7	874	77,129
		본청	위탁	4	702	57,994
		금정구	직영	1	42	2,854
		연제구	직영	1	45	660
		수영구	직영	1	85	15,621
	대구광역시	소계	-	40	357	31,515
		본청	직영	39	310	28,816
		서구	직영	1	47	2,699
	인천광역시	소계	-	1	3,214	386,847
		연수구	위탁	-	2,100	381,663
		남동구	위탁	1	114	5,184
		서구	위탁	-	1,000	-
	광주광역시	소계	-	96	804	29,910
		본청	직영	52	369	28,156
		동구	직영	13	20	48
		서구	직영/위탁	19	155	760
		남구	직영/위탁	1	62	-
		북구	직영/위탁	2	116	312
		광산구	직영/위탁	9	82	634
	대전광역시	소계	-	261	2,305	522,716
		본청	직영	261	2,305	522,716
	울산광역시	소계	-	3	493	18,349
		중구	위탁	3	493	18,349
	세종특별자치시	소계	-	604	3,540	1,614,185

(단위: 개소, 대, 전)

구분			운영방식	터미널/주차장 설치	자전거 보유	대여실적
		세종	위탁	604	3,540	1,614,185
	경기도	소계	-	128	1,574	802,200
		수원시	직영/위탁	3	217	15,244
		부천시	직영	5	168	928
		안산시	위탁	106	400	729,764
		평택시	직영	2	146	21,214
		시흥시	직영	2	293	4,228
		오산시	직영	2	190	16,222
		과천시	위탁	8	160	14,600
		강원도	소계	-	3	149
	화천군		직영	1	93	-
	고성군		직영	2	56	8,348
	충청북도	소계	-	28	130	1,073
		충주시	직영	26	110	833
		괴산군	직영	2	20	240
	충청남도	소계	-	37	930	165,043
		공주시	직영	21	243	95,528
		아산시	위탁	14	567	65,138
		당진시	직영	1	70	4,377
		서천군	직영	1	50	-
	전라북도	소계	-	24	509	36,177
		전주시	위탁	7	284	15,951
		군산시	직영/위탁	10	100	14,145
		익산시	직영/위탁	2	100	5,741
		정읍시	직영	5	20	340
		완주군	직영	-	5	-
	전라남도	소계	-	103	1,116	399,530
		여수시	직영	46	400	168,378
		순천시	직영	52	424	214,250
		나주시	위탁	1	55	4,951
		광양시	직영	2	75	3,027

(단위: 개소, 대, 건)

구분			운영방식	터미널/주차장 설치	자전거 보유	대여실적	
		담양군	직영	-	41	1,320	
		고흥군	위탁	1	21	3,600	
		강진군	위탁	1	100	4,004	
	경상북도	소계	-	90	1,686	145,538	
		포항시	위탁	4	53	11,617	
		안동시	위탁	1	140	12,473	
		구미시	직영	11	514	27,161	
		영주시	직영	7	230	16,593	
		영천시	위탁	21	124	3,200	
		상주시	직영	-	120	534	
		문경시	직영	1	50	-	
		경산시	위탁	33	225	29,439	
		영덕군	직영	1	30	200	
		예천군	직영	11	200	44,321	
		경상남도	소계	-	326	4,789	4,283,320
			창원시	위탁	285	4,248	4,129,817
			진주시	위탁	3	210	20,818
	김해시		직영	11	105	34,118	
	양산시		직영	11	110	12,248	
	거창군		직영	16	116	86,319	
	제주특별자치도	소계	-	11	46	6,812	
		제주시	위탁	11	46	6,812	

자료 : 출처 :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 통계(<https://kosis.kr/>)

2.3.3 공동주택 자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 수립 방향

- 공동주택 자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 및 자전거 관련 현황 검토 결과, 현재 기준인 '법정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역별 특성(자전거 보유 대수, 공유형 이동수단 보유 여부, 자전거도로 현황 등)에 맞춰 조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지식산업센터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공장'으로 구분되어 유발교통량을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무시설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음
- 발생교통량이나 주차수요가 실제 공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99] 현재 지식산업센터 교통영향평가 시행 기준

용 도	첨두시 발생교통량 100대 기준 연면적
공 장	75,000㎡

3.1 지식산업센터 교통 현황 분석

- 지식산업센터의 교통 현황 분석을 위해 최근 수립된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발생교통량과 발생교통량 100대 기준 연면적, 법정 대비 주차수요 및 계획 비율을 산정하였음
- 첨두시 발생교통량 100대 기준 연면적 산정 결과, 연면적 평균값(30,228㎡)과 교통영향평가 대상 최소 기준은 2.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0] 지식산업센터의 발생교통량과 및 첨두시 발생교통량 100대 기준 연면적

구 분	연면적(㎡)	발생 교통량			첨두시발생교통량 100대 기준 연면적
		유입	유출	계	
하남미사내지식산업센터	86,591.12	289	18	307	28,206
문정도시개발사업내 지식산업센터-1	143,439.96	130	327	457	31,387
문정도시개발사업내 지식산업센터-2	175,858.86	174	414	588	29,908
안양시 동안구 지식산업센터-1	94,081.50	191	18	209	45,015
안양시 동안구 지식산업센터-2	63,837.44	49	26	75	32,079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70,614.24	216	12	228	30,97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1	64,771.48	201	12	213	30,409

구 분	연면적(㎡)	발생교통량			첨두시발생교통량 100대 기준 연면적
		유입	유출	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2	84,333.91	252	24	276	30,556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56,543.44	44	185	229	24,691
동탄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1	62,980.57	231	14	245	25,706
동탄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2	57,764.13	62	206	268	21,554
용인 서천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73,873.61	51	178	229	32,259
평 균 값	86,224.19	167	120	287	30,228

자료 : 교통영향평가 협회 내부 자료(2015-2017년 교통영향평가서 참조)

- 법정 대비 주차수요 및 계획 비율 산정 결과, 실제 주차수요가 법정 주차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법정 대비 실제 주차수요 비율 평균 :148.0%), 이를 통해 현행 주차장법이나 지자체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보다 매우 높은 주차수요를 발생시킴을 알 수 있음

[표 101] 지식산업센터의 법정 대비 주차 수요 비율 및 계획 비율

구 분	발생교통량			법정대비 수요비율(%)	법정대비 계획비율(%)
	법정	수요	계획		
하남미사내지식산업센터	319	449	615	140.8	192.8
문정도시개발사업내 지식산업센터-1	604	941	1,048	155.8	173.5
문정도시개발사업내 지식산업센터-2	754	1,130	1,300	149.9	172.4
안양시 동안구 지식산업센터-1	463	571	754	123.3	162.9
안양시 동안구 지식산업센터-2	370	374	400	111.9	161.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92	446	539	152.7	184.6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1	260	408	456	156.9	175.4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2	351	497	504	141.6	143.6

구 분	발생교통량			법정대비 수요비율(%)	법정대비 계획비율(%)
	법정	수요	계획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219	387	401	176.7	183.1
동탄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1	247	392	495	158.7	200.4
동탄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2	239	377	462	157.7	193.3
용인 서천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273	409	493	149.8	180.6
평 균 값	358	526	625	148.0	177.0

자료 : 교통영향평가 협회 내부 자료(2015-2017년 교통영향평가서 참조)

3.2 지식산업센터 교통개선대책 사례 검토

- 앞서 다룬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차장 조례 또는 교통영향평가 조례를 강화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별도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안양시의 경우,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별표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다음과 같이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102]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설치 기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4. 8.]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303호, 2021. 4. 8., 일부개정]

경기도 안양시(교통정책과), 031-8045-2294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설물의 신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0. 15>

[별표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7조 관련) <개정 2017. 1. 5>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150㎡당 1대)

- 군포시의 경우,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 및 ‘별표 2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및 설치 기준’에 다음과 같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103]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설치 기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7. 1.]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887호, 2021. 7. 1., 일부개정]

경기도 군포시(차량관리과), 031-390-0856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영 제6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제20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150㎡당 1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왕시의 경우,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별표 5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다음과 같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104]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설치 기준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9. 29.]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785호, 2020. 9. 29., 전부개정]

경기도 의왕시(교통행정과)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150㎡당 1대)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및 '별표 2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다음과 같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105]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교통영향평가 시행 기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경기도조례 제7427호, 2022. 4. 21., 제정]

경기도, 031-8030-3752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2조에 따라 대상사업지가 둘 이상의 권역에 걸치는 경우 상위권역의 범위를 따른다.

[별표 1]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권역(제2조 관련)

권역	권역별 세부지역
1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구역의 읍, 동 지역
2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구역의 면 지역, 법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읍, 동 지역
3	법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면 지역

※ '교통권역'은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이며, '도시교통권역'은 교통권역을 제외한 시·군을 말한다.

[별표 2]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1권역	2권역	3권역
14)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건축 연면적 56,25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연면적 12,500㎡ 이상	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건축 연면적 18,750㎡ 이상

3.3 인천광역시 지식산업센터 교통개선대책

- 앞서 산정한 지식산업센터 교통 현황 분석에서 첨두시 발생교통량 100대 기준 연면적 30,228㎡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기준인 75,000㎡는 물론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기준(안)인 56,000㎡에도 맞지 않음
- 이에, 인천광역시는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의 사례와 같이 주차장 조례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및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106]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 4. 21.] [인천광역시조례 제6850호, 2022. 4. 21.,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5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5-27, 2016-09-26>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시설면적/70㎡)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시설면적/134㎡)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한다.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3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신축하는 제3호 시설물(숙박시설 제외)에 한한다.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시 설 물	설 치 기 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인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 + {(시설면적 - 150㎡)/100㎡}]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인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인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 + {(시설면적 -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하고,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호실)를 1세대로 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호실)를 1세대로 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홀의 수×15)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 (타석의 수÷0.7)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정원/10명) 관람장: 정원 70명당 1대 (정원/70명)	골프장: 1홀당 10대 (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비고 생략>

- 지식산업센터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위 조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표 107] 인천광역시 지식산업센터 교통개선대책 수립(안)

시 설 물	설 치 기 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7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4. 집배송시설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 집배송시설은 택배 사업의 급격한 성장과 활성화와 함께 도시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전의 창고시설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유발교통량은 창고시설에 따라 산정하고 있어, 별도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는 「주차장법 시행령」 상의 기준인 시설면적 400㎡당 1대를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하고 있음

[표 10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창고시설 주차장 설치 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4.1 집배송시설 교통 현황 분석

- 집배송시설의 교통 현황 분석을 위해 최근 수립된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집배송시설의 교통유발원단위를 검토하였음
- 교통유발원단위 검토 결과, 현재의 기준인 시설면적 400㎡당 1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표 109] 인천광역시 집배송시설 교통유발원단위

범 위		평 균	
		상근/상주	방문/이용
상근/상주	방문/이용	상근/상주	방문/이용
5.21~6.84	0.92~1.04	5.57	0.99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주 : 인천광역시 내 10개 물류센터 조사치임

4.2 집배송시설 교통개선대책 사례 검토

- 앞서 다룬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집배송시설 교통개선대책 사례를 검토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주차장 설치 기준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검토한 지자체들 모두 창고시설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뿐, 집배송시설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음
- 검토한 지자체 중 7개의 지자체(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남양주시)는 「주차장법 시행령」 상의 기준인 시설면적 400㎡당 1대를 기준으로 함
- 5개 지자체(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평택시)는 「주차장법 시행령」 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시설면적 300㎡당 1대를 기준으로 함
-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시설면적 267㎡당 1대를 기준으로 하며, 울산광역시는 유사 수준인 266㎡당 1대로 함
- 경기도 수원시의 기준은 시설면적 210㎡당 1대로 검토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임

[표 110] 타 지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창고시설 주차장 설치 기준 검토 결과

구 분	주차장 설치 기준
서울특별시	시설면적 267㎡당 1대
부산광역시	시설면적 400㎡당 1대
대구광역시	시설면적 400㎡당 1대
울산광역시	시설면적 266㎡당 1대
대전광역시	시설면적 400㎡당 1대
세종특별자치시	시설면적 400㎡당 1대
경기도 수원시	시설면적 210㎡당 1대
경기도 고양시	시설면적 300㎡당 1대
경기도 용인시	시설면적 400㎡당 1대
경기도 성남시	시설면적 300㎡당 1대
경기도 화성시	시설면적 400㎡당 1대
경기도 부천시	시설면적 267㎡당 1대
경기도 남양주시	시설면적 400㎡당 1대
경기도 안산시	시설면적 300㎡당 1대
경기도 안양시	시설면적 300㎡당 1대
경기도 평택시	시설면적 300㎡당 1대

-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대형 집배송시설이 도시경관 및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높이 40m 이상의 창고시설 대상)하여 시행 중임

4.3 인천광역시 집배송시설 교통개선대책

- 집배송시설 교통 현황 분석 결과와 교통개선대책 사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집배송시설 교통개선대책 수립(안)’을 작성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기존 주차장 설치 기준과 같이 시설물의 용도를 집배송시설로 구분하지 않고 창고시설로 유지하되, 창고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례와 같이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하여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하도록 함
- 대안은 총 4가지임. 이들 중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보다는 높은 기준이지만 보수적 대안인 3안(시설면적 250㎡당 1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더 많은 시설물 분석을 통해 최종 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표 111] 인천광역시 집배송시설 교통개선대책 수립(안)

구분	창고시설 주차장 설치 기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1안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2안	시설면적 225㎡당 1대(시설면적/225㎡)	시설면적 225㎡당 1대(시설면적/225㎡)
3안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4안	시설면적 267㎡당 1대(시설면적/267㎡)	시설면적 267㎡당 1대(시설면적/267㎡)

<공통사항>

- 창고시설 중 집배송시설의 경우 건축심의 기준을 **‘높이 40m 이상’**으로 대상으로 강화하여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제 7 장

교통영향평가 운영 개선방안

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운영 현황
2.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운영 현황
3.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운영 개선방안

제7장 | 교통영향평가 운영 개선방안

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운영 현황

1.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 교통영향평가 운영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먼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은 15개조와 부칙 1개조로 이루어져 있음
- 해당 운영세칙은 목적, 위원회 역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무,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검토·보완, 회의, 서면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위원회 참석위원의 심의안건검토, 평가서의 설명, 간사, 서기로 구성되어 있음

[표 112]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2019.07)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6 제12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역할) 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 및 심의한다.

②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검토 및 심의한다.

③ 인천광역시의 주요 교통현안 및 정책 사항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총회를 소집하여 교통분야 전문가 중 호선하며, 총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영 제13조의6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영 제13조의6 규정에 의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보고서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안의결
2. 수정의결
3. 보완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가 보고서 등 심의안건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위원을 해당보고서 심의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대해 사전에 성실히 검토하여 교통개선대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은 교통영향평가수립지침(국토해양부 고시된 지침으로 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의한 사전검토와 제29조제2항제9호에 의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초과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경우 공정하고 성실하게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보고서 용역수행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자격으로 의결 또는 의견을 낼 수 없다.

제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시 지침과 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영향평가 작성방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수립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의 승인부서에 교통영향평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시장 또는 위원장은 협의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관련기관·부서와 사전검토 위원들에게 송부하여 사전검토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보완)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행자를 통해 사전검토보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영 제13조의6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지침 제2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의할 때에는 서면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지명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되, 서면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소위원회는 3인 또는 4인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을 송부 받은 위원은 7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 받은 심의결과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장 또는 승인관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참석위원의 심의안건 검토) 위원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사전검토의견 보완내용을 미리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심의개최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서의 설명) ① 위원회 회의시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책임자가 각 호와 같이 자료를 준비하여 평가서 내용(보완자료 포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사업지 및 주변 교통시설 등을 포함하는 위치도
 2. 사업지구 내의 사업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도면
 3. 사업지구 내의 시설 또는 구간별 상세도(필요시)
 4. 종합개선안도
 5. 사전검토 또는 심의의결 보완지시에 대한 수용·미수용 여부 및 사유 등
- ② 평가책임자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평가서 작성 참여기술자 대리 참석할 수 있으나 그 불참사유와 대리 참석자를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의 도면의 경우, 방위, 축척, 지형 등을 표시하고 도로는 현황 및 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수립책임자는 사업지의 지형이 경사가 심하거나 평지가 아닌 특수한 여건을 가진 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지인 경우로서 위원회 회의시 현장상황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또는 비디오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심의대상인 보고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관리 및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의사일정의 통보
2. 회의시 의결내용의 정리 및 관리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5조(서기)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과 회의내용을 정리하고 관련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 업무담당자가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1.2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 인천광역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접수 전 담당부서와 보고서 사전협의를 실시하며, 이후 보고서 접수, 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사전검토의견 조회·보완요청, 사전검토의견서 검토·접수, 심의 개최, 심의결과 통보, 심의의결내용 협의, 심의의결보완서 접수, 완료 단계로 이루어짐

사업추진 절차	교통분야 세부 수행업무
접수전 보고서 사전협의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사전 협의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접수	· 사업승인기관에 보고서 접수 - 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자치구)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사업승인기관(자치구)→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사전검토의견 조회	· 사전검토 의견조회, 협의 - 시, 구 관련부서, 심의위원
사전검토의견 보완요청	· 사전검토의견 회신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사업승인기관(자치구)→사업시행자
사전검토보완서 검토	· 사전검토의견 반영내용 수록 · 평가대행자↔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협의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 심의일 10일 전 접수 - 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자치구)→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 교통영향평가 내용 브리핑 및 심의위원 질의 답변
심의결과 통보	· 심의의결내용 수령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사업승인기관(자치구)→사업시행자
심의의결내용 협의	· 심의조건 반영내용 수록 · 평가대행자↔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협의
심의의결보완서 접수	· 심의의결보완서 접수 - 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자치구)→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완료)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개선필요사항 등) 통보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사업승인기관(자치구)→사업시행자

주 : 상기 일정은 각 행정기관 행정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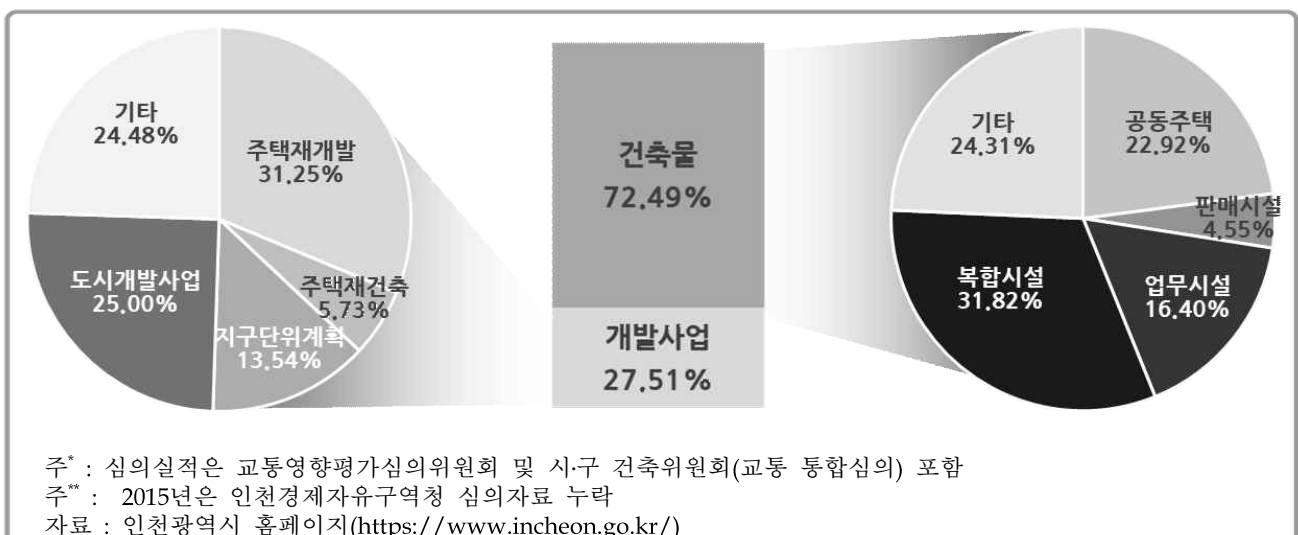
[그림 22]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1.3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크게 본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치구 소속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본청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자치구 : 건축위원회(교통 통합)
- 본청의 심의위원회 운영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심의위원회 개최는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함. 단, 심의건수 및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조정됨
 - 심의위원회는 2022년 기준 당연직 5명을 포함한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심의위원회 운영은 당연직을 포함하여 심의위원 6~9명 참석을 기본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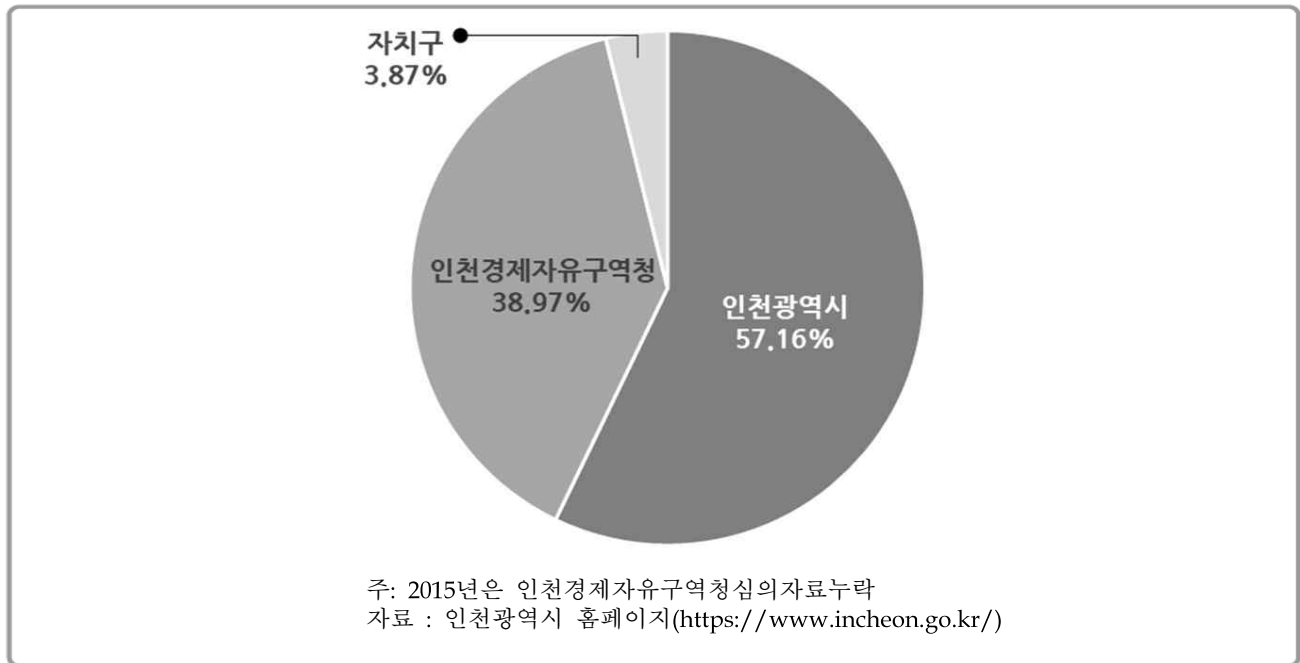
1.4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실적

- 2011년 이후 10년간 총 698건, 연평균 약 70건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이뤄짐
-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는 전체 심의실적의 약 28%를,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는 약 72%를 차지하고 있음
- 개발사업 심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은 전체 개발사업 건수의 약 37%를 차지함
-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중 2가지 이상 용도가 복합된 복합시설은 전체 건축물의 약 32%, 공동주택은 약 23%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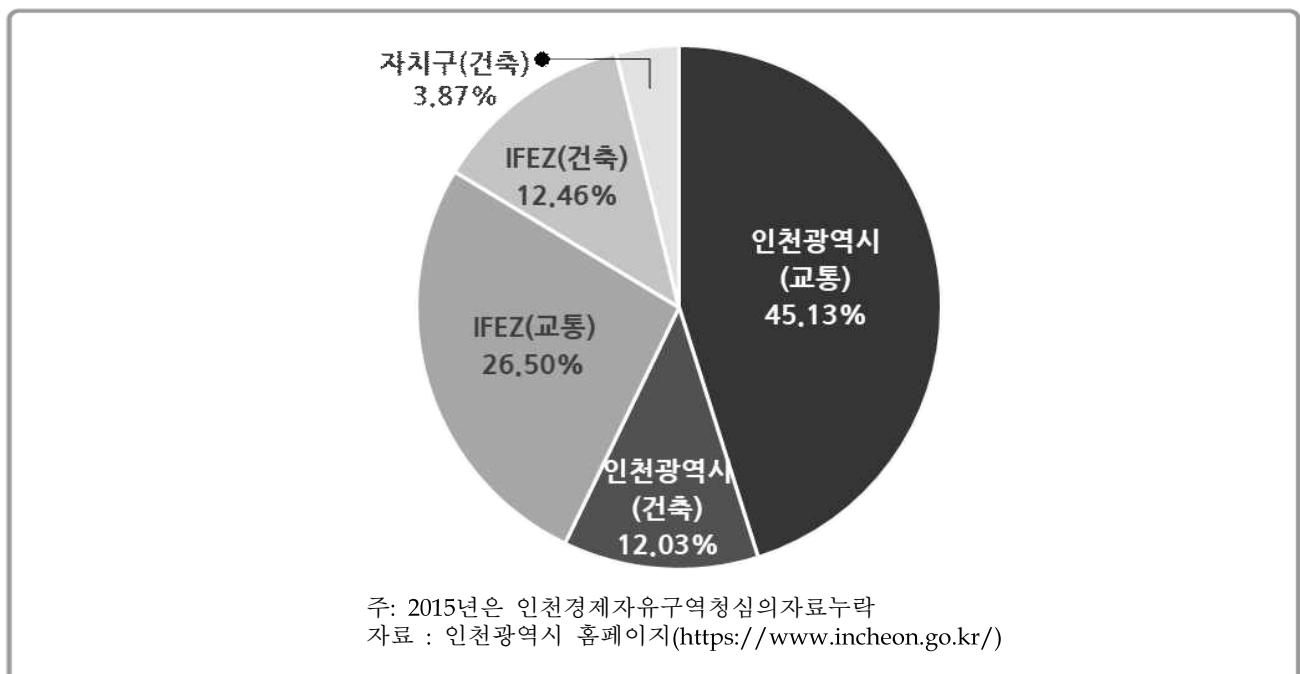


[그림 23] 인천광역시 개발사업 및 건축물 종류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에서 심의된 교통영향평가는 전체 심의실적의 61%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9%를 차지함
- 심의위원회별 구성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전체의 약 45%를 차지함



[그림 24] 인천광역시 심의기관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그림 25] 인천광역시 심의위원회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실적(2011년~2020년)

2.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운영 현황

2.1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2.1.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와 달리 ‘접수 전 보고서 사전협의’ 단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사업추진 절차상 처리 기간에 대해 일부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절차상 제출 서류 및 해당 서류의 수량이 명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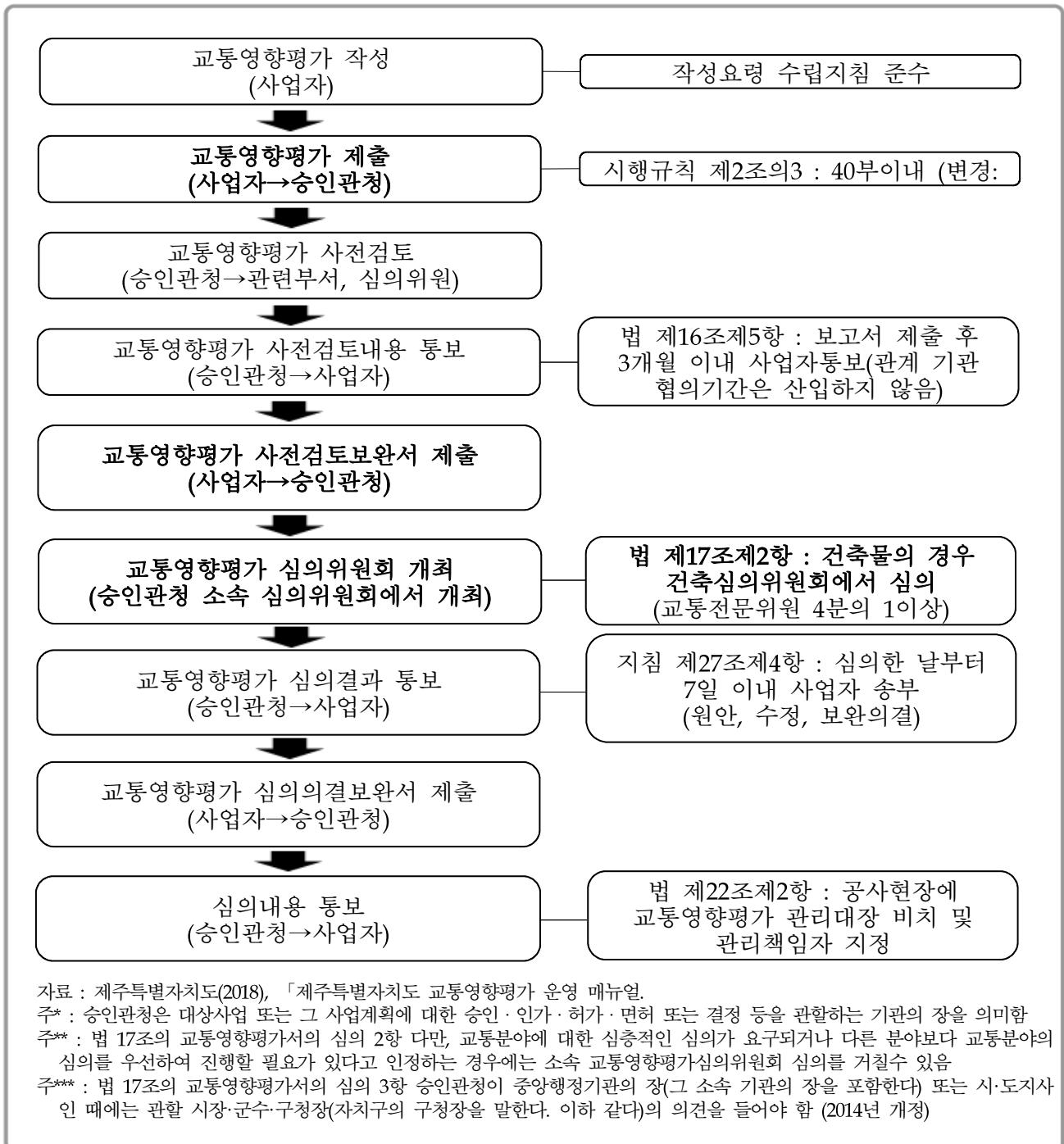
사업추진 절차		세부 절차
1	교통영향평가 심의접수 ↓(즉시)	사업자 → 승인관청(승인부서) 제출서류 : 교통영향평가서(본보고서)
2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 ↓	승인관청(승인부서) → 서울시 교통정책과 제출서류 : 교통영향평가서(본보고서 13부) ※ 유관부서(시 및 자치구 등)는 업체에서 별도 배포
3	사전검토&의견조희 ↓(10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 시, 구 관련부서, 심의위원 사전검토서류 : 교통영향평가서(본보고서)
4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보완요청 (사전검토의견 송부)	서울시 교통정책과 → 승인관청(승인부서) → 사업자
5	사전검토의견의 보완사항 검토 ↓	서울시 교통정책과 ↔ 사업자(수립대행업체)
6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 심의상정 ↓	사업자 → 승인관청(승인부서) → 서울시 교통정책과 제출서류 : 사전검토보완서(10부) ※ 심의일 10일전 금요일에 접수된 건에 한해 심의상정 2건 이상일 경우 심의 개최
7	심의개최 공문발송 ↓	서울시 교통정책과 → 승인관청(승인부서) → 사업자
8	심의 발표자료 제출 ↓	사업자 → 서울시 교통정책과 제출서류 : 발표자료 PPT, 종합개선안도 PDF
9	심의위원회 개최 ↓	• 매주 월요일 • 발표자 : 교통기술사, 배석: 건축분야 책임자
10	심의결과 통보 ↓	서울시 교통정책과 → 승인관청(승인부서) → 사업자
11	심의의결서 제출 ↓	사업자 → 승인관청(승인부서) → 서울시 교통정책과 제출서류 : 심의의결서(6부), 통합CD 1개 ※ 심의결과 수정의결 :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협의후 제출 심의결과 보완 :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협의후 재심의(6번)
12	심의결과 통보	• 서울시 교통정책과 → 승인관청(승인부서) → 사업자 • 서울시 교통정책과 → 관련부서

[그림 2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2.1.2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와 달리 ‘접수 전 보고서 사전협의’ 단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단계별 법령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절차상 처리기간이나 제출 서류 및 제출서류의 수량이 일부 명시되어 있음



[그림 27]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2.1.3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검토 결과

-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의 경우, ‘접수 전 보고서 사전협의’ 단계가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당 절차가 명시되어있지 않음
 - 서울특별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의 경우, 사업추진 절차상 처리 기간에 대해 일부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절차상 제출 서류 및 해당 서류의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음

2.2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타 시·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지자체가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외로 서울특별시는 매주 1회, 경기도는 매월 2~3회, 강원도의 경우 격주 1회,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3] 타 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실태(2021년 기준)

구 분	개최횟수	심의담당부서	비고
서울특별시	매주 1회	교통정책과	심의안전 2건 이상 개최
부산광역시	매월 1회	공공교통정책과	
대구광역시	매월 1회	교통정책과	
광주광역시	매월 1회	교통정책과	
대전광역시	매월 1회	공공교통정책과	
울산광역시	매월 1회	교통기획과	
경기도	매월 2~3회	광역교통정책과	심의 시 안전 최대 2건으로 제한
강원도	격주 1회	교통과	
경상북도	매월 1회	교통정책과	
경상남도	매월 1회	교통정책과	
충청북도	비정기적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비정기적	교통정책과	
전라북도	매월 1회	도로교통과	
전라남도	매월 1회	도로교통과	심의안전3건 이상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매월 1회	교통정책과	

자료 : 각 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담당부서 확인

2.3 전국 7대 도시 본청 및 자치구(군)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전국 7대 도시 본청 및 자치구(군)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검토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7대 도시 중 서울특별시만 자치구(군)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4] 전국 7대 도시 본청 및 자치구(군)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7대 도시	자치구(군)수	자치구(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여부	본청 건축교통통합심의 운영현황	자치구 건축교통통합심의 운영현황
서울	25개구	3개구 (서초,성북,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영향평가는 분리 심의 ※ 자치구 대상 중 21층 이상, 10만㎡ 이상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은 분리해서 본청에서 심의 건축은 자치구 심의
인천	8개구, 2개군 (옹진 및 강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영향평가는 분리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구(남동/연수/부평)는 자치구 자체 통합심의 나머지 구(군)은 분리해서 교통은 본청에서 심의 건축은 자치구 심의
부산	15개구, 1개군 (기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영향평가는 분리 심의 ※ 자치구 대상 중 21층 이상, 10만㎡ 이상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 자체 통합심의
대구	7개구, 1개군 (달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영향평가는 분리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은 분리해서 본청에서 심의 건축은 자치구 심의
대전	5개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영향평가는 분리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은 분리해서 본청에서 심의 건축은 자치구 심의
울산	4개구, 1개군 (울주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영향평가는 분리 심의 ※ 자치구 대상 중 21층 이상, 10만㎡ 이상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 자체 통합심의
광주	5개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영향평가는 분리 심의 ※ 자치구 대상 중 21층 이상, 10만㎡ 이상, 공동주택 600세대 이상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 자체 통합심의

자료 : 각 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담당부서 확인

3.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운영 개선방안

3.1 교통영향평가 행정 인력 정비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기준 마련 후 심의 건수 증가로 인한 행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증가한 행정 수요에 걸맞게 조직과 인력이 정비되어야 함

[표 115]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조정 시, 교통영향평가 건수 변화 예측

(단위 : 건)

구 분	교통영향평가 예측 건수		
	도시교통촉진법 상 기준 적용시 (現인천시 기준) (A)	인천시 기준(안) 적용시 (B)	증가량 (B-A)
개발사업 ¹⁾	50.0	63.0	▲ 13.0
건축물 ²⁾	24.5	35.2	▲ 10.8

주¹⁾ :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 기준으로 예측한 값임

주²⁾ : 건축물의 경우, 최근 3년간 신축허가 받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연평균 예측 값을 산출한 것임

주³⁾ : 산출근거는 4장 참고

- 또한, 구(군)의 교통영향평가 업무 진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ex. 심의 표준 매뉴얼, 업무 매뉴얼)과 워크샵 등의 대책이 필요함

3.2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표준 매뉴얼 작성

- 2012년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표준 매뉴얼」을 배포함
- 배포 이래로 지난 10여 년간 교통 패러다임은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여러 여건이 변화하였으나, 해당 매뉴얼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음
- 현 시점에서 매뉴얼에 있는 과거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인천광역시 지역적, 공간적 특성 및 교통 여건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매뉴얼을 만들어 구·군의 교통영향평가 행정 담당자들에게 배포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되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앞서 제시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각 구·군의 특성에 맞춰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기존 매뉴얼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11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표준 매뉴얼 구성

구 분	내 용		
심의내용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가로소통과 교차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주변지역 특성, 교통량 등 상황에 따라 개선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 정성적 항목 제외• 정량적 항목중 심의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대상으로 기준 설정
		진·출입동선체계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도로	
		교통안전 및 교통정온화	
		주 차	
심의절차 및 방법	표준 매뉴얼 첨부 참조		

자료 : 국토교통부(201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표준 매뉴얼」.

3.3 교통성 검토의 활용

- 교통영향평가 기준 외에도 인천광역시의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군에서는 교통성 검토를 적극 활용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지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한 경우, 교통성 검토를 요청하여 어린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용인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일 시 교통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음

[표 117] 용인시 교통성 검토 기준

용도	검토수준	대상 기준	비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포함)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60,000㎡ 이상	오피스텔1실은 주택1세대로 함
	교통성 검토	150세대 이상	
제1종근린생활시설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25,000㎡ 이상	
	교통성 검토	연면적 5,000㎡ 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15,000㎡ 이상	
	교통성 검토	연면적 5,000㎡ 이상	

용도	검토수준	대상 기준	비고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15,000㎡ 이상	
	교통성 검토	연면적 5,000㎡ 이상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15,000㎡ 이상	
	교통성 검토	연면적 5,000㎡ 이상	
판매시설 (상점)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11,000㎡ 이상	
	교통성 검토	연면적 5,000㎡ 이상	
판매시설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6,000㎡ 이상	
	교통성 검토	연면적 5,000㎡ 이상	
의료시설 (병원)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25,000㎡ 이상	
	교통성 검토	연면적 10,000㎡ 이상	
교육연구시설 (학원, 연구소)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37,000㎡ 이상	
	교통성 검토	연면적 20,000㎡ 이상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40,000㎡ 이상	
	교통성 검토	연면적 30,000㎡ 이상 또는 200객실 이상	
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55,000㎡ 이상	
	교통성 검토	연면적 30,000㎡ 이상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13,000㎡ 이상	
	교통성 검토	연면적 8,000㎡ 이상	
자동차관련시설 (매매장)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	
	교통성 검토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5,000㎡ 이상	
건축위원회 대상(소위원회 제외)			교통성 검토
기타 교통유발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포함)			교통성 검토

자료 : 경기연구원(2021),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기준 개선방안」.

주 : 향후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3.4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공사 차량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음
- 제·개정된 정책(안전속도 5030 등)으로 인해 공사 차량이 간선도로 이용을 기피하고 생활도로를 이용하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교통소통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사업지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이루어져야 마땅하며, 인천광역시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함
- 하남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학로 안전을 위한 건축공사장 교통처리계획 사전협의제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118] 하남시 건축공사장 교통처리계획 사전협의제 추진계획

- 통학로 안전을 위한 -

건축공사장 교통처리계획 사전협의제 추진계획

「학교 인근 공사현장 등의 통학로 안전대책(공사장 보행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학교 인근 건축공사장의 인허가 절차 시 구체적인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을 제출받아 협의·관리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자 함.

I

개요

- 관내 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해 주민불편 민원(덤프트럭 통행, 건축자재 보도 적치, 불법주차) 및 어린이 통학 안전 위협 발생
- 건축허가 착공신고시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을 先 수립토록 하여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안전 확보
- ※ 대상 : 인근 학교 출입문에서 보행거리 500m 이내인 연면적 3,000㎡ 이상 중·대형 건축공사장

II

교통처리계획 사전협의제 추진계획

1

협의대상

- 인근 학교(유치원 포함) 학교출입문에서 보행거리 500m이내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중·대형 건축공사장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임을 감안하여 교통처리계획 심사대상을 학교출입문으로부터 보행거리 500m로 결정
 - 3,0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경우 차량 출입이 적어 실효성이 낮으므로 건축허가 시 안내 및 점검 계도
- 그 외 관계기관(관할경찰서 및 교육청 등)에서 교통처리계획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공사장(규모 제한 없음)

2 협의절차

- 건축인허가(사업계획승인) 시 관련기관(부서) 협의 후 허가조건 부여
 - 협의기관(부서) : 인천시청(교통정책과, 도로과 등), 관할경찰서(경비교통과), 인천광역시 교육청(안전총괄과 등)
 - 허가조건 : 착공신고 시 공사 피해방지계획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제출
 - 공사 단계별(공정별) 교통처리계획
 - 자재 및 폐기물 등 적치 보관계획
 - 가설사무실(현장사무실, 안전교육장, 품질시험실) 설치 계획
- 착공신고 시 교통처리계획 협의
 - 협의기관(부서) : 상기 협의기관(부서)와 동일
 - 협의방법 : 착공신고에 따른 관련기관(부서) 협의로 진행
 - 심사 중점내용
 - 공사차량 우회도로 이용 가능여부(학교, 주거지 이동 경로 최소한 허용)
 - 안전요원(신호수) 배치 위치 및 인원수 적정여부
 - 레미콘, 덤프트럭, 펌프카, 크레인 등 대형 공사차량 등교 시간대 출입 제한
 - 레미콘, 덤프트럭, 펌프카, 크레인 등 대형 공사차량 출입 시 실질적인 대기장소 확보 및 도로점용 계획 포함여부
 - 레미콘, 덤프트럭, 펌프카, 크레인 등 대형 공사차량 도로점용 시 안전요원(신호수) 및 안전한 통행 유도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적정여부
 - 레미콘 타설, 사토 반출 시 인근 학교를 우회하는 대형차량동선 적정여부
 - 레미콘 타설, 사토 반출 등 차량 출입이 많은 공정은 시작 전 인근 학교에 공사 일정 협의 계획 포함여부
 - 자재 및 폐기물 등 적치(보관) 위치 적정여부
 - 가설사무실 설치 위치 적정여부(도로, 공원 등 설치금지) 등
-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 수시 및 정기 점검
 - 교통처리계획 미이행 시 공사중지 등 엄중 조치

III 기대효과

- 학교 인근 공사현장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으로 안전등교길 조성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현재시점 성과	향후 예상되는 성과
교통소통	출근시간대 대형차량 운행	출근시간대 대형차량 운행 금지	교통정체 해소
어린이 안전	어린이 통학로 대형차량 운행	어린이 통학로 대형차량 운행 금지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
불법주차	주변 불법주정차 발생	불법주정차 미발생	주민민원 해소
기타	공사자재 주변 보도적치	보도적치 금지	주민 보행권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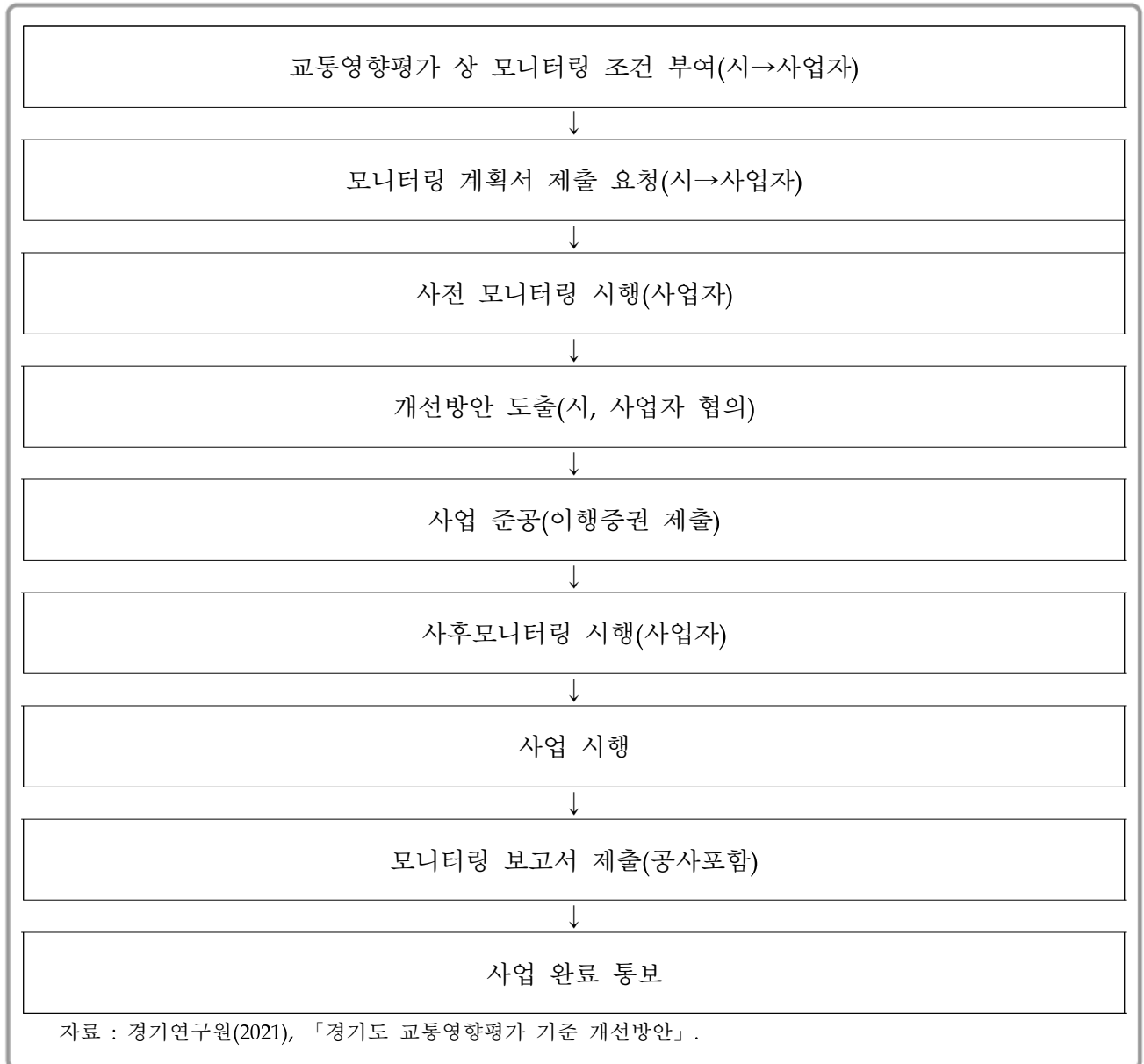
자료 : 하남시 내부자료

3.5 이행확인평가 용역의 역할 제고

- 교통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전 본 평가, 사업 준공 전 이행확인평가로 구분되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 단계별로 다른 교통영향평가 업체가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현재는 단계별로 평가용역을 사업주와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사업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평가에 제약이 있음
- 이에 본 평가에 대한 검증 및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확인평가는 사업주와 직접 계약하기보다 ①인천광역시 또는 ②교통영향평가협회가 계약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행정 수요의 증가를 고려했을 때 교통영향평가협회를 통한 계약 시스템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본 평가 시점에서 이행확인평가 용역비를 협회에 별도로 공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면서도 평가 결과에 대한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방안이라 판단됨
- 이행확인평가의 경우 변경신고가 빈번함. 이에 변경신고와 이행확인평가를 함께 승인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

3.6 준공 후 시설 개선 예산 확보

-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사업에 충실히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준공 후 1년이 된 시점에 해당 건물과 관련된 통행량 조사를 통해 계획(안)과 실측치의 오차를 분석하고, 통행원단위의 정확도를 포함한 계획(안)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준공 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일부 불가피한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이때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준공 후 1년까지는 건설 주체가 변경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조례 제정 이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현재 사후관리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 등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할 필요가 있음
- 사후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그림 28] 고양시 교통영향평가 사후 모니터링 절차

3.7 교통영향평가 관련 정보 관리 방안

-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2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은 교통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며, 시스템 내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60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표 119]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 2022. 3. 24.] [법률 제17975호, 2021. 3.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정비계획) 044-201-3807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교통영향평가) 044-201-3807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07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1. 3. 23.>

4.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1.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보완
2. 교통영향평가 기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
3.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조사 등
4. 각종 교통영향평가의 효과 분석 연구
5.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결과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조사 자료를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3. 28.]

[제목개정 2015. 7. 24.]

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고,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1.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급
2.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
3. 제32조의3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 3. 28.]

[제목개정 2021. 3. 23.]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7. 24., 2021. 3. 23.>

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

-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는 사업별 사업정보(사업개요, 보고서 정보), 교차로정보(기하구조현황, 교차로교통량, 가로교통량), 원단위정보(주차발생원단위, 유사시설원단위, 활동인구원단위, 유출입분포비, 교통수단분담률)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하지만, 교차로 정보 및 원단위 정보는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보고서 또한 조회할 수 없어 실제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음
- 조사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내에서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시 개방된 정보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주요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만의 독자적 시스템 운영시, 시설별로 신뢰도 높은 통행원단위와 현실적인 주차원단위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개방된 자료를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기대됨

3.6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지구단위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공공 기여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교통영향평가 또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
- 교통영향평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부분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높이의 완화, 용적률의 완화, 건폐율의 완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교통분야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를 참고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표 120]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사례 1(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②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7.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완화

- 개발사업자 또는 건축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건축법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침의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시장 또는 승인권자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개발사업자 또는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입안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당해 구역의 교통영향평가와 T.I.P(지구교통개선)사업 및 기타교통 관련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의 시설 변경 등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 동지침에 의하여 규정된 공개공지보다 많은 공개공지를 설치하였거나 건축물 내 공개공간을 설치·확보한 경우
- 대지의 합병, 2개 이상의 대지에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등 대지의 범위 등이 변경되어 결정 내용 및 결정도가 불합리한 경우
-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 지침의 규제사항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설계상의 좋은 착상으로 사전심의를 득할 경우
- 당해 획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건축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 또는 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기의 규정 이외에 사업승인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계획에 관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기본방향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지침을 완화할 수 있으며, 그 완화된 지침에 따라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시 반영하여야 함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가. 높이의 완화

- 건축주 또는 개발사업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건축물높이 = 당해지역 건축물 높이×(1+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건축주 또는 개발사업자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 건축물높이 = 당해지역 건축물 높이+(당해지역 건축물 높이×초과하는 대지내 공개공지(공간)면적÷대지면적)이내 ◦개방감과 통풍권 확보를 위한 피로티 부분,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공중정원(대피공간)부분으로서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해당면적에 대하여 최고높이 규정 완화 ◦단지 내 각 건축물 높이(층수)를 달리하여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최고높이(층수)는 주용도의 각 건축물의 가중평균높이(층수) 규정 적용(해당면적 범위 내, 최고높이의 20% 범위 내)

나. 용적률의 완화 등

- 건축주 또는 개발사업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용적률 = 당해지역 용적률×[1+(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이내
- 건축주 또는 개발사업자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 용적률 = 당해지역 용적률+(당해지역 용적률×초과하는 대지내 공개공지(공간)면적÷대지면적)이내
 ◦ 획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로 설치·조성하여 무상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상한 용적률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6항과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
- 상업·업무시설용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계획용적률의 7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함(다만, 그 이하로 계획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함)
- 국제 설계 현상 등 현상설계 당선작으로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계획 용적률의 2% 범위 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경우 : 계획용적률의 3% 범위 내
 - 「건축법」 제66조(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구 분	1 등급	2등급	3등급
용적률	3%	2%	1%

다. 건폐율의 완화

- 건축주 또는 개발사업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건폐율 = 당해지역 건폐율×(1+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자료 : 인천광역시(2022),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표 121]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사례 2(송도랜드마크시티 지구단위계획)

③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기준

- 다음과 같은 경우 종전의 대지면적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함 - 확정측량에 따라 대지 면적이 감소할 경우
 - 건축 인·허가 및 개별블록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가감속차로 설치, 버스베이의 설치, 자전거도로 설치 등에 따른 도로 기부채납으로 인한 대지 면적이 감소할 경우

자료 : 인천광역시(2021), 송도랜드마크시티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표 122]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사례 3(시가지 조성단지 지구단위계획)

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 A-9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A-1 ~ A-3 : 기준용적률 170%, 허용용적률 175% A-4 ~ A-6 : 기준용적률 130%, 허용용적률 135% A-7 ~ A-9 : 기준용적률 155%, 허용용적률 160%
		높이 ²⁾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A-1 ~ A-2 : 최고층수 25층 이하, 초고층 및 고층 각각 30% 이상 A-3 : 최고층수 20층 이하, 초고층 및 고층 각각 30% 이상 A-4 ~ A-6 : 최고층수 15층 이하, 고층 및 중층 각각 30% 이상 A-7 ~ A-9 : 최고층수 20층 이하, 초고층 및 중층 각각 30% 이상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지표 참조 수로변 및 공원변에는 타워형의 주호동을 조성할 것 학교 인접구역에는 주호동을 직각(측벽이 접하게 배치)으로 배치하거나 타워형으로 배치 초고층구역 및 중층구역에는 각각 초고층 타워형과 중층이하의 주호동을 배치할 것 ·입면차폐도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로변 30m 이하 폭 25m 이상 도로변, 공원·학교변 : 35m 이하 주보행동선의 결절부에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 터, 휴게시설 등)을 집단배치할 것(최소 3개 이상, 권장) 근린생활시설등은 단지 진출입구부에 배치할 것(권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호동의 입면적 3,000㎡ 이하일 것 주호동의 층수가 20층을 초과할 경우 타워형(탑상형)으로 할 것 옥상부분에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함 주호동의 형태·입면상의 변화(저층·중층·고층부 및 옥상부의 변화)를 줄 것(권장, 인센티브 부여) 주호동을 경사형 지붕으로 할 경우, 인접한 주거단지와 물매를 통일할 것(권장) ·필로티를 조성할 경우 2개층 이상으로 할 것(권장) 부대복리시설은 평지붕을 지양할 것(권장)

※ '권장사항' 또는 '권장'으로 표기되지 않은 계획내용은 규제(의무)사항임. 이하 같다.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Incentive)>

인센티브 가산 조항	인센티브(%)	비 고
조호동의 형태·입면변화	2	수평적, 수직적 형태·입면의 변화 부여시
단지경계부의 조정 및 담장처리	1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 참조
주보행통로의 조성	1	지정된 위치에 주보행통로(8m 이상) 조성시
옥외생활공간비율	1	일정기준(25%) 이상일 경우

- 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인센티브 가산조항 준수시)
- 2) 초고층(20-25층), 고층(12-15층), 중층(10층 이하)
- 3) 타워형(탑상형, 단변과 장변의 비 1/3 이상. 이하 같다)에 한하여 25층까지 허용하며, 판상형은 20층이하로 건축할 것

자료 : 인천광역시(2021), 「시가지 조성단지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표 123]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사례 4(지식정보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마.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완화

- 건축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들어 건축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침의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장 또는 승인권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입안자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당해 구역의 교통영향평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시설의 변경 등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 동 지침에 의하여 규정된 공개공지보다 많은 공개공지를 설치하였거나 건축물 내 공개공간을 설치한 경우
 - 대지의 합병, 2개 이상의 대지(분할 가능한 각각의 획지 포함)에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등 대지의 범위 등이 변경되어 결정 내용 및 결정도가 불합리한 경우
 - 현상설계에 의하여 지침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 규제사항을 완화하여도 지구단위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설계상의 좋은 착상이 있는 경우
 -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건축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 또는 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규정 이외에 사업 승인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계획에 관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기본방향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지침을 완화 할 수 있으며, 그 완화된 지침에 따라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배치부문 중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도록 계획하고, 세부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 해당 허가 또는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료 : 인천광역시(2021), 「지식정보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표 124]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사례 5(첨단산업클러스터(B)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2) 공동주택용지(Rc)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Rc-1 ~ Rc-4	용 도	허용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 시설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포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단, 인천광역시의 심의기준 및 송도국제도시내 별도의 심의기준 운영시 심의기준 우선)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00%, 허용용적률 : 205%
	높이		◦ 130m 이하
	수용호수 (세대)		◦ Rc1:1,153세대, Rc2:1,406세대, Rc3:1,516세대, Rc4:1,834세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Rc2 119세대, Rc4 154세대 포함) - 획지별 수용호수(세대)를 초과할 수 없음
	배 치		◦ 학교와 인접 구간에 배치되는 주호동의 층수는 교육시설의 일조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15층 이하의 중저층 배치를 권장하며, 광로2-20호선 및 문화공원 연접부 구간은 30층 이상의 고층으로 배치함 ◦ 공원변 및 학교와 인접한 구간 : 타워형 배치 또는 주호동 직각 배치 ◦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소음저감 방안을 검토반영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 지하에 설치 권장 조경면적 : 40%이상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층 이상 : 타워형/탑상형(단변과 장변의 비 1:1.5 이하) 권장 (단, 통경확보 또는 개방감을 고려한 공간구조로 계획된 판상형도 가능) 주호동의 형태 : 입면상 차별화된 외관 조성 필로티를 조성 시 : 2개층 이상으로 함(권장)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탑상형 : 경량구조를 이용한 조형적 디자인 권장 판상형 : 경사지붕 또는 곡선형 지붕(인접단지와 물매 통일 권장)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 되지 않도록 함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복리시설 : 주보행동선의 결절점에 가능한 집단배치하고 경사지붕 권장 어린이놀이터 : 분산배치하되,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도록 함 근린생활시설 : 단지내 진출입구변에 배치하고 경사지붕 권장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 가로변 9m 건축한계선 : 학교연접구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해 별도의 이격거리가 제시될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Incentive)>

인센티브 가산 조항		인센티브 (%)	비 고
국제 및 국내 현상설계 당선작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2등급	2	
	3등급	1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인센티브 가산조항 준수시)

자료 : 인천광역시(2021), 「첨단산업클러스터(B)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표 125]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사례 6(첨단산업클러스터(C)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2) 공동주택용지(Rc)(변경)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Rc1 Rc4 Rc5	용적률	기준용적률	◦ 175% 이하
		허용용적률	◦ 180% 이하
Rc6 Rc7	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 이하
		허용용적률	◦ 205% 이하
Rc8 Rc9	용적률	기준용적률	◦ 185% 이하
		허용용적률	◦ 190% 이하
Rc2 Rc3 Rc10 Rc11	용적률	기준용적률	◦ 155% 이하
		허용용적률	◦ 160% 이하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Incentive)>

인센티브 가산 조항		인센티브 (%)	비 고
국제 및 국내 현상설계 당선작		2	◦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3	◦ 정부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2등급	2	
	3등급	1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인센티브 가산조항 준수시)

자료 : 인천광역시(2021), 「첨단산업클러스터(C)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제 8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8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임
- 도시교통여건 변화, 건축물 유형 변화, 도시변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의거 모든 시·도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교통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경기도의 경우 각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대상 사업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타 지자체 사례 및 인천광역시 교통 여건(주차수요원단위 등)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천광역시 개발사업 및 단일용도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안)’을 작성·제시함
 - 개발사업의 경우, 타 지자체의 시행 사례를 준용하여 현재 기준의 100%를 강화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혁신도시 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등과 같이 인천광역시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사업은 기준에서 제외함
 -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은 교통유발량 100대/시를 기준으로 한 연면적 45,000㎡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외 용도는 수도권이자 연담도시로서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서울특별시의 기준을 준용하여, 현재 기준의 17%~100% 강화된 기준을 제시함
-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조정으로 인한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건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은 50건이고, 조정된 기준(안) 적용시 13건 증가한 63건이 될 것으로 예측됨
 - 건축물의 경우 최근 3년간 신축허가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은 연평균 24.5건이

고, 조정된 기준(안) 적용시 10.8건 증가한 35.2건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인천광역시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제시함
 - 조례(안)의 내용 및 범위는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 사례와 같이 ‘대상 사업 및 범위’의 개선에 집중함
 - 조례시행일은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조직과 인원의 정비가 이뤄진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익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조례에 대한 초기 접근은 보수적이면서도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작했다가, 다양한 의견(민원 등)을 접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함
-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한 건축물임에도 현행법상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특성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사례가 있음
- 이와 같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집배송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함
- 인천광역시 단일용도 건축물 중 심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용도이자 개발사업 중에서도 주요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인 공동주택의 교통개선대책 수립 방안 마련을 위해, 주차장·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인천광역시 내 공동주택 주차장 현황,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 등을 분석하여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8가지 대안을 제시함. 8가지 대안 중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역 구분 1안’의 적용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야간 주차대수가 등록대수보다 낮게 조사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할 필요가 있음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 지역 구분 1안]

- 75㎡초과~ : 신도시 1.50대/세대, 구도심 1.30대/세대
- 50㎡초과~75㎡미만 : 신도시 1.30대/세대, 구도심 1.20대/세대
- ~50㎡미만 : 세대당 1대 이상
- 강화·옹진외의 경우 구도심의 기준을 적용

- 인천광역시 및 타 지자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비교·분석하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현황 및 증가 추세를 분석하여 공

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안)을 제시함. 조례 제정 3년 후와 5년 후의 기준을 신축시설 및 기축시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매년 조사·분석 연구를 통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안)]

- 조례 제정 3년 후 : 신축시설 10%, 기축시설 4%
- 조례 제정 5년 후 : 신축시설 15%, 기축시설 6%
- ※ 매년 조사·분석 연구를 통해 결정
-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
-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기축 외영 시설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설치
- 급속충전주차면은 계획주차면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 자전거 보유 대수 현황,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여 공동주택 자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 수립 방향을 제시함. 현재 기준인 '법정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역별 특성(자동차 보유대수, 공유형 이동수단 보유 여부, 자전거도로 현황 등)에 맞춰 조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공장'으로 구분되어 유발교통량을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무시설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어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함
 - 지식산업센터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 교통개선대책 수립 사례를 검토하여, 지식산업센터 교통개선대책 수립(안)을 제시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지식산업센터의 기준인 시설면적 300㎡당 1대를 신설하는 것을 제시함
- 집배송시설은 택배 사업의 급격한 성장과 활성화와 함께 도시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전의 창고시설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발교통량은 창고시설에 따라 산정하고 있어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함
 - 집배송시설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 교통개선대책 수립 사례를 검토하여, 집배송시설 교통개선대책 수립(안) 4가지를 제시함
 - 제시한 4가지 대안 중 울산광역시보다는 높은 기준이지만 보수적 대안인 3안(시설면적 250㎡당 1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더 많은 시설물 분석을 통해 최종 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이고 타당한 교통영향평가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특성을 반영한 교통

영향평가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함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기준 수립 및 시행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전문 인력 충원, 교통영향평가 업무 및 심의 표준 매뉴얼 작성, 워크숍 시행 등의 필요성을 제시함
 - 인천광역시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첫 번째 절차에 ‘접수 전 보고서 사전협의’가 있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사전협의’ 절차 없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집중 심의하고 있음.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투자 활성화 측면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후 ‘접수 전 보고서 사전협의’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영향평가 기준 외에도 지역적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교통성 검토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사업지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함
 -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이행확인평가 용역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직접 혹은 교통영향평가협회를 통한 계약시스템 시행을 제안함
 - 준공 후 시설 개선 시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 예산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교통영향평가 사후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교통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내에서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상시 개방된 정보지원시스템을 운영을 제안함
 - 타 분야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공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 운영에 대한 적극 검토를 제안함
- 앞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 및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천광역시의 도시 특성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수립함
 - 미래 도시개발사업 및 시설물 설계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교통 안전을 증진시키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할 수 있음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통영향평가 운영체제(안) 수립을 통해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음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보고서 및 저널

- [1] 경기연구원(2021),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기준 개선방안」.
- [2] 국토교통부(2016),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등 연구」.
- [3] 국토교통부(2019),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4] 국토교통부(2021), 「교통영향평가 지침」.
- [5] 대전광역시(2013),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교통유발원단위 조사」.
- [6] 인천광역시(2021), 「시가지 조성단지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 [7] 인천광역시(2021), 「지식정보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 [8] 인천광역시(2021), 「첨단산업클러스터(B)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 [9] 인천광역시(2021), 「첨단산업클러스터(C)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 [10] 인천광역시(2022),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 [11] 한국교통연구원(2020), 「월간교통」 2020년 5월호, vol.267.

□ 보도자료 및 취득자료

- [1] 국토교통부(201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표준 매뉴얼」.
- [2] 제주특별자치도(2018),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운영 매뉴얼」.
- [3] 한국교통연구원(2016), 국가 자전거 교통정책지원사업 조사자료.

□ 웹사이트

- [1]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tia.molit.go.kr/>).
- [2] 교통영향평가협회 홈페이지(<https://www.katia.or.kr/>).
- [3]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4]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 [5]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
- [6]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